

현대일본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 국제학술회의

주 제 : 일본우익세력의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일 시 : 2008년 7월 4일(금) ~ 5일(토)

장 소 : 중국 청도 그랜드호텔

후 원 : 동북아역사재단

## 회 의 일 정

### I “일본정치세력의 보수화와 역사인식의 정치”

1. “2000년대 일본 보수정치인들의 정책성향 분석”  
이이범(국민대) · 진창수(세종연구소)
2. “일본 보수층의 정치노선의 심화”  
손기섭(부산외대)

### II “일본시민사회의 재편과 역사인식의 정치”

1. “Advocacy Groups in Japan and Politics of History”  
Tsujinaka Yutaka(츠쿠바대 교수)
2. “Civil Society with Government Intervention?”  
Robert Pekkanen(University of Washington)
3. “일본의 보수 우경화와 시민사회의 구도”  
정미애(국민대)

### III “일본의 보수화와 동아시아 국제관계”

1. “중국관점에서 본 일본의 보수화와 중일관계”  
Jin Xide(중국 사회과학원)
2. “일본의 동북아 평화론 :  
자유주의자와 현실주의자들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영준(국방대)

현대일본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 국제학술회의

### “일본정치세력의 보수화와 역사인식의 정치”

“2000년대 일본 보수정치인들의 정책성향 분석”  
이이범(국민대) · 진창수(세종연구소)

“일본 보수중의 정치노선의 심화”  
손기섭(부산외대)

## 1990년대 이후 일본정치 세력의 보수화 분석

진창수(세종연구소)

이이범(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I. 서론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정치세력이 보수화 내지 우경화 현상이 강화되었다고 하는 지적은 많다. 이러한 지적들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보수 내지 우경적인 정치세력의 가장 큰 저항 세력이었던 일본사회당이 몰락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2000년대 들어 제1야당으로 부상한 민주당조차 보수 성향이 강해, 일본의 정당정치의 구도는 압도적인 보수우위의 구도가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는 2001년 4월부터 집권한 고이즈미(小泉純一郎) 내각과 2006년 9월 뒤이은 아베(安倍晋三) 내각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에서 보수 내지 우경화된 성향들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유력한 근거로 자국의 이익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강한 일본을 추구하는 안보 및 외교 노선이 강화되었고, 평화헌법의 개정, 교육법개정, 방위청의 승격, 대북한 강경정책 등이 자주 인용되었다.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당시스템이 급격하게 재편되어 오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세대교체도 매우 활발했다. 1955년부터 제1야당이었던 사회당이 1990년대 중반 몰락했고, 1993년 총선을 전후하여 자민당이 분열하고 신당봄이 일었고, 통합 야당으로서 신진당이 일시적으로 크게 득세하였고, 1996년 결성된 민주당이 1998년 제1야당으로 등장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세대교체는 매우 활발했다. 또한 자민-민주 양당제가 등장한 2000년대 국정선거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세대교체는 매우 활발했다. 그 주요 원인은 기존 정당의 지지층이 약화되고 무당파층이 급증하면서 국정선거에서 자민당과 민주당의 의석수가 투표성향이 유동적인 무당파층의 지지 향배에 좌우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세대교체가 활발해지면서 일본 국회의원들의 정치 내지 정책 성향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정치세력들의 보수화 내지 우경화 현상이 강화된 배경에는 이러한 세대교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겠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일본 국회의원들은 구체적인 정치 내지 정책 성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겠다. 특히 개별 국회의원들의 진보-보수 수준을 측정하고, 국회의원들의 진보-보수 성향과 밀접하게 연계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정책들에 대한 개별 국회의원들의 정책성향을 파악한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정책성향을 분석하여 일

본 국회의원들의 보수화 내지 우경화 현상의 정책적 특성을 분석하겠다.

일본 국회의원들의 정치 내지 정책 성향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한 대표적인 사례는 1998년 蒲島 연구그룹에 의한 연구와 2003년 총선 이후 중참의원후보자 내지 당선자를 상대로 한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조사가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사히신문과 동경대학교 蒲島 연구그룹이 공동으로 조사한 국회의원들의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일본 국회의원들의 개별적인 정치 내지 정책 성향을 분석하겠다. 또한 개별 국회의원들의 보수화 내지 우경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개별 국회의원들의 정책활동과 관련한 모임들을 조사하여, 국회의원들의 보수화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보수 수준과 정책성향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일본 국회의원들의 보수 성향의 정책적인 특성을 파악하겠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일본 국회의원들의 세대교체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소선거구제가 도입되어 시행된 4차례의 중의원선거(1996, 2000, 2003, 2005) 당선자와 4차례의 참의원선거(1998, 2001, 2004, 2007) 당선자들의 연령대와 당선횟수의 분포 변화를 분석했다.

일본 국회의원들의 보수화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2003년 중의원선거, 2004년 참의원선거, 2005년 중의원선거 당선자들을 상대로, 개별 당선자들의 정치 및 정책 성향을 설문조사한 서베이 자료를 활용했다. 이 서베이조사 자료는 아사히신문·동경대 蒲島연구그룹이 공동으로 조사한 것으로 이미 공개되고 있다.<sup>1)</sup> 이들 자료를 보면, 개별 당선자들의 정치성향 내지 정책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조사항목들은, 일반적으로 보수-진보라는 정치성향에서 찬반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정책들로 하였다. 즉 일본의 핵무장, 북한 납치자 문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입 문제, 자위대의 선제공격, 집단자위권행사, 헌법개정, 연금제정에 대한 국고지원, 작은정부정책, 격차문제 해결을 위한 국고지원 등의 조사항목들을 선정해, 개별 정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지지-반대 데이터를 분석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이용한 아사히신문·동경대 공동조사 자료에는 일본 국회의원들의 보수-진보의 정치성향을 직접 질문하는 조사항목이 있다. 이 조사항목은 개별 의원들이 자신의 보수-진보 수준을 1에서 10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 측정하는 것이다. 이 항목과는 별도로 개별 의원들의 보수 내지 우경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별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참가하거나 가입하고 있는 개인별 정책모임을 조사했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정책모임들은 다음과 같다.

---

1) 아사히신문과 동경대 蒲島연구 그룹이 공동으로 조사한 데이터(2003년 총선, 2004년 참의원선거, 2005년 총선, 2007년 총선)는 현재 일반 공개하고 있음(<http://www.j.u-tokyo.ac.jp/~masaki/ats/atsindex.html>). 이 외에도 일본 국회의원들의 정책성향에 대한 설문조사는 마이니치신문에 의해서도 실시되어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2003.9.28 조간, 2003.11.11 조간, 2005.9.13 조간).

<도표 1: 보수 강경 성향의 의원모임>

모임 또는 활동	특징과 내용
日本会議議員懇談회 참여자	1997년 결성된 단체로 일본사회 각 계층의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단체임. 일본 문화와 전통을 수호하고, 元號법제화, 천황즉위 의원간담회의 경우는 자민, 민주당 의원들이 300명 이상 가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국회의원들의 회장은 자민당 출신의 平沼赳夫 의원이며, 국수주의적인 정치성향과 정책노선을 주창한다.
야스쿠니참배를 지지하는平和靖国議連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와 관련하여 수상의 참배를 적극 지지하고 추진하는 의원들의 모임으로 2005년 06월 28일 결성함. 아베 전수상에 가까운 古屋圭司, 衛藤晟一 중심으로 120명 정도 가입한 것으로 알려짐.
国立追悼施設反対 서명파	일본회의 가입 의원들을 중심으로 2003년 9월 참여함.
教育基本法改正促進委員会	2006년 아베내각이 적극 추진한 교육기본법 개정 추진을 적극 지지한 의원들의 그룹으로, 전후 일본의 서구식 교육체제를 비판하면서, 일본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국가와 사회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어 보수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는 의원 모임임. 현역의원 3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議員の会	1997년 설립된 의원 단체로, 자학사관적인 역사교과서의 수정을 주창하는 「새역사 교과서 만드는 모임의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단체임. 자민당의 安倍晋三, 中川昭一, 古屋圭司, 衛藤晟一, 中山成彬 등이 중심인 모임.
皇室典範の拙速な改正に反対する緊急集会	고이즈미 내각에서 여성왕위계승을 인정하는 황실전범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이를 반대하면서 현행 황실전범을 고수하여 일본 전통 유지를 주창한 그룹임. 平沼赳夫, 古屋圭司, 松原仁(민주), 岩屋毅(자민) 등이 대표적 인물임.
北朝鮮經濟制裁賛成派	북한과의 납치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북경제재조치를 즉각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힌 의원들 그룹을 의미함.

<도표 2: 중도 내지 진보 성향의 의원 모임>

모임 또는 활동	특징과 내용
国立追悼施設を考える会	2005년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를 대체할 새로운 추도 시설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의원들이 초당파적으로 결성한 모임으로, 자민당의 山崎拓(회장), 加藤紘一, 福田康夫, 額賀福志郎, 河村建夫, 大島理森, 渡海紀三朗, 등이 참여하고 있고, 46명의 자민당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靖国問題勉強会	2005년 7월 설립된 자민당 내 친중파, 미일동맹 중시하는 그룹이 주도하여 수상의 참배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주장함. 加藤紘一, 野田毅, 中馬弘毅, 高村正彦, 衛藤征士郎, 大島理森, 後藤田正純, 舛添要一 등이 주도한다.
日朝友好議員連盟	일본-북한 우호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결성된 의원연맹으로 자민, 민주, 공명, 사민, 공산 등 초파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민당 의원으로는 中川秀直, 池田行彦, 河村建夫, 河野洋平, 鈴木恒夫, 森喜朗 등이 참가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은 横路孝弘, 鳩山由紀夫, 鉢呂吉雄, 海江田万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의원들의 보수 내지 우경화 수준과 진보수준의 척도를 위의 모임에 가입하거나 참가한 모임의 숫자로 표시하였다. 국회의원들의 진보 성향을 측정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 숫자가 보수-우경화 성향을 파악하는 모임보다 작은 것은 중도 내지 진보적인 정책 활동을 하는 의원들의 모임이 실제로 적게 존재했기 때문이었다.<sup>2)</sup>

### Ⅲ. 분석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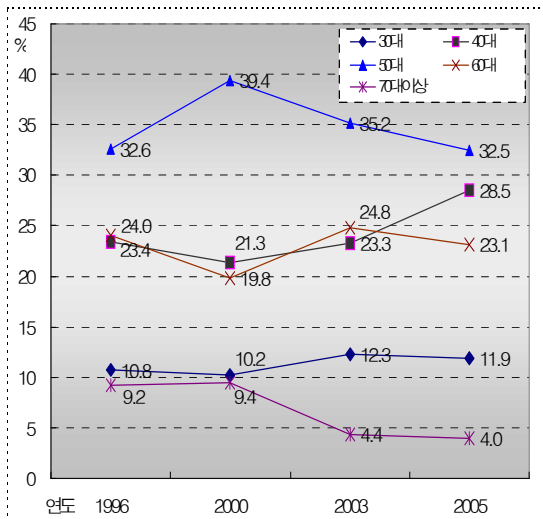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먼저 4차례의 중의원선거(1996년, 2000년, 2003년, 2005년)와 4차례의 참의원선거(1995년, 1998년, 2001년, 2004년)를 대상으로, 일본 국회의원들의 연령대별, 당선횟수별 구성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분석했다. 그리고 아사히신문과 동경대가 공동 조사한 정치인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의원들의 소속 정당 및 연령대별 정책성향, 개별 정책성향 간의 연관성 등을 분석했다.

#### 1. 1990년대 이후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세대 변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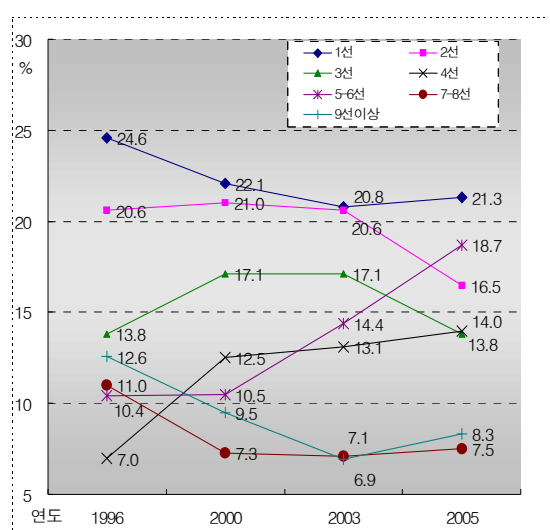
##### (1) 중의원선거 당선자 분석(1996년, 2000년, 2003년, 2005년)

1996년 총선에서 2005년 총선까지 10년간 중의원선거 당선자들의 연령분포를 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 이 도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가장 큰 특징은 30-40대 당선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40대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60대는 정체상태이지만, 70대 이상의 연령층의 비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표 3: 중의원선거에서의 당선자들의 연령분포 변화>



<도표 4: 중의원선거 당선자들의 당선횟수 분포 변화>



그런데 이러한 70대 의원들의 급격한 하락은 일본 정계에서 태평양전쟁의 패전을 체험하고, 전후 경제적 궁핍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평화적인 국제관계의 필요성을 체험해온 세대의 퇴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세대가 퇴장하고 새롭게 전후 세대인 40-50대 연령층이 일본 정계의 주축을 이루면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회에 대한 부담은 약

2) 이러한 개별의원들의 모임 내지 활동의 내용들은 개별 의원들의 홈페이지, 또는 신문보도, 해당 모임이나 활동과 관련한 매스미디어의 보도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수집하였다. 그런데 의원들의 모임과 활동들은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금번 연구에서 누락된 의원들도 다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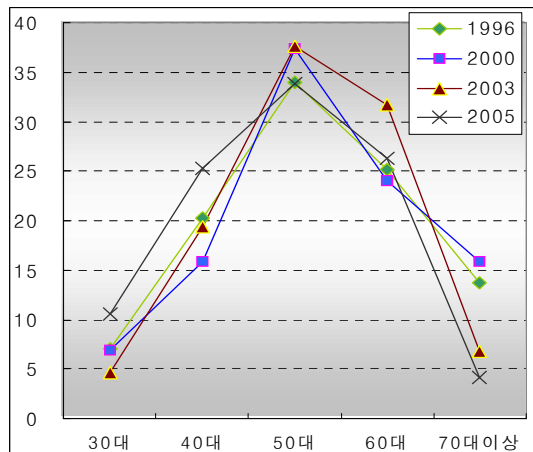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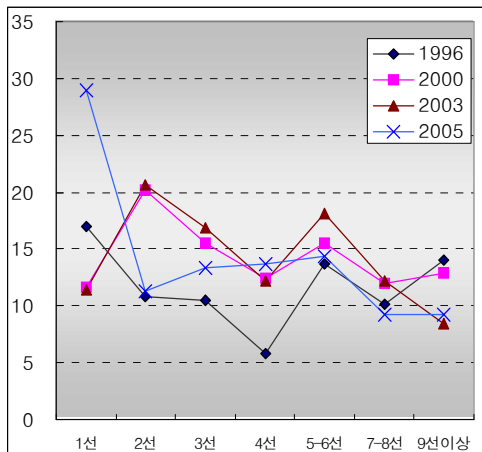
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1990년대 후반이후의 40-50대는 일본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는 시기에 성장해서, 폐전과 궁핍의 고통을 거의 체험하지 않은 세대이다.

또한 의원들의 당선횟수별 분포를 1996년과 2000년 총선을 비교해보면, 초재선의 당선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즉 1990년대 정당구도의 재편기 중의원회에서 의원들의 세대교체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7선 이상 의원들이 대거 퇴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역시, 앞서 설명한 60-70대 국회의원들의 퇴조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민주당의 득표율이 크게 증가하고, 자민당의 고이즈미 내각시기에 선거정국이 크게 변화하면서, 신진의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대되었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자민당 중의원 의원들의 당선횟수별 분포와 연령대별 분포를 보겠다. 자민당의 경우도 2005년 총선결과 신진의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초선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5선이상의 비율이 감소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민당의 중의원 의원들의 연령 분포에서도 30-40대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60-70대 비율이 크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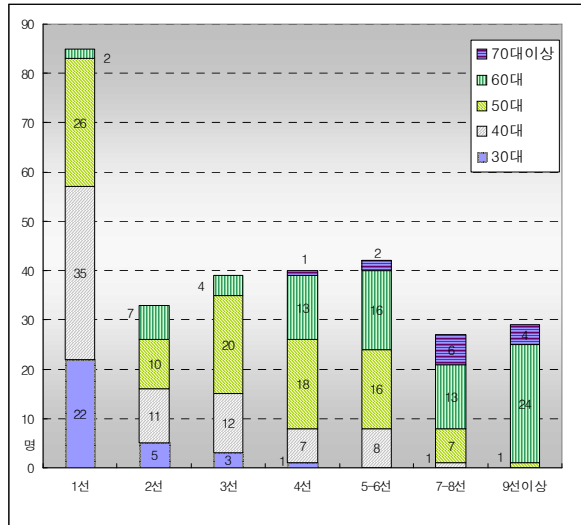
<도표 5: 자민당 국회의원들의 당선횟수별 분포 추이>

<도표 6: 자민당 중의원의원들의 연령대별 분포추이>



2005년 중의원선거에서 당선한 자민당 의원들의 당선횟수별 연령대의 분포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1선~3선에서는 40대가 가장 많지만, 3선~6선 사이에서는 50대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이즈미 내각과 아베내각 시기의 자민당 집권구도에서 내각 각료와 주요 당직자로 임명되는 의원들의 당선 횟수는 주로 3선에서 6선 사이의 경력자이면서, 연령적으로는 주로 40대 후반과 50대가 주류를 이뤘다. 이처럼 고이즈미-아베 내각시기에 각료와 자민당의 주요 직책을 담당해왔던 그룹들이 이러한 당선횟수와 연령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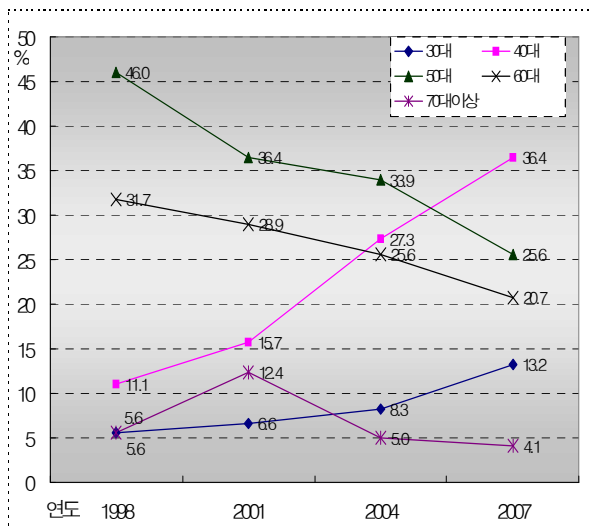
<도표 7: 자민당 2005년 총선 당선자들의 당선횟수별 연령대 분포>



(2) 참의원선거 당선자 분석(1998년, 2001년, 2004년, 2007년)

1998년 제18회 참의원선거부터 2007년 제21회 선거까지의 당선자들의 연령과 당선횟수를 중심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도표 8: 참의원 당선자의 연령대별 분포>



과거 4차례의 참의원선거에서도 30대, 40대의 당선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40대의 경우, 1998년 선거에서는 11%에 불과했지만, 2007년에는 36%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반해 50대의 점유율은 46%에서 25%대로 감소했고, 60대는 31%에서 20%로 감소했다. 70대 이상의 의원들은 5%에서 4%대로 약간의 변화를 보였다. 참의

원의 임기가 6년이란 점을 고려할 때, 중의원보다 일본 참의원의 의원들의 세대교체가 더욱 급격하게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0대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참의원 의원들의 세대교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일본 참의원의원들의 세대교체는 오히려 중의원보다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서 연령대 분포를 보았듯이, 급격한 연령대의 세대교체는 의원들의 당선 횟수에서의 급격한 변화로도 확인된다.

<도표 9: 참의원 당선자들의 당선횟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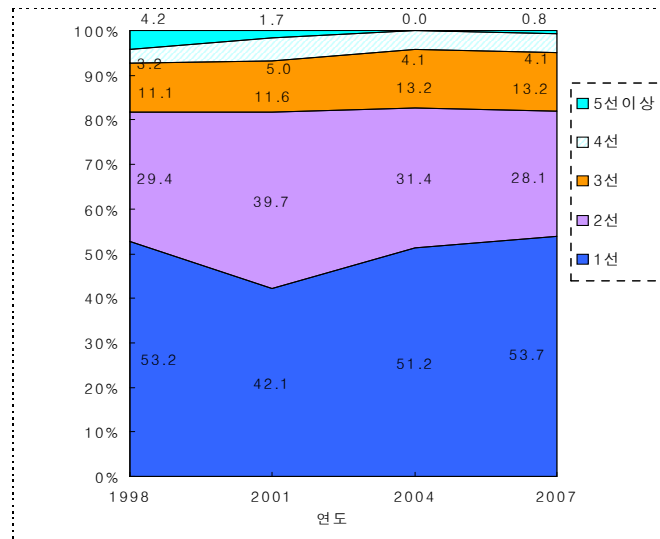


도표 9처럼 초선의 비율이 1998년, 2004년, 2007년 3차례의 선거에서 모두 50%대를 초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과거 4차례의 참의원선거에서 매번 초선의원들이 과반수 전후의 의석을 점하면서 참의원 의원들의 세대교체는 급격히 진행되었다. 4선 이상의 의원비율을 보아도 1998년 7.4%에서 2007년 4.9%로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앞서 설명했듯이, 이 시기 일본의 정당시스템이 자민-민주 양당 구도로 재편되면서, 참의원선거가 내각 내지 집권 정당에 대한 중간 평가 기능이 작용하면서, 집권 자민당 내각의 실정이 참의원선거에서의 자민당 의석에 그대로 반영되어 자민당 당선 의원 수들이 크게 요동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2001년, 2004년,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의석점유율은 자민당 지지율보다는 내각지지율에 더욱 크게 연동하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 (3) 자민당 의원들의 초파벌적 정책연대 강화

과거 10년간의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들의 세대 변화를 분석하여 보았는데 의원들의 세대교체와 함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자민당의 파벌정치 구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자민당이 장기집권해오면서 1990년대까지 내각과 자민당에서의 주요 정책결정은 각 파벌의 영수급이 정책결정을 주도해왔다. 연령적으로 보면 60대 후반이후 세대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자민당내 파벌정치구도가 급격히 해체되면서 각 파벌의 회장급 내지 60-70세대의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 시기 이들 연령대 자민당 의원들의 영향력도 동시에 급격히 하락하면서 자민당내 정책결정을 주도한 세대는 50대였다. 특히 자민당의 파벌정치 해체를 주창해온 고이즈미(小泉純一郎) 내각과 아베(安倍晋三)내각을 거치면서 40대 후반 내지 50대 의원들의 영향력은 매우 커졌다. 이들은 각 파벌의 중간 보수의 위치에 있으면서, 파벌의 경계를 넘어 정책별로 상호 연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고, 자민당 총재선거에서도 자신의 파벌의 총의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행보를 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정책성향과 일치하는 야당 민주당의원들과의 정책 연대 활동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본 자민당의 세대교체 내지 정책결정 주도세력들의 변화는 일본 자민당의 파벌 정치의 해체를 가속화시키고 있고, 파벌이 아닌 동일한 정책성향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들의 연대활동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다. 동시에 이들 정치세력들은 전후 체제의 결산을 주도하고, 전통적인 일본사회와 문화 특성들을 복원시키는데 적극적이었다. 특히 이들은 2001년 이후 고이즈미와 아베 내각을 거치면서, 일본의 구조조정 정책과 개혁정책들을 주도했다. 또한 대외관계에서는 일본의 국제정치적 위상을 확대하고 일본의 국익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고이즈미와 아베 내각의 각료와 자민당의 요직을 맡으면서 각 파벌의 중간보수 내지 핵심 멤버로서 성장해왔다.

예를 들어 아베 1차 내각과 자민당 간부에 중용되었던 40-50대 주요 자민당 의원들의 연령과 당선횟수, 그리고 이들의 보수 강경한 정치성향과 정책노선을 읽을 수 있는 정책관련 모임활동들을 정리한 도표 10을 보면 이러한 것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도표 10: 아베 1차 내각에서의 40-50대 각료 및 정당 간부>

성명	파벌명	연령	당선횟수	활동내역
安倍晋三	町村	53	5	①②③④⑤
菅義偉	古賀	59	4	①②③④⑤
甘利明	山崎	58	8	⑤
小池百合子	町村	55	5	①②③④⑤
塩崎恭久	古賀	57	4	①④⑤
高市早苗	町村	46	4	①②③④⑤
山本有二	高村	46	4	②⑤
渡辺喜美	無派閥	55	4	②
下村博文	町村	53	4	①②③④⑤
鈴木政二	町村	59	참3	①②
中川昭一	伊吹	54	8	①②③④⑤
石原伸晃	無派閥	50	6	-

- ① 日本会議議員懇談会加盟(대표적인 보수강경 정치단체)
- ② 国立追悼施設反対の請願署名派(03/09/23 日本会議에 의해 주창됨)
- ③ 外国人参政権反対派
- ④ 人権擁護法案反対派(05/11/16 人権擁護法案反対緊急集会에 참가자)
- ⑤ 北朝鮮經濟制裁賛成派(04/09/17 日本会議에 의해 주창됨)

위의 도표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아베내각에서 중용된 자민당 의원들의 40-50대는 石原伸晃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매우 보수적이고 강경한 정치성향 내지 정책노선을 주창하고 있는 그룹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특정 과별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일본 국회의원들의 정책성향 분석

아사히신문 및 동경대 공동조사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일본 국회의원들의 보수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택한 정책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즉 국회의원들 사이에 보수-진보의 대립구조가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는 정책 사항들로, 2000년대 일본 국회의원들의 최대 과제의 하나인 헌법개정문제를 포함하여, 미일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집단자위권의 인정문제, 북한납치자 문제,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문제, 선제공격 인정문제, 핵무장문제 등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국내정책 분야에서는 계층·지역 간의 격차문제, 연금제도의 개혁을 위한 재정지원 문제, 신자유주의적인 작은정부정책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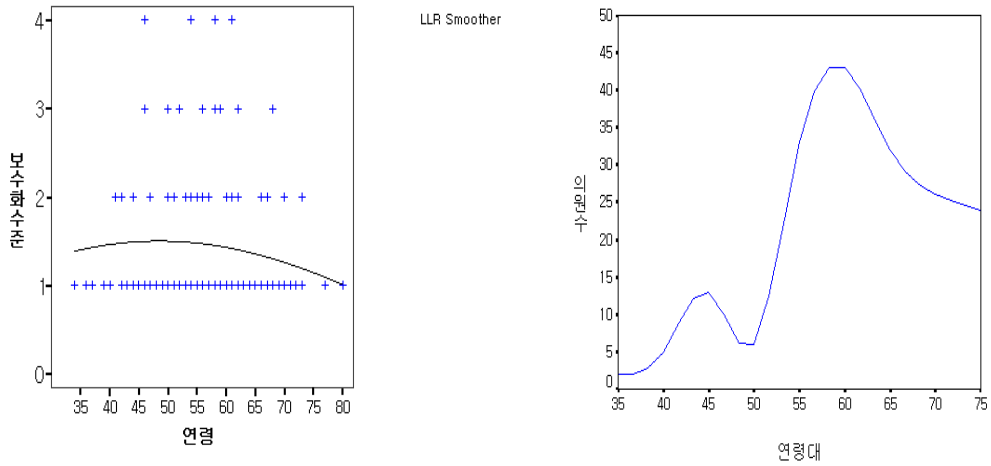
또한 이 설문조사 데이터와는 별도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 국회의원들의 정책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소의 의정활동에서 어떠한 성향의 정책모임과 주의·주장에 참여하고 지지해왔는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특히 모임과 활동의 성격이 보수적이고 대외 강경적인 성향이 강한 몇 개의 모임과 활동을 선정하여 그 참여 모임의 개수를 보수 수준의 척도로 사용했다(도표 1 참조). 또한 이러한 보수 강경한 의원모임과는 달리 국제우호주의적인 의원모임을 조사하여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모임수를 해당 의원의 진보적인 정책성향의 척도로 사용했다(도표 2 참조)

그리고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한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중의원 303명, 참의원 51명, 합계 354명이었다. 분석 대상 국회의원들의 선정 기준은 일본의 국회와 정당의 정책결정과 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되는, 각료경험자, 3선 이상의 당선자, 한일의원연맹의 주요 의원 등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참의원의원의 경우는 3선이상 당선자, 한일의원연맹 주요 인물, 각료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1) 보수-진보 정책성향의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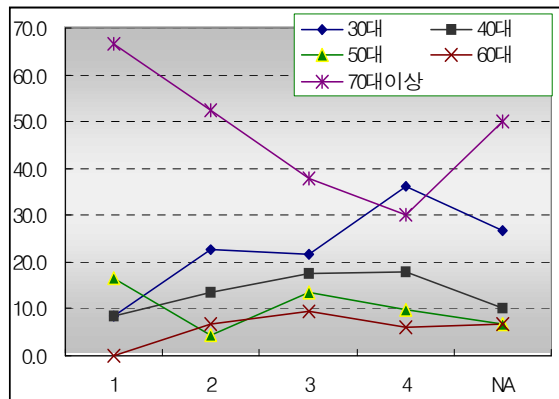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354명의 국회의원들의 보수-진보 정책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앞서 설명했던, 보수 강경한 의원모임 7개와 중도 진보적인 의원모임 3개에 대한 각 의원들의 참여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보수 강경한 모임 1개에 참여하고 있는 중참의원 수는 166명이었고, 중도-진보적인 의원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수는 184명이었다. 두 그룹의 연령 평균값을 비교하면, 보수 강경한 정책성향의 의원들은 55.8세였고, 중도-진보적인 성향의 의원들은 63.5세였다. 보수 강경한 의원들의 연령대별 보수 수준을 보면 도표 11과 같다. 금번 분석에서는 4개 이상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은 보수화 수준 4로 묶었다. 또한 진보성향의 의원들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도표 12와 같다.

<도표 11: 보수 강경한 의원모임에 참여한 의원들의 연령대별 분포> <도표 12: 진보적인 의원모임 참여자들의 연령대 분포 현황>



보수 강경한 의원들은 전체 연령평균이 55.8세인만큼, 4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에 집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보적인 성향의 국회의원들은 50대 후반과 60-70에 주로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볼 때, 일본 국회의원들의 강경한 보수 성향은 기존의 파벌구도가 약화되고 해체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정책연대 모임이나 단체 활동과 상호작용하면서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도표 13: 자민당 의원들의 연령대별 강경 보수성향의 비율>



여기서 자민당 의원들의 연령대별 국수주의적 역사관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위의 도표에서 나타나듯이, 30, 40, 50대의 의원들의 경우 국수주의적 성향이 강화되는 비율이 60대나 7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세대교체가 진전됨에 따라 보수 강경한 정치성향 내지 정책노선을 주창하는 의원들의 비율이 점점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을 하게 된다.

**(2) 개별 정책 성향에 대한 기초통계량 분석(DK, NA 응답자 제외)**

먼저 조사 항목에 대해 각 정당별 소속의원들이 응답한 결과치의 기초통계량을 분석해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 여기서 각 조사대상 항목들에 대한 척도는 1에서 5까지를 사용했다. 1은 찬성 내지 지지, 2는 약한 찬성 내지 지지, 3은 중도 또는 어느 쪽도 아님, 4는 약한 반대, 5는 반대를 의미한다. 그런데 각 정책별 질문내용이 강경 보수적인 방향에서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1에 가까울수록 보수적이고 5에 가까울수록 진보적이라고 판정된다<sup>3)</sup>.

<도표 14: 조사항목에 대한 기초통계량>

구분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연령	354	57.6	9.9	248	57.8	10.1	64	55.4	10.0	27	57.4	6.7
당선횟수	354	4.8	2.8	248	4.7	2.9	64	4.7	2.8	27	4.6	1.7
납치문제	263	2.7	1.0	173	2.5	0.9	55	3.2	1.1	24	2.9	0.9
안보리가입	188	1.7	1.0	119	1.6	0.9	43	2.2	1.2	22	1.4	0.5
집단지위권	264	3.1	1.4	173	2.6	1.2	56	3.9	1.3	24	4.5	0.9
헌법개정	265	1.7	1.0	177	1.4	0.8	55	2.3	1.2	23	2.2	0.8
선제공격	188	2.8	1.2	119	2.5	1.0	43	3.3	1.2	22	4.0	0.9
핵무장	192	4.5	1.1	122	4.3	1.3	44	4.8	0.5	22	5.0	0.0
보수강경성향	160	1.9	1.1	144	2.0	1.0	10	1.9	1.3	0	0	0.0
진보성향	82	1.1	0.3	59	1.1	0.3	12	1.1	0.3	6	1.0	0.0
연금지원	267	3.1	1.3	176	3.0	1.2	56	4.0	1.1	24	2.2	1.1
작은정부	181	3.3	1.1	114	3.0	1.1	42	3.7	0.9	22	3.8	0.9
격차문제	262	2.7	1.2	174	2.9	1.1	54	2.0	1.1	23	2.3	0.8
정치이념	244	5.4	1.8	160	5.0	1.7	51	6.1	1.8	23	6.4	1.5

기초 통계량 분석결과를 보면, 먼저, 납치문제에 대한 경제제재에 대해 자민당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약한 찬성과 어느 쪽도 아닌 태도의 중간에 위치한다. 이에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평균 3.2이므로, 전체 평균은 어느 쪽도 아닌 의견에 가깝다. 연립여당에 참여하는 공명당 의원들은 민주당과 자민당의 사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지위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의 평균치는 각각 2.6, 3.9, 4.5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민당 의원들은 약한 찬성과 중간적인 입장의 사이에 많이 분포하지만, 민주당의원들은 약간 반대하는 쪽에 다수가 위치한다. 공명당의원들은 민주당의원들보다 명확히 반대하는 쪽에 다수가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문제에 있어서는 자민당 의원들의 대다수는 찬성이며(평균 1.6), 민주당의원들도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 많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공명당은 오히려 자민당의원들보다도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평균 1.4). 이것은 공명당의 주요 정강목표가 세계와 인류의 평화와 행복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즉 일본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는 명분이 국제사회에서 기대되는 일본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핵무장을 인정하는 문제에서는 자민당 의원들조차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3) 예를 들어 북한납치문제에 대한 질문은 즉각적인 경제제재를 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형식으로 제시되므로, 찬성 1을 선택한 의원들은 강경한 보수 성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작은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는가의 질문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이 질문에서 찬성하면 1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또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지지하므로 보수로 분류된다.

다. 작은 정부 정책노선에 대해서는 민주당보다는 자민당의원들이 대체로 호의적이며, 공명당 의원들의 경우는 민주당의원들 의견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계층간 또는 지역간 격차문제를 해소하는데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민당의원들보다는 민주당의원들이 비교적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치이념적으로 보수와 혁신 어느 쪽에 가까운가를 질문<sup>4)</sup>한 정치이데올로기 내용을 보면,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의원들의 평균을 보면, 각각 5.0, 6.1, 6.4임을 알 수 있다. 공명당의원들의 생각이 민주당보다도 진보에 가깝다는 것이 이채롭다.

### (3) 정책성향 간의 상관분석

개별 정책성향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상관분석을 통하여 분석해보았다.

<도표 15: 정책성향간의 상관분석>

		연령	납치 문제	안보리 가입	집단 자위권	헌법 개정	선제 공격	핵무장	강경보 수성향	중도 진보성향	작은 정부	연금 개혁	격차 문제	보혁 이념
연령	P	1.00	-0.04	0.02	-0.05	0.11	0.21+	-0.05	-0.11	-0.11	-0.02	-0.02	0.23*	0.01
	N	133	96	69	96	96	70	69	123	123	68	95	95	95
납치문 제	P	-0.04	1.00	0.13	0.41**	0.18+	0.31*	0.08	-0.22*	-0.14	0.05	0.07	-0.10	0.19+
	N	96	96	65	96	96	66	65	96	96	64	95	95	95
안보리 가입	P	0.02	0.13	1.00	0.08	0.00	0.10	-0.10	-0.12	-0.03	-0.03	0.16	-0.04	-0.10
	N	69	65	69	65	65	69	68	69	69	68	64	64	64
집단 자위권	P	-0.05	0.41**	0.08	1.00	0.33**	0.37**	0.08	-0.14	0.02	0.24+	-0.11	-0.03	0.04
	N	96	96	65	96	96	66	65	96	96	64	95	95	95
헌법 개정	P	0.11	0.18+	0.00	0.33**	1.00	0.33**	0.05	-0.12	-0.06	-0.09	0.03	0.09	0.24*
	N	96	96	65	96	96	66	65	96	96	64	95	95	95
선제 공격	P	0.21+	0.31**	0.10	0.37**	0.33**	1.00	0.05	-0.20	-0.05	0.21+	-0.07	0.18	-0.04
	N	70	66	69	66	66	70	68	70	70	68	65	65	65
핵무장	P	-0.05	0.08	-0.10	0.08	0.05	0.05	1.00	-0.05	-0.06	0.06	-0.28*	0.08	-0.05
	N	69	65	68	65	65	68	69	69	69	68	65	65	65
국수적 역사관	P	-0.11	-0.22*	-0.12	-0.14	-0.12	-0.20	-0.05	1.00	-0.02	-0.02	-0.05	-0.20*	-0.11
	N	123	96	69	96	96	70	69	123	123	68	95	95	95
국제적 역사관	P	-0.11	-0.14	-0.03	0.02	-0.06	-0.05	-0.06	-0.02	1.00	0.04	-0.19+	0.05	-0.09
	N	123	96	69	96	96	70	69	123	123	68	95	95	95
작은정 부	P	-0.02	0.05	-0.03	0.24	-0.09	0.21+	0.06	-0.02	0.04	1.00	0.14	0.05	-0.14
	N	68	64	68	64	64	68	68	68	68	68	64	64	64
연금 개혁	P	-0.02	0.07	0.16	-0.11	0.03	-0.07	-0.28*	-0.05	-0.19+	0.14	1.00	-0.15	0.21*
	N	95	95	64	95	95	65	65	95	95	64	95	95	95
격차 문제	P	0.23**	-0.10	-0.04	-0.03	0.09	0.18	0.08	-0.20*	0.05	0.05	-0.15	1.00	-0.20*
	N	95	95	64	95	95	65	65	95	95	64	95	95	95
보혁 이념	P	0.01	0.19+	-0.10	0.04	0.24*	-0.04	-0.05	-0.11	-0.09	-0.14	0.21*	-0.20*	1.00
	N	95	95	64	95	95	65	65	95	95	64	95	95	95

\*\*상관계수 0.01수준에서 유의, \*상관계수 0.05수준에서 유의, +상관계수 0.10수준에서 유의

4) 정치이념적인 성향을 1-10의 척도로 질문한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강한 보수, 10에 가까울수록 강한 진보 (=혁신)로 하며, 5의 척도는 중도라고 규정하여 조사되었다.

먼저, 납치자문제에 대한 태도는 집단자위권과 선제공격의 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선제공격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북한의 미사일발사실험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납치자문제와 선제공격이 함께 연동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된다. 또한 납치자문제가 강경보수 성향과는 반대 방향에서 강하게 연동하는 것, 즉 강경보수 성향이 강할수록 납치자문제에서는 경제제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자위권, 헌법개정, 선제공격에 대한 정책성향은 상호 밀접하게 연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개정문제에서 전력보유금지와 집단자위권행사의 인정여부와 밀접한 제9조의 개정여부가 핵심이 되고 있는 만큼, 이들 정책에 대한 태도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분석결과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격차문제는 의원들의 연령과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원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격차문제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이것은 과거 자민당 정부에서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원들의 정치이념(보수-혁신 이데올로기)은 의원들의 정책성향에 그다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개별 정책에 나타나는 의원들의 태도는 이슈별로 연관성이 강한 그룹들이 나타나고 있는 있지만, 그 연관성의 수준은 상관계수가 작은 것으로 보아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즉 집단자위권과 납치문제의 밀접성의 유의수준은 1%미만으로 나타났지만, 상관계수는 0.4에 불과했다. 또한 집단자위권과 선제공격의 상관계수는 0.37정도였다.

이처럼, 일부 정책들의 태도에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상호영향의 강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인 의원들의 정치적인 보수-혁신 이념이라는 요인은 격차문제, 연금문제, 헌법개정 문제에서는 연관이 있지만, 매우 밀접할 것으로 연상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행사, 안보리가입, 핵문제, 선제공격, 작은정부 등의 정책성향과는 별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정책성향에 대한 교차분석

여기서는 주요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태도가 소속 정당별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교차분석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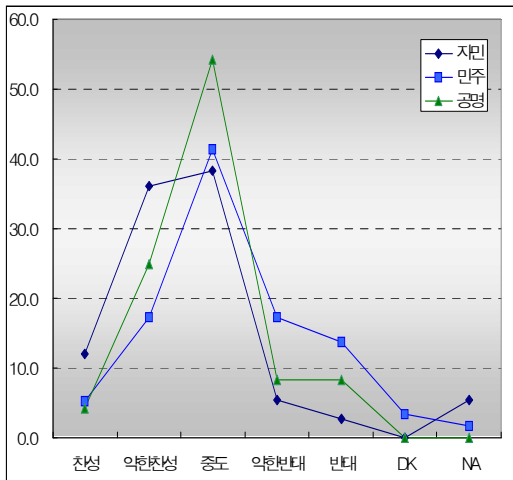
<도표 16: 정당소속 의원별 핵무장에 정책성향(도표 15)>

정당	n/%	찬성	약한찬성	중도	약한반대	반대	DK	NA	total
자민	N	1	0	14	14	86	0	15	130
	%	0.8	0.0	10.8	10.8	66.2	0.0	11.6	100.0
민주	N	0	0	2	3	39	1	2	47
	%	0	0	4.3	6.4	83.0	2.1	4.3	100
공명	N	0	0	0	0	22	0	0	22
	%	0	0	0	0	100	0	0	100.0
사회	N	0	0	0	0	2	0	0	2
	%	0	0	0	0	100	0	0	100.0
기타	N	0	0	0	0	1	0	0	1
	%	0	0	0	0	100	0	0	100.0
무소속	N	0	0	0	0	1	0	0	1
	%	0	0	0	0	100	0	0	100.0
계	N	1	0	16	17	151	1	17	203
	%	0.5	0.0	7.9	8.4	74.4	0.5	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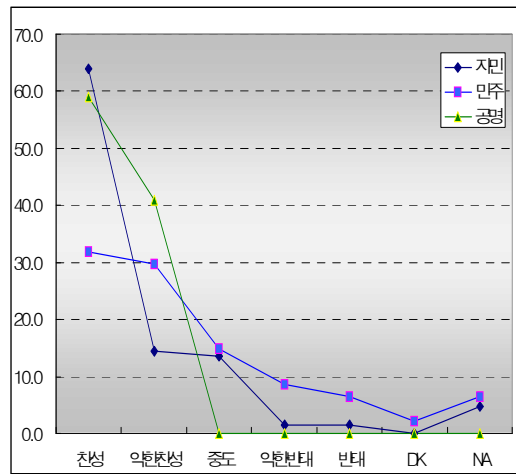
먼저 핵무장에 대한 의원들의 태도를 소속 정당별로 차이점을 보면, 자민당 의원들도 대부분 반대(77%)하고 있으며, 특히 공명당의 경우는 100%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하다.

북한의 납치자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에 대해서는 자민당 의원들이 약한 찬성 내지 중도적인 입장이 우세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20% 정도는 찬성이고 중도적인 입장이 41%를 넘는다. 공명당 의원들은 30%정도 찬성이고 중도적인 입장이 5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표 16).

<도표 16: 납치문제에 대한 정당 의원별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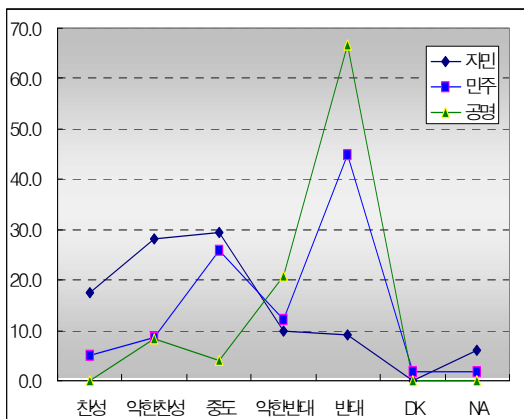


<도표 17: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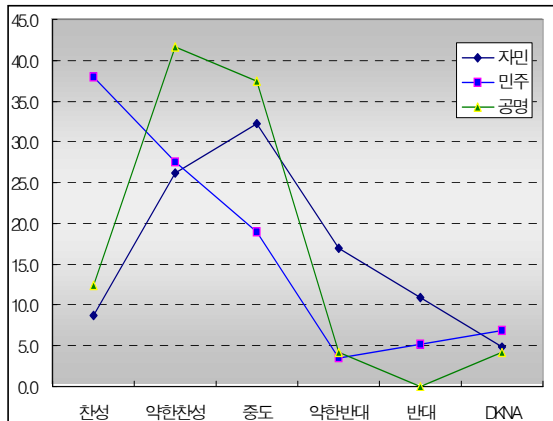


또한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일본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자민, 민주, 공명 3당의 소속 의원들은 매우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민당 의원들 가운데에는 비록 소수이지만 반대편에 있는 의원들이 있지만, 공명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이고 그 태도에서도 적극적인 찬성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도표 17). 이는 앞서서 설명했듯이 세계평화와 인류 공동 번영이라는 공명당의 정강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표 18: 집단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태도>



<도표 19: 격차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에 대한 태도>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는 일본 내 적극적인 방위론자 입장에서 보면 미일동맹관계를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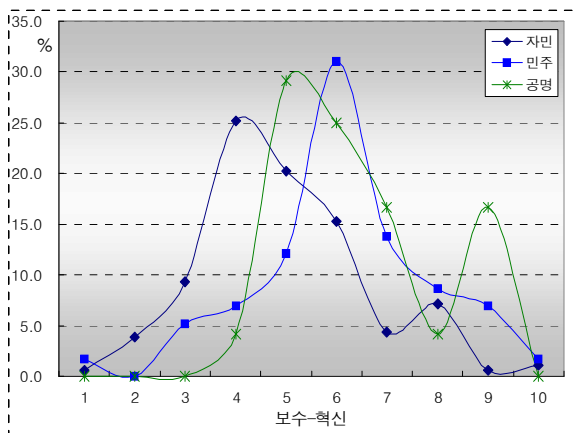
하여 유사시 주일미군과 일본자위대의 역할분담과 역할의 공동 수행을 위해 현실적으로 수용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자민당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찬성 내지 약한 찬성의 의견에 기울어 있다. 민주당의원들은 중도적이거나 반대쪽에 다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연립여당에 참여하고 있는 공명당 의원들은 거의 모든 의원들이 약한 반대 내지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조사결과를 본다면, 현행 헌법의 9조를 개정하여 집단자위권을 인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명당의 입장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해석된다.

격차문제는 1990년대 중반이후 자민당 내각이 구조개혁정책과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계층간 내지 지역간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된 문제이다. 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금 지출에 대해 자민당 의원들은 재정지출 확대와 축소의 두 그룹으로 구분된다. 즉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주장하는 그룹과 과거 자민당 정책처럼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그룹으로 양분되어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에 지지하는 그룹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야당의원들로서는 자민당 내각이 신자유주의식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을 주도하는 만큼, 정치적 경쟁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 같다. 공명당 의원들의 경우는 작은 정부 정책에 자민당 의원들에 비해서는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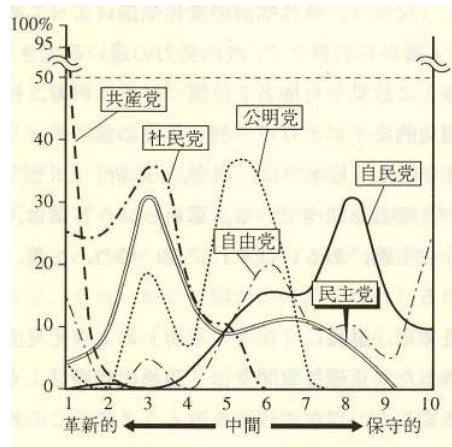
**(5) 보수-혁신 정치이념<sup>5)</sup>과 정책성향과의 연관성**

각 정당의 의원들의 보수-혁신 스펙트럼 상으로 파악된 정치이념의 분포를 보면, 자민당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보수-중도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는 자민당 의원들에 비해 중도 방향으로 중심이 이동해 있으며, 구 사회당 내지 시민단체 계열의 의원들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혁신적인 정치이념을 지니고 있는 의원그룹들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명당 의원들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중도 성향이지만, 혁신적인 정책성향을 갖고 있는 그룹이 일정비율 존재한다는 것이 명확히 나타난다. 공명당 의원들 가운데, 보수 강경한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는 그룹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러한 혁신적인 정치이념을 지닌 의원들이 존재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표 20: 2005년 중의원당선자 보혁이념 조사>



<도표 21: 1998년<sup>6)</sup> 주요 6당의 보수-혁신이데올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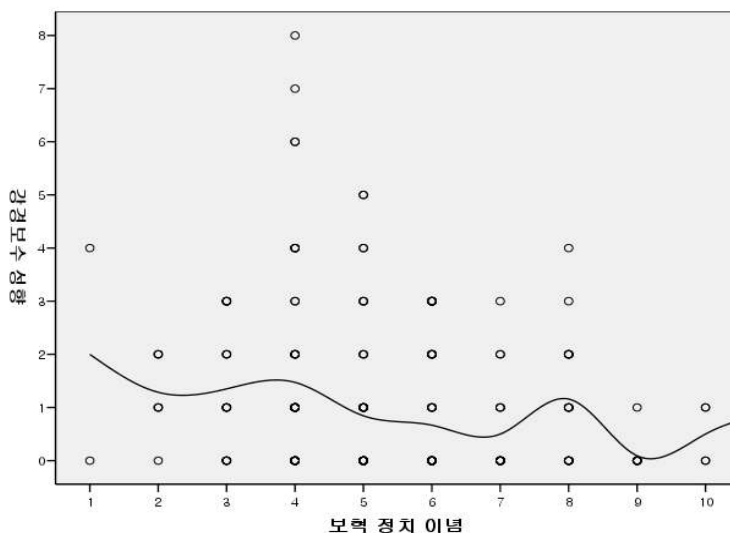


5) 1-10척도로 측정, 1에 가까울수록 강한 보수, 10에 가까울수록 강한 진보임.

6) 蒲島그룹이 1998년(11월-12월) 중참의원 7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중의원 297명, 참의원 150명의 응답을 통해 분석한 것임(東大法・蒲島郁夫ゼミ 2000, 28).

그런데 1998년 조사와 2005년의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자민당 의원들의 정치이념의 분포는 강한 보수성향이 약간 약화되었고,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는 중도-보수 성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공명당 의원들의 경우는 2005년 조사에서 강한 혁신 성향의 그룹이 등장한 것이 드러난다.

<도표 22: 강한 보수 정책성향과 정치이념 성향의 함수관계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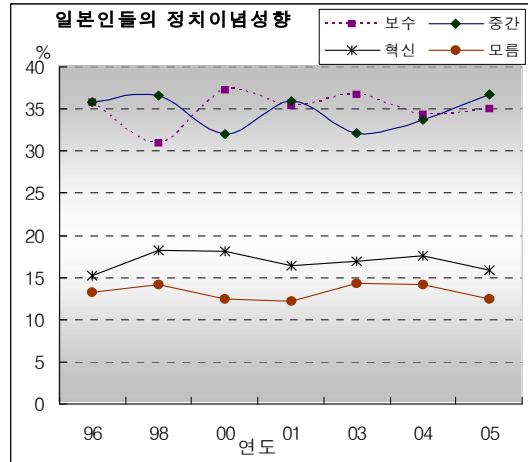
그렇지만 의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조사되는 보수-혁신의 정치이념 성향은 개별 의원들의 정책성향을 파악하는데 그다지 유효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앞서 상관성 분석에서 보았듯이 보수-혁신의 정치이념 성향과 개별적인 정책성향과의 연관성은 일원적이지 않다. 보수-혁신의 정치이념과 강한 보수 정책성향과의 함수관계를 그래프로 보아도 그러한 비일관성이 나타난다(도표 22).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본 국회의원들의 개별 정책 성향들과 특정 정치 이념과의 일정한 함수관계를 상징하는 것은 매우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IV. 결론

1990년대 이후 일본 사회가 전체적으로 보수화되고 우경화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어느 것을 판단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국정선거과정에서 설문 조사된 보혁 정치이념의 추이만을 본다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동안에는 두드러진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도표 23).

<도표 23: 1990년대 중반이후 일본 유권자들의 정치이념의 변화>



그러나 일본 국회의원들의 정책성향의 변화로 판단한다면, 국회의원들의 보수 강경한 정책노선이 강화된 것은 명확하다. 그리고 이러한 보수 강경 성향의 확대는 국회의원들의 세대교체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강한 보수 성향의 정책성향은 개별 정책 사항별로 다를 수 있어 일원적이지 않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도표 23에서 보이듯이 만약 일반 유권자들의 정책성향이나 정치이념의 분포에는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정책성향에서는 보수 강경 성향이 강화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쉽게 설명해서 일본 국회의원들 가운데, 보수 성향의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증가했고, 중도 내지 보수 성향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증가했기 때문인가? 다시 말해서 일본의 유권자들의 대다수는 1990년대 중반이후의 국정선거에서 국회의원을 선택하는데 국회의원들의 정치노선이나 정책성향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투표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어쩌면, 흔히 일본의 선거학자들이 1990년대 중반이후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무당파층의 투표 향배이고, 또한 일본 유권자들이 지지정당을 선택할 때 중시하는 것은 정권담당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1990년대 일본 정치세력의 보수화는, 부분적으로, 소선거구제의 도입이라는 선거제도의 변수, 정치불신의 증가에 따른 무당파층의 급증이라는 변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르겠다.

또한 일본의 정치엘리트들은 일반 유권자들의 정치성향이나 정책성향을 균형있게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명확한 것 같다. 강경 보수 성향의 젊은 정치세력이 과다 대표되고 있는 배경에는 신규 정치인을 충원하는 일본 정치구도만의 특이한 단면이 존재하는 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세습화 현상, 국회의원의 후원회제도 등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7) \*明るい選挙推進協會의 선거조사 자료를 집계함.

## <참고문헌>

- 김호섭·이면우·한상일·이원덕. 2002. 『일본우익연구』. 중심.
- 한상일. 2002. 「일본사회의 우경화」, 김호섭·이면우·한상일·이원덕. 『일본우익연구』. 중심.
- 이원덕. 2002. 「일본사회의 우경화와 안보정책 전환」, 김호섭·이면우·한상일·이원덕. 『일본우익연구』. 중심.
- 이면우. 2002. 「일본정계의 우익, 우익성」, 김호섭·이면우·한상일·이원덕. 『일본우익연구』. 중심.
- 김호섭. 2002. 「일본 우익의 역사적 전개와 이념」, 김호섭·이면우·한상일·이원덕. 『일본우익연구』. 중심.
- 박철희. 2006. 「일본 정계에서의 신보수주의 세력의 성장과 한국에의 함의」, 김영작·전진호편. 『글로벌화시대의 일본: 한국에서의 함의』. 한울아카데미.
- 渡辺治. 2001. 『日本の大国化とネオ・ナショナリズムの形成』. 桜井書店.
- 渡辺治. 2005. 『構造改革政治の時代: 小泉政権論』. 花伝社.
- 大嶽秀夫. 1999. 『日本政治の対立軸』. 中公新書.
- 浅羽通明. 2006. 『右翼と左翼』. 幻冬舎新書.
- 蒲島郁夫·竹中佳彦. 1996. 『現代日本人のイデオロギー』. 東京大学出版会.
- 蒲島郁夫. 2004. 『戦後政治の軌跡: 自民党システムの形成と変容』. 岩波書店.
- 読売新聞東京本社世論調査部編. 2004. 『二大政党時代のあけぼの: 平成の政治と選挙』. 木鐸社.
- 東大法·蒲島郁夫ゼミ編. 2000. 『現代日本の政治家像第Ⅰ巻』. 木鐸社.
- 東大法·蒲島郁夫ゼミ編. 2000. 『現代日本の政治家像第Ⅱ巻』. 木鐸社.
- 平野浩. 2007. 『変容する日本の社会と投票行動』. 木鐸社.
- 池田謙一. 2007. 『政治のリアリティと社会心理: 平成小泉政治のダイナミックス』. 木鐸社.

## 일본 보수주의 정치노선의 심화 - 동아시아 외교를 중심으로 -

손 기섭 (부산외대)

### I. 서론

2007년 9월 23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는 아소 타로(麻生太郎) 전 자민당간사장을 누르고, 후임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어 이틀 후 중의원에서 일본의 제91대 수상으로 선출되었다.<sup>1)</sup> 후쿠다 신임수상의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 나타난 신정권의 외교 방향성은 일본외교 근간으로서의 미일동맹과 국제협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서 국제사회와의 연계, 적극적인 아시아외교 추진, 러시아와의 영토문제에서의 끈기 있는 협상 약속이었다. 특히, 한국과는 미래지향적 신뢰관계를 강화하며, 중국과는 ‘전략적 호혜관계’<sup>2)</sup>의 확립을 희망했다. 이러한 방향성을 지닌 후쿠다의 동아시아 외교는 이전의 고이즈미 외교와 아베 외교와는 상당히 모습을 달리하는 특성을 띠어 매우 흥미를 끈다.

후쿠다 수상의 새로운 아시아외교는 1990년대 탈냉전기 이후의 일본의 동아시아 외교와 관련하여 어떠한 연속성과 변화의 의미를 지니는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미일동맹의 내용적 실체와 중일관계를 비롯한 동아시아 외교에서의 그 함의는 무엇인가? 후쿠다노선이 일본의 자민당 주류노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혹시 후쿠다는 90년대 중반 이후의 일본의 일련의 보수주의 심화 노선에서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고, 고이즈미나 아베노선이 더 본격적인 주류의 다수노선이 아닌가?

1990년대 중반 이후란 1996년에 등장한 하시모토 정권 이래 하시모토, 오부치, 모리, 고이즈미, 아베 및 현 후쿠다 정권을 의미한다. 과연 이러한 일련의 자민당 정권 내지 자민당 우위의 연립정권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 정치노선을 추구해 왔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변화되어 온 일본의 보수주의 정치노선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둔다. 전후 일본의 보수주의 정치노선의 심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요한 몇 가지 변수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전후 평화헌법에 대한 개헌이나 호헌이나 하는 점이다. 전후 일본정치가 평화헌법에 대한 태도 여부에 따라 그 성격이 규정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본정치

1) 자민당 총재이자 일본총리로서의 후쿠다의 승리 원인은, 자민당 파벌연합의 후쿠다 지지, 후쿠다의 온건 리더십에 대한 기대, 자민당 실력자 정치인들(모리, 고이즈미 전수상 등)의 지지 등으로 분석된다.

2) ‘전략적 호혜관계’는 아베 신조 정권의 중일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중 외교전략 구상이었다. 전임 고이즈미정권의 대중외교는 중국에서 보면, ‘정냉경열(政冷經熱)’로 표현되듯 정치적으로 대단히 냉각되어 양국 정상 상호초청 내지 방문이 전혀 없을 정도였다. 아베 수상은 ‘정냉’ 국면을 타파하여 중일관계를 ‘정상적 발전의 궤도’에 올리고자 했고 이러한 구상이 양국의 공통의 이익에 바탕한 ‘전략적 호혜관계’ 구상이었다. 小島朋之, 『動き始めた日中関係』外務省『GAIKO FORUM』2007.1, pp.48-49.

에 있어 개헌이나 호헌이나가 보수와 혁신을 가르는 주요 변수로 작용했던 것이다. 개헌 여부에 대한 일본 정치의 경사가 있다면 이는 보수주의 정치노선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의 개헌은 곧 평화헌법 제9조의 개정이나 폐지를 의미하는 점이 큰바, 이는 일본의 재무장노선과도 직결된다.

둘째 변수는 자위대에 대한 성격규정이나 역할규정의 변화 여부이다. 전후 일본 사회당은 80년대 후반까지 자위대를 거의 위헌으로 해석해왔다. 일본 자민당도 자위대를 군대로서 인식하기 보다는 전수방위의 목적을 위한 극히 제한된 의미의 군사력으로 간주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자위대의 성격규정이 1990년 중반 이후 변화하기 시작했다.

셋째, 미일 안보조약 내지 미일동맹에 대한 성격규정이다. 일본 정치외교의 보수성을 진단하는 데는 일본의 미국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가 대단히 중요했다. 전후 ‘요시다노선’은 소위 경제중심주의 노선이지만, 미일 안보조약과 대미 협조외교를 근간으로 하여 출발했다. 미일 동맹의 군사적 성격을 확대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일본 보수주의 정치노선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넷째, 중국에 대한 일본의 태도이다. 전후 일본이 미국을 선택하고 중국을 포기한 것은 보수주의 정치노선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징표일 수 있다. 물론 미국요소와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볼 수 없겠지만, 전후 변화된 보수성의 표현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중국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북한을 보는 일본의 시각에도 연관된다.

다섯째, 동아시아에 대한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인식 여부이다. 가해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는 올바른 역사인식의 제도화와 교육이다. 야스쿠니 참배의 중지와 역사 관련 교과서의 역사기술의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

## II. 일본정치의 재편과 보수주의 정치노선의 심화

### 1. ‘2003년 체제’로의 일본정치의 재편

일본정치의 ‘55 체제’는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파악되며 그 개념의 다의성으로 인해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1955년 제1차 내각에서 자민당과 사회당간의 ‘1+1/2 체제’로, 1955년 제1차 내각에서 자민당과 사회당간의 ‘1+1/2 체제’로, 선거제도 면에서는 중선거구제의 특징을 보인 점이다.<sup>4)</sup> 이 ‘55 체제’는 1955년부터 1993년까지 지속되어 자민당 단독정권이 38년간 지속되었으며, 1993년에 이르러 자민당이 분열되어 총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막을 내린다.

이러한 ‘55 체제’는 1993년 10월 10일간의 일본정치 재편성의 과도기적 과정을 거치면서 소위 ‘2003 체제’로 재편되었다. ‘2003 체제’는 아직 진행 중인 과도적인 상황이어서 명확한 개념규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93년에도 자민당 분열 이후 비자민(非自民) 정권이 3년간 집권하였고, 96년에 이르러 선거제도와 변경되었고 이후 세 번의 총선

3) 야마구치지로는 첫째, 냉전구조에 대한 규정, 둘째 1당 지배시스템에 의한 규정, 셋째, 정치경제시스템에 대한 규정으로 파악했다 (山口二郎編 1997 : 14-19) .

4) 정치경제시스템의 입장에서, ‘55년 체제’를 캐치업형의 근대화와 고도 경제성장을 추진시키기 위한 정치, 행정, 경제의 협조시스템 (山口二郎 1997 : 14-19) 으로 파악하거나, 정치경제적 총동원시스템으로 파악한 연구(野口悠紀雄 1995)도 있다.

가와 연립내각의 다양한 정치과정을 통해 2003년도 시점에서 일본정치시스템의 뚜렷한 변화의 특징을 보인 점은 명백하다. < 2>. 2003년 2월 20일 실시된 2004년도 여름 참의원선거 이후 일본정치는 뚜렷이 변화했다. , 여야간 대립축이 이념 중심에서 점차 정책 중심으로 이행되고 있는 점, - !주 중심의 2/1/3 , 선거제도 면에서는 소선거구 비례대표병립제가 주류를 이루는 특징을 보인 것이다.

또한 < 3> , ‘2003년 1월 11일 재편됨에 따라 자민당 우위의 연립내각은 신보수분류의 다수세력이 형성되어, , , 안보리 상임위 지향외교의 새로운 정책노선을 추구하는 모습이다.

<표2> 일본 정치시스템의 변환

일본정치 변수	‘55년 체제’	‘2003년 체제’
대립축	보혁이념 대립	정책 대립
정당형태	양당제→1과 $\frac{1}{2}$ 정당제	일당우위제→2와 $\frac{1}{3}$ 정당제
정권유형	자민당 단독정권	자민당 우위의 연립내각
선거제도	중선거구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표3> ‘55년 체제’와 ‘96년 체제’에서의 정책노선 비교

일본정치 쟁점	‘55년 체제’	‘2003년 체제’
정치노선	보수분류	신보수분류
평화헌법	유지	개헌
미일동맹	미일안보조약 유지	미일동맹 강화
방위정책	기본적 방위력 (전수방위)	실효적 방위력 (통합적 안전보장)
외교정책	경제외교 중심	안보리 상임위 외교
중일관계	전후적 ‘특수관계’ (‘72년 체제’)	탈전후적 ‘보통관계’ (‘72년 체제’의 전환)

## 2. 역사인식의 후퇴와 보수화의 가속화

### 1) 역사인식과 야스쿠니문제

역사인식문제는 90년대를 통해 공식적으로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2000년대 고이즈미 내각 이후 퇴보하는 속성이 보인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직전의 시이나(椎名) 외상의 최초의 반성표명<sup>5)</sup> 이후, 80년대 전두환-나카소네(中曾根) 두 한일 정상외교의 상호방문과 ‘제1차역사교과서사건’의 해결을 통해 역사인식의 접근이 시도되었고, 90년대 들어 미야자와(宮沢) 내각, 호소카와(細川) 내각, 무라야마(村山) 내각기에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다. 하지만, 전후 자민당정권의 역사인식에는 보수정당의 체질 상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1993년 8월 호소카와 내각의 역사인식<sup>6)</sup>과 1995년 6월 9일 무라야마 내각기의 일본 중의원에서의 ‘역사를 교훈으로 평화에의 결의를 새롭게 하는 결의’<sup>7)</sup> 및 8월 15일의 특별담화에 나타난 역사인식의 획기적 개선은 자민당정권의 붕괴에 기인한 바 크다. 특히 자민당·사회당 연립정권기의 무라야마 수상의 특별담화는 과거의 일본행위를 ‘국책의 잘못’ 및 ‘침략’으로 명언하고 거듭하여 명백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바, 이 특별담화는 역대 수상의 반성표명 중에서 가장 심도가 높은 사죄 표현으로 평가된다.<sup>8)</sup>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초에 한일관계가 매우 우호적인 관계로 시작되었던 것은 한국이 IMF위기를 맞아 김대중정권의 대일정책이 실리외교로 전환된데 기인한 바 크지만, 90년대에 한일 간의 역사인식이 상호접근한데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1998년 10월 오부치 수상과의 정상회담에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및 그 ‘행동계획’이 발표되어 진정한 동반자관계로서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당시 오부치 수상의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의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사죄’라고 하여 외교문서에 서명한 것은 역사인식 문제에 있어서의 한일 외교관계의 중대한 진전이였다.

그러나 고이즈미 수상이 취임한 2001년 4월 이래 한일관계는 대단히 경색되었는데, 한일관계가 경색된 직접적 계기는 일본의 우익단체가 작성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문부성 검정통과이었고 고이즈미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매년 참배한 것도 이에 가세했다. 이러한 경색된 한일관계는 고이즈미 수상이 2001년 10월 방한하여 과거사문제에 대해 오부치 수상 때의 일본정부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한일관계는 정상적인 외교관계로 복원되었지만, 야스쿠니신사를 매년 참배하는 등 불씨를 안고 있다.

노무현 정권 하에서도 역사인식 문제가 한일 간의 외교현안으로 등장했다. 고이즈미 수상의 이념적 성향은 기본적으로 자민당 보수분류노선<sup>9)</sup>이랄 수 있는 정치주의노선에 속해 있으며, 또한 자신의 구조개혁노선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야스쿠니신사 참배 같은 보수 우경적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보수정치가들은 국내정치

5) 1965년 2월 국교수립 직전의 시이나 외상의 방한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표명이 최초로 이루어졌다. “양국간의 오랜 역사 속에서 불행한 기간이 있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로서 깊이 반성하는 바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원덕 (1997), pp. 169-170.

6) 호소카와는 1993년 8월 23일 시정연설에서 “과거 우리나라의 침략행위와 식민지 지배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발언.

7) 이 결의문에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적 행위 ‘그리고’ 반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됨으로써 일본의 과거행위에 대한 사죄 의미가 표명되기는 하였으나, 일본의 행위를 세계 근대사상의 행위의 하나로 표현하는 간접화법이 사용되었고, 역사관의 상위라는 용어가 포함됨으로써 반성의 의미를 상당히 희석시켰.

8) 이원덕 (1997), p. 179.

9) 보수분류노선은 미일안보 하의 경무장, 미일협조외교, 경제우선주의 등의 요시다노선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나, 기타오카(北岡伸一)의 경우 미일협조노선을 보수분류노선의 본질로 파악하여 기시(岸) 외교도 포함했다. 北岡伸一 (1995), pp. 91-92. 이 분류에 따를 경우 고이즈미도 보수분류가 되나 일반적이지 못하다.

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군국주의 역사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고이즈미 수상은 한일정상회담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지에 대한 약속은 분명히 하지 않았지만, 2001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를 제기하자, 전 세계의 누구라도 부담 없이 전몰자에 대한 참배가 가능한 방향을 검토할 것을 명확히 한 바 있다.<sup>10)</sup> 만약 이 구상이 외국의 국립묘지와 같은 순수한 전몰자 시설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는 의미로 해석된다면 대단히 긍정적이다. 모리(森)내각 당시 노나카(野中) 간사장이 야스쿠니신사가 아닌 국립묘지 안을 제시한 것이나, 자민당 내 보수파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후쿠다 수상은 취임 이후 야스쿠니를 재임 중 방문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자신이 속한 파벌이 자민당 내 정치중심주의노선인 보수방류노선에 속하고, 리더십이 온건한 바, 내각지지율이 떨어지면 당이나 정부 내 강경파 보수우경주의자들의 탈선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이나 중국은 일본의 수상이나 장관이 야스쿠니신사에 아무런 역사적 반성이나 인식 없이 참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용납하기 힘들다. 단기적으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재발 방지 약속, 중장기적으로는 A급 전범이 배제된 상태의 국립묘지 형태의 전몰자 묘소의 건립 등의 시책이 필요하다.

## 2) 보수적 법안의 가속화

일본사회의 보수화의 진전은 90년대 후반부터 두드러져 최근에는 전후 평화헌법의 개헌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첫째, 군국 일본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던 히노마루와 기미가요가 완전 복권되어 1999년 7월 22일 중의원에 이어 8월 9일에는 참의원에서 통과되었다. 히노마루와 기미가요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55년 만에 다시 일본의 공식 지위를 회복하게 된 것이다. 그간 일본사회에서는 올림픽이나 스포츠대회를 제외하고는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의 히노마루의 게양과 기미가요의 제창은 일종의 사회적 금기였다. 거기에는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과거사에 대한 일종의 국민적 참회의 실천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다. 그토록 전후에 금기시되어 왔던 히노마루, 기미가요 문제가 중의원에서 찬성 403, 반대 86이란 압도적 표차로 단번에 가결된 것은 비록 정치권만의 결의라 할지라도 90년대 후반의 일본사회 전반의 보수화 경향을 여실히 보여준다.

둘째, 1999년 7월 일본 중의원은 헌법조사회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따라서 헌법조사회는 2000년 1월 20일 중·참의원 양원에서 '대략 5년 정도를 목표 조사기간'으로 하여 활동이 개시되었고 그 중간보고서를 2년 반이 경과한 시점인 2002년도 11월 1일에 제출한 바 있다.<sup>11)</sup> 2000년도 이후에는 일본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며 젊은층일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단지, 평화조항을 규정한 헌법 제9조의 전면 개정에는 아직 거부감이 크다.

셋째, 93년도에 자민당이 분열되어 비자민 연립정권인 호소카와 내각이 실현된 이후로 중앙 정계에서는 보혁 대결의 '55년 체제'가 거의 사라진 상태인 바 '55년 체제' 하에서의 사회당을 대신하거나 이를 능가할 개혁적 보수 내지 진보세력의 축이 명확히 설정되지

10) 『동아일보』 2001. 1. 10.

11) 일본 중의원 헌법조사회 중간보고서 (2002.11.5).

[http://www.shugin.go.jp/itdb\\_kenpou.nsf/html/kenpou/chukanhoukoku](http://www.shugin.go.jp/itdb_kenpou.nsf/html/kenpou/chukanhoukoku) (검색일 : 2005.10.10).

못했다. 따라서 일본 중앙정계에서는 98년 이후 자민\*자유\*공명당 연립내각이나 자민\*공명\*보수당 연립내각이나, 2008년 현재의 자민\*공명 연립 여당의 힘이 압도적이다. 최대 야당인 민주당은 파벌간의 역학관계가 다양하며 약 절반의 의원이 개헌에 찬성하는 등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오자와 이치로를 당수로 하는 최대 야당 민주당이 자민당 못지않은 보수성을 드러내기도 하는 정치상황이 된 것이다.

보수화의 가속화와 더불어 1996년도 이후 미일동맹이 재정의를되고 강화되면서, 일본의 군사력이 강화되고 방위정책의 틀이 크게 변모하는 양상을 보인다.<sup>12)</sup> 이러한 배경에는 90년대부터 비롯된 북한의 핵위협과 미사일 발사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제공을 하고 있으며, 중국의 핵실험과 군사력 강화, 21세기 불안정한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대테러 전쟁과 신안보전략 등이 가세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미일동맹의 강화 현상이란 미국의 부시 공화당 정권의 신안보전략 및 MD구상이 일본의 개헌노선과 군사력 증강에 합치되면서 탄력성을 받고 있는 현상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9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되어 온 미일동맹 강화와 관련된 제반 법안의 정비는 2003년 6월의 유사관련 3법안이 일본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개헌만을 남겨두고 거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다.

### 3. 개헌의 가시화

- 1) 개헌여정의 진전
- 2) 평화헌법 제9조의 개정 가시화

### 4. 아베정권의 성격과 몰락

- 1) 아베정권의 성격
  - 복고적 강경파적 성격
  - 전후레짐 탈피정권 : 개헌과 교육기본법과 대북한 강경책
  - 약체정권? : 탈당과 복귀

#### 2) 아베정권의 몰락

아베(安倍)정권은 2007년 9월 26일 막을 단았다. 2007년 7월의 참의원 패배가 결정적인 정권몰락의 원인이 되었다. 참의원선거 패배 직후 곧 사임했다더라면 차후 정치적으로 재기할 여지를 남겼겠지만, 물러나지 않을 것을 공언한 가운데 신내각을 조각한 뒤 2주도 안되어 사임하는 돌발적이고도 무책임한 사임극을 연출한 것은 국내외에 큰 충격을 주었다.<sup>13)</sup>

아베정권 몰락의 첫째원인은 스캔들의 연속과 실정에 존재한다. 농림수산상의 정치자금 문제를 비롯한 주요 각료의 연이은 스캔들과 약 5,000만 명분에 해당하는 연금기록이 분실됨으로 인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이로 인해 아베정권에 대한 내각지지율이 60%대에서 30%대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것이 참의원 선거 참패로 나타났다.

12) 田中明彦, 『安全保障—戦後50年の模索』(読売新聞社, 1997).

13) 최악의 타이밍에 사임함으로써, 기시 전수상을 외조부로, 아베 전외상을 아버지로 둔 귀족 2세의원인 '도련님 수상'의 한계를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최대 야당인 민주당 총재 오자와 이치로와 대테러대책특별조치법 연장문제를 앞두고 너무도 쉽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둘째, 명문정치가 집안의 황태자로서 대중의 각광을 받고 등장했으나, ‘친구내각’이라고 조롱될 정도로 협소한 범주의 코드인사에 치중하여 자민당 내 다양한 파벌이나 원로 및 실력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또한 유연하지 못한 보수 강경일변도의 정책 추진으로 야당과의 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한 동시에 경직된 정국운영을 초래하여 아베의 정치적 리더십은 지속적 하락을 면치 못했다.

셋째, ‘아름다운 나라’의 건설을 목표로 추진된 일방적이고 과도한 개헌 추진, 교육기본법의 제정 등이 국민으로부터의 지지획득에 실패했다.<sup>14)</sup> 국민들은 경제와 생활에 밀착된 정책과제를 더 선호했으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만한 정책과제의 발굴에 실패했다. 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의 ‘헤이세이(平成) 불황’과 고이즈미 개혁 이후에 발생한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양극화 현상, 즉 계층 간 및 도시-지방 간 ‘격차’ 심화 현상을 치유하지 못했다. 고이즈미 전 수상이 도시 유권자에 어필하고 매스미디어 전략에 강했던 반면 아베는 자신의 개혁정책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지 못했다.

한편, 아베 정권은 외교적으로는 집권 초기 고이즈미 수상의 동아시아 외교의 부실과 실패를 어느 정도 만회하여, 일정 부분 국내외의 기대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첫째, 고이즈미 동아시아 외교실패에 대한 복원 노력이 있었다. 2006년 10월에 미국에 앞서서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여 관계정상화를 도모했고 이러한 노력이 2007년 4월경의 원자바오 중국 수상의 방일로 이어져, 중일 간에 ‘전략적 호혜관계’를 선언으로 발전했다.<sup>15)</sup>

둘째, 일본의 국익에 바탕한 ‘주장하는 외교’, ‘가치의 외교’ 추구이다. 자유,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 등 기본적 가치를 중시하는 외교의 추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미국과의 동맹강화, 유럽(EU, NATO) 및 호주와의 연계 강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미국 부시정권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개헌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고이즈미 때보다 명백히 했다.

셋째, 신 전략선언인 2006년 11월 ‘자유와 번영의 호’ 외교안보 연대를 시도했다. 경제대국으로서의 21세기의 전략적 비전으로서, ‘미일동맹의 강화’, 중국, 한국,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의 토대 위에서, 상기 ‘가치의 외교’에 바탕한 유라시아 대륙의 외주에 위치한 국가들과의 ‘자유와 번영의 호’ 연대 구축을 도모했다. 실제로는 미일동맹을 토대로 EU(NATO), 호주에다 인도와 중앙아시아와의 외교안보 연대 국제메커니즘을 구축하는 전략적 선언이었다.<sup>16)</sup> 이는 미완의 전략적 선언에 그쳤지만, 일본의 21세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대응이었다.

### III. 하시모토 내각 이후의 미일동맹의 강화

#### 1. 미일동맹의 재정의와 강화

1951년 9월 강화조약과 동시에 체결된 미일 안전보장조약은 1960년 기시내각의 안보조약 개정을 거쳐 1996년 이후 ‘미일동맹의 재정의’와 강화의 여정을 걸어왔다. 1989년 12월 미소 냉전 종결 선언 이후 미국의 국방정책은 큰 변화를 보였다.<sup>17)</sup>

14) 安倍晋三, 『美しい国へ』(文芸春秋, 2006).

15) 한국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관계복원 시도하였으나, 대북한 제재와 맞물려 충분히 복원되지는 않았다.

16) 鈴木米勝, 「新戦略宣言 '自由と繁栄の弧' 考」 『GAIKO FORUM』 2007.4, pp. 28-29.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걸프전이 발발했다. 걸프전은 미일동맹관계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미국과 일본은 안전보장조약을 매개로 한 동맹국으로서, 냉전 하에서는 미국의 억지력이 효과적이 기능하여 군사면에서 동맹의 운용성이 주목을 받지 않았지만, 걸프전을 계기로 동맹국 미국에 대한 일본의 협력 내용과 방향이 크게 문제시된 것이다. 걸프전은 중동으로부터 석유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의 위기이기도 하다며 미국은 동맹국 일본의 ‘책임분담’<sup>18)</sup>을 강하게 요구했다. 냉전 하의 미일동맹이나 자위대는 군사력 본래의 구체적인 운용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나아가 국경을 초월한 미일 군사협력이나 자위대의 해외 파병 등은 금기시되었다.

걸프전에서의 일본의 공헌은 90억 달러의 전비 부담과 40억 달러의 부흥자금 제공으로 귀착되었다. 일본정부가 총 130억 달러라는 거액의 정부자금을 제공했지만, 일본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대단히 차가웠던 바, 일본정부는 매우 충격을 받았다.<sup>19)</sup> 거액을 자금협력을 하면서도 미국으로부터 전혀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차가운 평가는 두 가지 요인에 기인했다. 첫째는 일본정부는 자금협력을 솔선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미국의 강력한 요청이 있는 다음에 조금씩 금액을 추가하는 상황대응적인 소극자세로 일관했기 때문이었다. 둘째는 인적 공헌을 하지 않는 동맹국 일본에 대한 불만이였다. 전후 일본정부는 국제문제에서 군사적 관여를 피해 경제외교, 통상외교에 치중했지만, 90년대 탈냉전기에 들어 미일동맹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요청받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냉전 종언 직후 미일동맹은 60년 안보개정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던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1992년 1월에 발표된 미야자와 수상과 부시 미대통령 간의 ‘미일 공동선언’은, 미일 안보체제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중요함을 피력한 동시에 ‘글로벌 파트너십 하에서 세계의 평화 및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각자 역할과 책임을 지는 협력’을 약속했다. 냉전기의 미일동맹은 일본의 안전을 지키고, 극동의 안전과 평화에 공헌하는 것이 주된 의의였지만, 냉전 후의 미국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보다 글로벌 차원의 역할을 일본정부에 요청했다. 물론 책임분담의 구체적 표현이 자금이나 인적 공헌이나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통일된 견해를 나타내지 못했지만, 일본정부로서는 탈냉전기 안보환경에 대한 적응과 새로운 국가전략의 수립이 절실했다.

일본정부는 1994년 8월에 발표된 ‘히구치 리포트’로 통해, 미국정부는 1995년 2월의 ‘나이 리포트’를 통해 미일 안보관계의 틀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구체화시켰다. 탈냉전기의 안전보장정책을 모색하는 일본정부의 견해는 통일적이 아니었다. 우선 일본정치가 크게 변모한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일본정치는 1993년 7월 55년도부터 유지되어 온 자민당 단독정권이 무너지고 비자민 연립정권인 호소카와(細川) 내각이 등장했다. 호소카와 내각은 냉전 하에 책정된 ‘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하고자 ‘방위문제간담회’를 설치하여 1994년 8월 ‘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의 모습 - 21세기를 향한 전망’이란 보고서(히구치 리포트)를 제출했다.<sup>20)</sup>

17) 1990년 8월 당시의 부시 미 대통령은 국방정책의 중점을 소련의 위협에서 대규모 지역분쟁에의 대처로 전환하는 ‘지역방위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서의 주요 키워드는 기반전력(The Base Force)이었으며, 207만 여명의 총 병력을 1995년도까지 165만 명으로 축소 재편하는 방침이 확인되었다.

18) 동맹국 일본의 ‘

19) Susan J. Pharr, Japan's Defensive Foreign Policy and the Politics of Burden Sharing, Gerald L. Curtis, ed., *Japan's Foreign Policy - After the Cold War Coping with Change* (M.E.Sharpe, 1993), pp.252-257. ; 渡辺昭夫, 「国際情勢変動期における日本の外交政策の決定過程－天安門事件後の中国と湾岸戦争のケーススタディー」 日本国際問題研究所編 『1990年代における日本の戦略的課題』 (1993), pp.19-30.

20) 渡辺昭夫, 日米安全保障關係の「展開」 『 』 年月 pp. 24-25. p.35.

이 보고서의 특색은 다자간 안전보장전략을 제창한 데 있었다. 자위대의 역할을 ‘자국의 방위라 본래 역할’에 한정하지 않고, 유엔평화유지활동에의 협력 등 다각적인 것으로 할 것을 강조했다. 세계적 지역적 군비관리 추진, 지역적 안전보장대화의 촉진 등 다양한 안전보장정책의 확립을 제안했으며, 다자간 안전보장을 위한 방위력의 역할을 ‘미일 안전보장협력의 충실’ 항목보다 먼저 서술함으로써,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이 미일안보 중심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의 모색으로 전환한 인상을 주었다. ‘히구치 리포트’는 1995년 11월에 각의결정에 의한 ‘신 방위계획대강’<sup>21)</sup>의 책정으로 발전한다.

미일동맹에 있어, 공통위협 소멸, 미일 경제마찰의 심화, 55년 체제의 붕괴 등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일본의 군사 불개입의 일국 평화주의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이 증폭되어, 미일간의 알력은 90년대 초반 두드러졌다.

1995년 2월 클린턴정권은 ‘미국의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안전보장전략’(나이 리포트)을 발표했다. ‘나이 리포트’는, 미일 안보관계를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정책의 요체로 인정하여, 미일동맹이 미일 안보는 물론이고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주요 요소임을 확인했다. ‘나이 리포트’는 미 정부가 일본의 다자간 안보협력 지향을 우려하여 미일 방위협력의 공고화를 의도한 것이었다. 금후 20년에 걸쳐 아시아에서의 전방전개능력으로서 10만 명 규모의 미군병력을 유지할 것을 명확히 하고, 전방전개능력의 유지와 운용을 위해 미일간의 긴밀한 협력과 미일동맹의 역할을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확대시킬 것을 주장했다.

중국에 의한 1996년 3월 대만총통 직접선거를 전후로 한 일련의 미사일발사연습 및 군사합동연습은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위협론’을 깨우쳐 주고 미일 안보협력을 강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sup>22)</sup> 중국은 7월 하순의 핵실험을 끝으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조인의 자세를 표명하며 핵실험 정지를 선언했다.

‘히구치 리포트’와 ‘나이 리포트’를 토대로 미일 안전보장관계의 재확인을 위한 미일 양국의 작업은 1995년 11월 ‘방위계획대강’의 개정을 거쳐, 1996년 4월 방일한 클린턴 미대통령과 하시모토(橋本)수상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 안전보장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미일동맹의 ‘확인’과 ‘재정의’라는 냉전 후의 미일안보조약의 의의를 설정한 이 공동선언은, 냉전기에도 좀처럼 사용하지 않던 ‘동맹’이란 단어를 명백히 사용했으며,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주일미군의 전진배치와 일본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한 동 공동선언은 일본방위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틀은 자위대의 적절한 방위능력과 미일 안보체제의 결합이며, 미일 안보조약에 근거한 미국의 역지력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긴요함을 선언한 것이었다. 동아시아에서의 약 10만 명의 전방전개능력의 유지와 미일간의 안보협력의 강화,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 등을 확인했다.

1997년 9월에 개정된 ‘미일 ‘신 방위협력 지침’은 상기 공동선언이 설정한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신 방위협력 지침’은 ‘평시’, ‘직접 무력공격의 경우’, 일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주변사태’ 등 세 가지 경우를 상정했다.<sup>23)</sup> 국내외의 주된 관심은 ‘주변사태’에 관한 정의와 구체적인 행동계획에 쏠렸다. ‘주변사태’에 대한 대응으로서, 미일 정부는 주체적으로 수색구조 작전이나 경제제재 시행과 관련한 선박검문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시설의 사용’ 및 ‘후방지역 지원’으로 분류한 ‘미군의 활동에 대한 일본의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sup>24)</sup> 즉 주변 유사시

21) 1976년에 책정된 방위계획대강의 제1차 개정임. 防衛廳, 『日本の防衛』平成9年版(1997), pp. 328-335.

22) 중국은 동 군사연습이 주권의 범위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1996년 6월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했다. 일본은 무상 원조 동결 지속을 통고했으며, 연립내각의 정부 여당 내에서도 엔차관 협력 동결 압력이 거세졌다.

23)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小林秀之 \* 西沢優 『日米新ガイドライン』(日本評論社、1999), pp.7-95.

에 양국은 ‘미일 각자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 ‘미군의 활동에 대한 일본의 지원’ 및 ‘운용면에서의 미일 협력’ 등 세 분야에서의 40여 항목의 협력내용을 규정했다.<sup>25)</sup>

1999년 5월 일본은 이 신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주변사태 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주변사태안전확보법’, ‘자위대법 개정안’, ‘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이 포함되었다. ‘주변사태안전확보법’에서는 미군에 대한 ‘후방지역 지원’ 및 ‘후방지역 수색구조 활동’이 규정되었다. ‘후방지역 지원’이란 주변사태 시 미군에 대해 후방지역의 보급, 수송, 정비, 의료 등 물품과 역무 제공 및 편의제공을 말하며, ‘후방지역 수색구조활동’이란 주변 유사시 조난한 병사의 수색구조 활동을 후방지역에서 자위대가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도 1999년 12월 클린턴 정부가 공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미일동맹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초석’으로 정의했다. 이처럼, 냉전 후의 미일 안보는 동아시아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에 따라 전방전개전력으로서 미군의 주둔 유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미일동맹을 2국간 관계의 동맹구조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분쟁방지의 협력틀로서 재평가했다.

## 2. 반테러 전쟁에의 협력과 자위대 해외파병

2001년 1월 미국 공화당의 조지 부시 정권의 탄생과 동년 9월 11일의 뉴욕과 워싱턴에서의 동시다발 테러의 발생은 지금까지의 전통적 안보 개념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 9.11 테러에 경악한 부시 미대통령은 즉각 반테러전쟁을 선포하고, 일본을 비롯한 전통적 우방 국가들에게 반테러전쟁에의 참가를 요청했다.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협력’을 약속했고, 당면조치로서 의료, 수송, 보급 등 후방지원을 행하기 위한 자위대 파견과 정보 수집을 위한 자위대 함정의 파견 등 7항목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일본정부는 10월 29일 대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가결시키며, 해상 자위대의 보급함을 인도양에 파견시켜 미영 군함의 연료보급을 실시했다. 전투중의 미군에 자위대가 지원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일본정부는 1991년의 걸프전의 실패로부터 탈피하여 유사시 미국에게 ‘얼굴이 보이는 지원’으로 정책전환을 함으로써, 미일동맹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위대 해외파병은 군대를 가질 수 없고 전쟁을 못하도록 규정된 일본의 전후 평화헌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성격을 지니므로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각국에게 일본 재무장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켰다.

4년 마다 공표되는 부시정권의 2001년 최초의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은 테러 같은 비대칭위협에 대한 미 본토방위를 중시하고 동아시아지역의 불안정성을 강조했다.<sup>26)</sup> 이는 테러전 수행에서의 책임분담의 중요성을 의미했다. 2002년 일본정부는 자위대의 대미 지원 협력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의 인도양 파견을 결정했다. 2003년 3월 대량

24) 미군에게는 자위대 시설 및 민간공항항만 등의 사용이 허용되고, 자위대는 미군의 활동에 대한 후방지원으로서 보급, 수송, 정비, 위생, 경비, 통신의 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행동반경이 넓어짐.

25) 가이드라인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는 北岡伸一, 「日本の安全保障 - 冷戦後10年の地点から」 『外交フォーラム』 1999년特別編 「21世紀の安全保障-帰路に立つ日本外交」(1999年), pp.25-26.

26) Harry Harding, "Asia in American Grand Strategy :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and the National Security," Robert M. Hathaway and Wilson Lee, eds., *George W. Bush and Asia : A Midterm Assessment* (Washington D. C. :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2003), pp.43-56. 박창권, “21세기 미국의 아태전략과 동아시아 안보,” 이홍표 편 『미국의 해양전략과 동아시아 안보』(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5), pp.29-39.

파괴무기의 확산을 우려한 미국은 이라크 공격을 감행했다. 미국의 단독주의 행동에 국제여론이 양분되는 속에서 고이즈미 정권은 미국을 지지했고, 전쟁종결이 선언된 5월 이후 이라크 부흥지원에 자위대의 파견을 약속하고,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을 성사시켰다. 유엔 주도의 평화유지활동(PKO)이 아닌 미군 주도의 다국적군 지원이라는 점과 사실상의 전쟁 상황이 계속되는 지역에 자위대 파병은 미일동맹의 강화를 상징했다. 2000년 10월 부시 정부의 국무성 부장관에 취임한 아미티지는 ‘미국과 일본-성숙한 파트너십을 향해’ 라는 정책제언 보고서(아미티지 리포트)에서, 미일 안보관계가 진짜로 돈독해지면 아시아에서 분쟁 발발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다며, 미일동맹을 미영동맹의 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킬 필요성을 주장했다.<sup>27)</sup>

일본정부는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형태의 일련의 자위대법 개정과 더불어 일본본토의 유사시를 상정하는 유사법제를 2003년 6월에 제정했다. 또한, 2004년도 12월에 발표된 방위계획대강 제2차 개정에서는 일본은 미일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보다 구체적인 세 가지 중요한 안전보장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국제적 안전보장, 실효적 안전보장, 통합적 안전보장 및 국제적 안전보장이 그것이다. 실효적 안전보장은 육상, 해상, 항공으로 구성된 일본 자위대가 보다 실효적이고도 탄력적, 기능적으로 재편되고 강화되어야함을 천명한 것이고, 통합적 안전보장이란 국제사회, 주일미군 및 자위대가 보다 유기적 통합적으로 행동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국제적 안전보장은 동아시아 이외 지역에서도 국제평화와 일본안전에 중요하다면 일본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또한 중국이 일본에게 ‘위협’임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 IV. ‘72년 체제’의 전환과 중일관계 약화

##### 1. 중국의 급성장과 중일관계

1972년 9월 다나카 내각기에 중일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양국 간에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정치외교적 특수성과 지정학적 인접성,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으로 인해 일본 국내에서 ‘중일 특수론’은 중일 정치경제관계의 긴밀화, 대중원조의 복수년도 총액결정으로 발전했다. 또한 천안문사건 직후는 물론이고, 무라야마 내각기인 1995년도까지 이러한 ‘중일 특수론’은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기능했다.<sup>28)</sup> 일본정부 내에서 다수의견을 차지한 ‘중일 특수론’은 과거를 보아서나 인국에 대한 예의에서 거센 비난은 자제해야 되며, 미국과 같은 입장은 취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다.<sup>29)</sup>

1990년대 전반 중국의 거둬들인 핵실험과 군사비 증대 및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인해 일본정부 내에서 ‘중일 특수론’은 크게 약화된다. 중국이 10%를 상회하는 눈부신 성장률을 배경으로 방위비를 급증시키고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위협론’<sup>30)</sup>이 대두되었다.

27) 『世界週報』 2001年1月30日号, pp. 68-72 ; G. John. Ikenberry, America's Liberal Grand Strategy in the Asia-Pacific, Takashi Inoguchi, ed., *Japan's Asian Policy: Revival and Response* (N.Y.: Palgrave Macmillan, 2002), p.47.

28) ‘중일 특수관계’론의 반대측으로 기능한 것이 ‘서구협조론’으로, 서구 선진국과 보조를 맞추어 적극적으로 대중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우노내각은 89년 7월 목전에 다가온 G7 파리정상회담 및 미일관계를 고려하여 외무성 주도하에 엔차관 동결조치를 취한다. 『日本經濟新聞』 1989年6月21日.

29) 당시 자민당의 가키자와 외교조사회장, 경제동우회의 이시하라 대표간사, 공산당의 가네코 간사장 및 노조인 ‘렌고’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었다. 渡辺昭夫, 「國際政勢變動期における日本の外交政策の決定過程:天安門後の中國と湾岸戦争のケーススタディ」 日本國際問題研究所編, 『1990年代における日本の戦略的な課題』 (1993), p.12.

2005년도 중국의 공식적 군사비는 약 3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일본의 2005년도 방위비 예산 약 45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미 국무성 특별라인의 분석에 의하면, 비공식 잠정 방위비는 600억 달러에서 900억 달러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방위비의 증가율이 매년 14-15%에 달하는 점이다. 중국 방위비의 급증은 중국의 경제성장률 8-10%를 상회하는 속도여서 미국과 일본의 우려를 초래했다. 국방비의 증액으로 신형 전투기와 미사일, 고성능 첨단무기가 강화되었고 핵잠수함의 건조, 항공모함의 건조계획까지 수립한 상황이다.

탈냉전기의 중국의 경제성장은 놀라운 것이었다. 1980년의 국내총생산(GDP)은 3천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약 2조 2천억 달러에 이르렀다. 중국 무역량 역시 2005년도엔 1조 4,200억 달러 (전년 대비 27% 증가) 이상이 되었고 2005년엔 일본의 중국 및 홍콩에 대한 합계 수출액은 128,000억 엔으로서 거의 미국 수출액에 필적했다.<sup>31)</sup>

냉전 후의 불안정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가 미중일의 대국간 관계로 재편성되면서 중일 양국은 상호의 필요성에 의해 협력을 강화시켰지만, 중국의 빈번한 핵실험 강행과 군비증강으로 인해 양국의 갈등도 94년경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는 중국의 군비증강과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자제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정부는 중국의 핵실험에 대단히 민감했다. 1993년 10월의 핵실험에는 호소카와 내각의 하다 외상이, 94년 6월의 핵실험에는 하다 내각의 가키자와 외상이 각각 공식적으로 항의했으며, 94년 3월에 중국을 방문한 호소카와 수상도 핵실험의 자제를 강하게 요청했다.

1995년 5월과 8월에까지 중국이 핵실험을 거듭하자, 일본정부는 무상원조의 동결<sup>32)</sup>을 결정했으며, 중국도 일본의 불충분하고 잘못된 역사인식과 무상원조동결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일본의 열악한 역사인식 비판과 중국의 핵실험 강행에 대한 비판이 악순환되면서 양국관계는 악화되었다. 중국은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었던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지위문제에 반대하는 논조를 펴기 시작했고 1990년대 초반 가이후 내각(海部内閣)이 천명했던 동아시아의 전후적 '특수관계'로서의 '세계 속의 중일관계'는 결정적 위기에 봉착했다.

1996년 이후 급속도로 진전된 미일 안보협력관계의 강화는 핵실험, '대만문제', 센카쿠 열도 문제 등과 함께 중일관계를 긴장시키는 역할을 했다. 중국은 미중 대립이 구조화되어 있고 중일관계가 순탄치 않은 가운데 진행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미일에 의한 사실상의 중국 봉쇄정책으로 간주하고 민감하게 반응했다. 중국은 미일동맹의 존재가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핵무장을 막아주는 역할을 일부분 수행한다고 인식하면서 미일동맹이 아태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군사적 전개를 지원하는 최대의 골격이며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입장을 강화시켜 주는 장치라는 점을 우려했다.<sup>33)</sup>

1997년경부터 중일관계를 호전시키고자 하는 일본정부의 노력이 병행되어, 1997년 3월 대중 무상원조의 재개를 결정했으며 외무성과 방위청의 실무당국자들이 중국을 방문하여 방위협

30) 小島朋之 「高速度發展の中の中國脅威論」 (1993). 다나카는 '중국위협론'에 대응하는 일본의 대중방책으로서 리얼리즘적 관점에서의 방책 (군사강국화의 저지, 불안정화의 저지)과 리베러리즘적 관점에서의 방책 (경제발전의 촉진, 정치체제의 개방화, 다국간 국제제도로 유도)등을 제안. 田中明彦 「東アジア國際政治と対中政策」 『東亜』 No.319, 1994년1월 (1994).

31) 外務省, 「最近の中國情勢と日中關係」 [http://www.mofa.go.jp/mofaj/area/china/kankei\\_02.html](http://www.mofa.go.jp/mofaj/area/china/kankei_02.html) (검색일 : 2007.10.25). 미국 22.5%, 중국+홍콩 19.7%, 수입액에 있어서는 중국이 단독으로 21%를 차지하여 미국의 12.4%를 능가했다.

32) 무라야마(村山) 내각의 무상원조 동결결정은 'ODA대강 및 중일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실시.

33) 중국은 96년에 두 가지의 중요한 외교노선 전환을 모색한 바, 소극적이었던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을 선언함.

력지침 개정의 중간내용을 설명했다. 1996년의 위기상황을 거치면서 '협조적 경쟁관계'의 다각적 구축에 몰입했던 일본은 중일관계를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키면서도 정치외교적으로는 선택적 협조와 경쟁이라는 보통관계로 환원코자 했다.<sup>34)</sup> 동아시아 지역에서 1997년경부터 확대된 '협조적 경쟁'의 다각적 구축은 중일관계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1998년 11월의 장쩌민 국가주석의 일본 공식방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정상회담에서는 '중일 공동선언'을 채택하여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호협력 파트너십'의 구축에 합의한 반면, '역사인식문제'를 중심으로 양국 간의 의견 상충이 극명해진 점도 분명했다. 일본정부는 과거사 사죄의 공동선언 명기를 원하는 중국의 요구를 거부했으며, 대만문제에 있어서도 미정부와 같은 명확한 '삼불정책'을 약속하지는 않았다. 장쩌민 국가주석은 방문기간 중 내내 역사문제를 거론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장쩌민 국가주석의 방일을 통해 양국은 우호협력 파트너십을 선언하면서도, 역사인식문제로 인해 본격적인 관계개선의 실현은 고사하고 쌍방 간의 감정만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이후 중일 간에는 협조와 경쟁을 반복하는 양상을 띠었다. 정치적으로는 대립하면서도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높이는 보통의 관계를 유지한 것이다. 일본의 정찰위성의 도입과 전역미사일 방어체제(TMD) 참가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표면화시키면서도, 코소보 문제, 핵기술 스파이의혹 등을 놓고 미중관계가 또 다시 냉각되자, 중국은 장쩌민의 방일 이후 '신방위협력 지침'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비롯한 일본의 일련의 보수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대일비판을 자제했으며, 일본은 1999년 7월의 오부치(小淵) 수상의 중국방문을 통해 중일관계의 개선을 시도했다.

## 2. '72년 체제'의 전환과 갈등

일본정치의 '2003년 체제'에서는 미일동맹이 강화된 반면, 중일관계는 전후적 '특수관계'에서 탈전후적 '보통관계'라는 '72년 체제'<sup>35)</sup>의 전환이 명백해졌다. 1998년 '장쩌민 방일' 이후 경제적 협력과 외교적 견제를 반복하면서 선택적 협조와 경쟁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던 중일관계가, 고이즈미 수상의 계속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계기로 급속히 악화되었다. 중국은 고이즈미 내각의 역사인식의 미흡에다 2003년 여름경부터 구 일본군 독가스사고에서부터 2004년도 센카쿠열도 영유권분쟁까지 발생하여 대일여론 악화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2005년도에는 동중국해 해양자원 조사문제의 갈등을 비롯하여 교과서 왜곡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 일본의 유엔안보리 진출문제까지 겹치고, 중국에서 대규모 반일시위가 중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 발생함에 따라 중일관계는 '72년 체제' 하에서는 상상키 어려운 심각한 국면을 맞게 되었다. 중일간의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갈등의 증폭은, 이제 더 이상 중일관계가 '72년 체제'의 안정된 제도적 틀 안에 머물고 있지 않음을 입증했다.

고이즈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위시해서, 해양자원조사 마찰, 교과서왜곡 마찰, 엔차관 협력 중단론 등 다양한 갈등적 쟁점이 동시다발적으로 표출되었다. 첫째,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중국정부의 불만과 중국의 반일시위 격화에 대한 일본정부의 불만이

34) 五百旗頭眞(1999), pp. 32-33.

35) 중일관계의 '72년 체제'란 1972년 다나카내각과 마오쩌둥 \* 저우언라이 정권이 국교정상화에 합의하여 작성한 '중일 공동성명'과 후쿠다내각기 때 덩샤오핑 \* 화궈펑 정권과 합의한 '중일 평화우호조약'을 두 축으로 하여 성립되어, 정치외교의 정상화, 경제교류의 긴밀화, 미중일 외교안보 제휴로 발전한 중일관계의 기본틀을 의미한다. 손기섭, "중일 정치경제관계에서의 '72년 체제'의 발전과 전환" 『일본연구논총』 제19호, 현대일본학회 (2004), pp. 94-96. ; 国分良成, 「冷戦終結後の日中関係—72年体制の転換」 『国際問題』 2001, No.490.

상호 대립되었다. 야스쿠니 참배문제가 중일관계의 개선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로서 2005년 4월 중국 국내의 심각한 반일시위에 봉착했다. 고이즈미는 재임 중에 한국과 중국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매년 한 번씩 참배했다. 중국정부는 후진타오 국가주석 및 리자오싱 외상, 원자바오 총리가 직접 나서서 공개적으로 고이즈미 일본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중지를 요구했으며, 반일시위 격화의 원인이 일본에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정부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공조와 중국 고속철도의 신칸센 수주와 관련해 중국과 관계개선을 도모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나, 일본정부도 반일데모로 입은 피해보상과 사과를 요구하고, 2008년도를 시한으로 대중 엔차관 협력의 중단을 통보했다.

둘째, 동중국해의 영토문제와 해양자원 개발을 둘러싼 중일 갈등이 격화된 바, 센카쿠열도 영유권문제와 동중국해 천연가스 발굴 갈등이다. 1978년 후쿠다 내각 때 중일 평화우호조약이 체결된 이후 잠복해 있던 센카쿠열도의 영유권 분쟁이 2004년도 경부터 현안 쟁점으로 등장하여 중대한 외교문제로 비화했다. 중일간의 영토 및 영해 영유권문제는 센카쿠열도 영유권 자체의 문제와 동중국해 해양자원조사문제의 두 문제로 나뉘어 전개되는 양상이다. 중국은 2003년 8월경부터 중일 중간수역에서 춘샤오(春曉), 단차오(斷橋)의 두 천연가스전을 개발 중임을 표면화시켰고, 이에 대항하여 일본정부는 동년 7월부터 동 수역 주변의 지층구조를 조사했다. 일본정부는 2005년 4월 춘샤오, 단차오 두 천연가스전은 일본과 연결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국측에 자료제공과 개발중지를 요구했다. 중국의 반응이 없자 경제산업성은 4월 13일 일본 민간기업이 신청한 시굴권을 인가하는 수속에 착수했으며, 실제로 2005년 7월에 '테이코쿠세키유'(帝國石油)에 시굴권을 부여했다.<sup>36)</sup>

셋째, 일본의 대중 엔차관 감액과 중지를 둘러싼 갈등이다. 1979년도 오히라 내각기에 처음 결정되어 제4차 엔차관 패키지를 거쳐 현재 단년도 베이스로 제공되는 대중국 엔차관협력액은 2005년 4월 17일에 열린 중일 외상회담에서, 마치무라 일본외상이 중국 리자오싱 외상에게 2008년도 북경올림픽을 끝으로 공식적으로 종결할 것을 통보했다. 2001년도 이후 대중 엔차관의 감액 및 불요론의 대두와 관련된 양국의 갈등도 깊어졌다.<sup>37)</sup> 2000년도 이후 일본정부는 대중 엔차관 제공과 관련하여 매년도 단위의 공여, 환경보전과 인재육성 중시, 일본 국익 중시, 대중 외교카드인 점을 분명히 했다.<sup>38)</sup> 대중 엔차관은 3년 연속 20%정도 감액된 바, 14년 만에 1000억엔 이하로 떨어졌으며, 일본의 대외원조 총액이 1위 인도, 2위 인도네시아에 이어 3위로 떨어진 것이다. 일본정부는 재정적자로 정부개발원조(ODA) 예산을 삭감하는 가운데, 급속한 경제성장을 계속한 중국에 대한 엔차관 공여 비판을 수용했던 것이다.

넷째,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문제에 대한 갈등이 2005년에 증폭되었다. 일본정부는 2005년도 유엔 안보리 확대 개혁안을 G4와 연대하여 제출함으로써,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고자 의도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미국이 대폭적인 유엔 상임위 개혁에 소극적이고, 중국과 한국 등 동아시아 주요 각국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G4와 AU와의 연대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대표성을 강조했다지만, 가장 중요한 한국과 중국과의 교감이 없었다.<sup>39)</sup>

양국 사회의 근간에는 상호 불신감도 증대되어 '중국위협론' 대 '일본 군국주의론' 갈등으로

36) 일본 외무성은 중일관계의 혼란을 이유로 소극적이었지만, 수상관저는 경산성 지지의 정치결정을 내렸다.

37) 대중 엔차관원조에 대해서는 Orr, Robert M., *The Emergence of Japan's Foreign Aid Power* (N.Y., Oxford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0) ; Yasutomo, Dennis T., *The Manner of Giving : Strategic Aid and Japanese Foreign Policy*, (D.C. Health and Company, 1986) ; 손기섭, "일본의 대중 정부간 경제협력의 정책 결정," 서울대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3호 2004년, 가을호.

38) 일본의 ODA 전략 전체가 '국익'과 '국제공헌'과의 균형을 강조하는 가운데, 대중 엔차관 원조는 수정과 재고의 비판대에 올랐다.

비화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일본정부는 2004년도 12월에 발표된 ‘방위계획대강 제2차개정’ (신방위계획대강) 및 2005년도 방위백서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급성장과 방위비 증대 및 핵능력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과 더불어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기했다. 일본의 2005년도 방위백서에 ‘중국의 위협’이 명시됨에 따라, 중국 외교부는 이것을 ‘완전히 근거 없는 것으로서 무책임한 행위’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한편, 고이즈미 때에 중국정부가 직접 일본 군국주의론을 퍼지는 않았으나, 중국 국내의 반일감정이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띠었다.

## V. 후쿠다 정권의 시련과 동아시아 외교

### 1. 후쿠다 정권의 시련과 보수주의

2008년도 6월 시점에서 후쿠다 내각의 인기도는 별로이다. 내각지지율이 겨우 25% 전후에 불과한 모습으로 국민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모습이다. 우유부단한 후쿠다의 정치리더십, 경제 구조개혁의 부진, 경제지표의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하지만 이것은 한편으로 일본의 보수주의 정치노선의 심화가 후쿠다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성격도 간과할 수 없다.

2007년 9월 23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는 아소 타로(麻生太郎) 전 자민당간사장을 누르고,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었고, 중의원에서 일본의 제91대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후쿠다 내각은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 후의 전임 아베 개조 내각을 이어받았다. 전체 각료 17명 중 13명이 재임되고, 각료이동 2명, 신임이 2명인 ‘필요최소한의 교대’에 그쳤다. 이는 차기총선을 위한 선거관리내각의 성격을 나타내며 위기에 처한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을 다진 의미가 있었다. 또한 자신의 내각을 ‘배수의 진 내각’으로 명명하여, 참의원 선거의 패배로 역전된 참의원 상황 하에 11월 1일 기한의 대테러대책 특별조치법의 기한연장을 비롯한 중대한 안전에 대한 비장감을 드러내었다. 1990년대 초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젊은 자민당 간사장이었던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가 대표로 있는 최대 야당 민주당은 후쿠다 내각을 국민의 민의를 얻지 않은 불충분내각으로 규정지어 대결자세를 가속화해오고 있으며, 국회해산을 통한 총선실시를 노리고 있다.

후쿠다 정권의 대체적인 정책방향성은, 야당과의 대화, ‘희망과 안심의 정치’, 동아시아 외교 복원 등이다. 먼저, 후쿠다 수상은 국회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민주당을 비롯한 제 야당과의 성의 있는 대화를 추진할 것을 언명한 ‘저자세 국회운영’을 표방했다. 정책과제를 두고 야당과의 대화에 성의 있게 임한다는 자세를 나타내었고, 이는 이후의 정국운영에도 잘 나타났다. 이는 아베 정권 시기의 대결적 국회정치보다는 야당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노선을 설정한 것이며 이는 참의원 역전 상황 속에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지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희망과 안심의 정치’를 표방했다. 이는 생활자의 정치를 표방한 것으로, 개헌이나 교육기본법 등 이념에 치우친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고통에 다가가는 정치, 중앙과 지방 등 격차 줄이기 정치,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의 대비한 생활자의 정치를 표방하여, ‘따뜻한 정치’를 약속했다. 투명한 정치자금법으로의 개혁과 중앙-지방 ‘격차’ 줄이기,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안심을 보장하기 위한 행재정개혁 등을 천명했다. 외교 면에서는, 미일동맹과 국

39) 외무성의 니시다 외무심의관은 우다웨이 중국 외무차관과 회담하면서, 일본 개혁안에 대한 중국의 저지노력에 대해 너무 심한 네거티브 활동은 일본 국민감정을 해친다며 비판했다. 『朝日新聞』 2005년 8월 25일.

제협조가 일본외교의 기본임을 천명한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6자회담에서의 국제사회와의 연계, 적극적인 아시아외교 추진, 러시아와의 영토문제에서의 끈기 있는 협상 지속 등을 약속했다. 특히, 한국과는 미래지향적 신뢰관계를 강화하며, 중국과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확립할 것을 희망했다.

후쿠다 정권의 외교정책은 아베정권의 2006년 11월의 신전략선언인 '가치의 외교'의 추구와 '자유와 번영의 호' 외교안보 연대 구축을 추진은 계속될 것이나 그 강도나 추진방법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21세기의 일본 외교전략은 미일동맹을 토대로 EU, 호주에다 인도와 중앙아시아와의 외교안보 연대 국제메커니즘을 구축하는 전략적 방향성은 계속되고 있지만, 후쿠다 정권의 경우 중국, 한국, 북일관계 등 동아시아 외교의 복원을 통한 '가치의 외교'를 추진한다. 동아시아 외교에 대해서 고이즈미, 아베 시기보다는 훨씬 더 온건하고 유연한 외교가 추진되는 상황이다. 고이즈미의 동아시아 외교는 미일동맹의 강화와 유사법제 및 자위대법의 정비 등에만 치우쳐, 동아시아에 대한 진정한 배려가 부족했다. 중일관계는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비판이 주요인이 되어 악화일로를 걸었으며, 한일관계 또한 난관에 봉착했다. 아베 시기는 악화된 외교관계를 일정부분 완화시켰으나 미진한 범주에 머물렀다.

첫째, 동아시아 외교의 최대 장애요인이었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후쿠다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외교의 복원'을 의미한다. 차제에 일본정부가 '야스쿠니문제'의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 즉 새로운 전몰자 추도시설의 건립이라든가 A급 전범 위패의 분리도 고려될 수 있겠지만, 위패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새로운 추도시설의 확립이 바람직하다.

둘째, 아베 정권기에 딱 막힌 북한문제 해결 실마리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일본의 북한문제는 국제적 공조를 통한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문제에 대한 해결과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이다. 아베 내각기는 북한문제에 있어서 강경일변도였다. 이에 비하면, 후쿠다는 고이즈미 내각기의 장수 관방장관으로서, 외무성의 대북한 정책에 있어서 히라마츠 동북아과장, 다나카 히토시 심의관, 후쿠다 관방장관, 고이즈미 수상으로 연결된 온건라인의 최고책임자였다. 이러한 대북한 온건라인의 최고 정책결실이 2002년 9월 17일의 고이즈미 제1차 대북한 방문과 '평양 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 이 점을 고려하면, 후쿠다는 대북한문제에 있어서 미일공조의 틀 속에서 때로는 북한과 비밀협상으로 납치문제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신중하면서도 실리적인 정책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나온 상황은 아니다. 한국, 미국과 연계하여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한 단계적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따라서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를 완화시킬 가능성은 높다. 문제는 내각지지율이 워낙 낮아서 충분한 리더십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한일관계는 고이즈미나 아베 때보다 훨씬 순항하고 있으며, 한국의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가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4월 하순 한미동맹을 전략적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강화함으로써, 미일동맹과의 균형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미국을 매개로 한 한미일은 유사 동맹성은 그 강도가 강화된 것은 분명하다. 실질적으로 북한 핵폐기 문제를 비롯하여 21세기 초엽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으로서 전략적 제휴의 강도가 강화되었다. 또한 '동아시아공동체론'에 대한 접근방식이나 지구적 문제의 해결 등에서 한일공조가 고양될 수 있는 정책구상도 가능하다. 후쿠다 수상은 이명박 신정부의 출범의 축하사절로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서틀외교의 복원과 경제각료회의의 개최에 합의했다. 한일 양국은 관계개선의 절호기를 맞았다. 이명박 신정부의 경제 실리외교의 전개와 후쿠다 수상의 적절한 역사관, 동아시아 외교 복원 표명은, 앞으로 한일 FTA의 체결, 북핵문제에의 공조, 정상외교의

가속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중일관계는 2007년 봄 아베-원자바오가 약속한 ‘전략적 호혜관계’의 틀을 유지 확대하는 선에서 점진적 관계개선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중일 간에 동중국해 해저자원, 특히 천연가스의 개발을 두고 충돌할 여지가 있으며, 중국 해군력의 지속적 증강도 위협요인이다. 양국 모두 판을 깨는 정도의 위험성을 선호하지는 않은 점은 최근 2008년 5월 후진타오의 방일을 통해 전략적 호혜관계를 확인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 2. 미일동맹과 중일관계의 상관성과 보수주의

첫째, 미일동맹은 1996년도 미일 안보 공동선언 이후 매우 강화되는 양상을 거듭해왔고, 이에 따라 중일관계는 약화되고 이완되는 작용을 보였다. 즉 1990년대 중반이후 미일동맹과 중일관계는 상호 비대칭적 역행의 방향성을 보인다. 걸프전의 결과가 대변하듯이, 90년대 전반에는 미일동맹의 의의와 역할이 유동화 되면서, 일본의 미일동맹에서의 역할이 모호해졌고, 이 점을 미국정부가 비판했다. 일본은 이 시기에 동아시아의 다각적 안보협력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핵실험과 군사비 증액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을 계기로, 결국 미일 양국은 96년 이후 미일동맹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제반 정책조치를 취했다. 미일동맹의 강화는 21세기 일본의 새로운 국가전략 구상과 국방계획에 토대를 둔 것이다. 전후에서 2007년까지의 미일동맹과 중일관계의 상관성과 변화추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미일동맹과 중일관계 상관성

시기 변수	1949 - 1972	1972 - 1996	1996 - 2007
미일동맹	미일 안보조약 유지 (동맹성 : 중)	미일 안보조약 발전 (동맹성 : 중)	미일 동맹 강화 (동맹성 : 강)
중일관계	국교 미수립(정경분리) (관계성 : 약)	‘72년 체제’ 발전 (관계성 : 강)	‘72년 체제’ 전환 (관계성 : 중)

둘째, 일본정치시스템이 ‘55년 체제’에서 ‘2003년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노선도 중대한 전환을 이룬 점이다. 즉, 일본은 평화헌법의 개헌, 미일동맹의 강화, 전수방위의 수정과 실효적 방위력 구상, 안보리 상임위외교 지향 등 신보수분류적 정책노선으로 전환했다. 중일관계에서는 전후적 ‘특수관계’인 ‘72년 체제’에서 탈전후적 ‘보통관계’로서의 ‘2005년 체제’의 속성을 명백히 했다. 이는 중일관계가 더 이상 70-80년대적 전후적 특수관계로서가 아니라 21세기적 일본의 ‘국익’의 관점에서 선택적 경쟁과 협조를 병행함을 의미한다.

셋째, 2005년도 총선 이후의 대중외교는 이러한 탈전후적 보통관계로서의 중일관계를 추구했다. 고이즈미 내각은 강화된 정치주도권을 바탕으로 중일간의 상당한 정치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면서도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멈추지 않았다. 고이즈미의 정치신념은 신보수분류의 강경노선에 입각해 있었으며,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이러한

일본의 구조적 속성은 앞으로도 역사인식, 해양자원, 국방계획 등의 중일 간의 갈등적 쟁점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더욱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중일관계가 더욱 악화된다면, 그 기폭제는 동중국해 천연가스 개발문제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 중일 간에 해양자원을 두고, 자칫 감정적 외교전으로 비화하면, 민족주의 고조로 반일시위, 반중감정의 팽배를 몰고 올 것이며, 소규모 제한적 군사적 충돌을 배제할 수 없는 위험성이 상존한다.

넷째, 2006년 후반기에 등장했던 아베 내각은 악화된 동아시아외교를 개선하고자 정권 직후에 한국과 중국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개선을 시도했고, 2007년 초 원자바오 수상일 일본을 방문하여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나, 진심으로 중일관계를 복원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인도, 호주, 중앙아시아와의 외교안보 연대 구축을 시도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는 대중국 대책의 전략적 선언의 의미가 높으며, 일본정치의 '2003년 체제'가 잉태한 중일관계 약화라는 구조적 속성을 해결할 수 없었다. 또한 일본의 국익외교를 강조하고 애국심과 일본적 전통의 미학을 강조한 아베정권은 고이즈미 이상의 보수성을 간직한 바, 고이즈미 외교의 밀폐성을 어느 정도 해소는 시켰지만 갈등의 근원을 풀 수 있는 정권역량을 가지지는 못했다.

다섯째, 후쿠다 정권은 '배수의 진 내각' 즉 중차대한 정책과제를 많이 남겨놓고 국회에서 참의원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과 씨름을 벌여야만 하는 정권이다. 특히, 인도양 상에서 미전함에 해상자위대에 의한 급유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대테러대책특별조치법'의 연장은 불가능했고 신법을 상정한 바, 민주당의 반대 속에 우여곡절 끝에 겨우 통과되었다. 나아가, 연금문제, 소비세문제 등 해결해야 될 정치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며, 이러한 제 정책과제의 해결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후쿠다 내각의 동아시아외교가 전임인 고이즈미, 아베 외교보다는 희망적일 수 있지만, 이는 후쿠다 내각의 정권기반이 흔들릴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후쿠다 내각이 상반기 국내정치 과제와 2008년 7월의 G8 정상회담을 무난히 마친다면, 중일관계, 북일관계, 한일관계의 제 동아시아 외교과제 해결이 제대로 탄력을 받을 것이나, 그 가장 큰 변수는 내각지지율 회복을 통한 총선 승리일 것이다.

## VI. 결론

<표> 보수주의 정치노선의 전개도

분석변수	보수분류노선 (요시다, 이케다, 사토)	보수방류노선 (하토야마, 기시)	신보수분류노선 (고이즈미, 아베)
개헌	호헌	개헌	개헌
자위대	전수방위 점진적 재무장	재무장	재무장 평화국가 유지
미국	미일 온건동맹 대미 협조외교	미일 온건동맹 대미 자주외교	미일동맹 강화 대미 협조외교
중국	정경분리 민간무역	국교 추진 일중 특수관계	선택적 협조 일중 보통관계
역사인식	동아시아 일원	일본정신 강조	일본정신 강조 야스쿠니 참배

현대일본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 국제학술회의

“일본시민사회의 재편과 역사인식의 정치”

“Advocacy Groups in Japan and Politics of History”

Tsujinaka Yutaka(츠쿠바대 교수)

“Civil Society with Government Intervention?”

Robert Pekkanen(University of Washington)

"일본의 보수 우경화와 시민사회의 구도"

정미애(국민대)

# Political Advocacy Groups in Japan

Yutaka Tsujinaka (University of Tsukuba)

2008 International Conference in Commemo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Grand Hotel, Tsingtao, China, July 4th – 5th, 2008

# Roadmap

- 1) What are neighborhood associations (NHAs)?
- 2) NHA survey methodological overview
- 3) Presentation of the analysis
  - What factors affect on providing social services by an NHA?

# Japanese NHA

- Studied by sociologists & political scientists
- “Voluntary groups whose membership is drawn from a small, geographically delimited, and exclusive residential area (a neighborhood) and whose activities are multiple and are centered on that same area.”
- Japan’s most prevalent civil society organization
  - Nearly ubiquitous (300,000 across Japan)
  - Membership nearly universal  
(roughly 80-90% all households)
  - Participation widespread
  - Engaged in broad variety of activities centered on a local comm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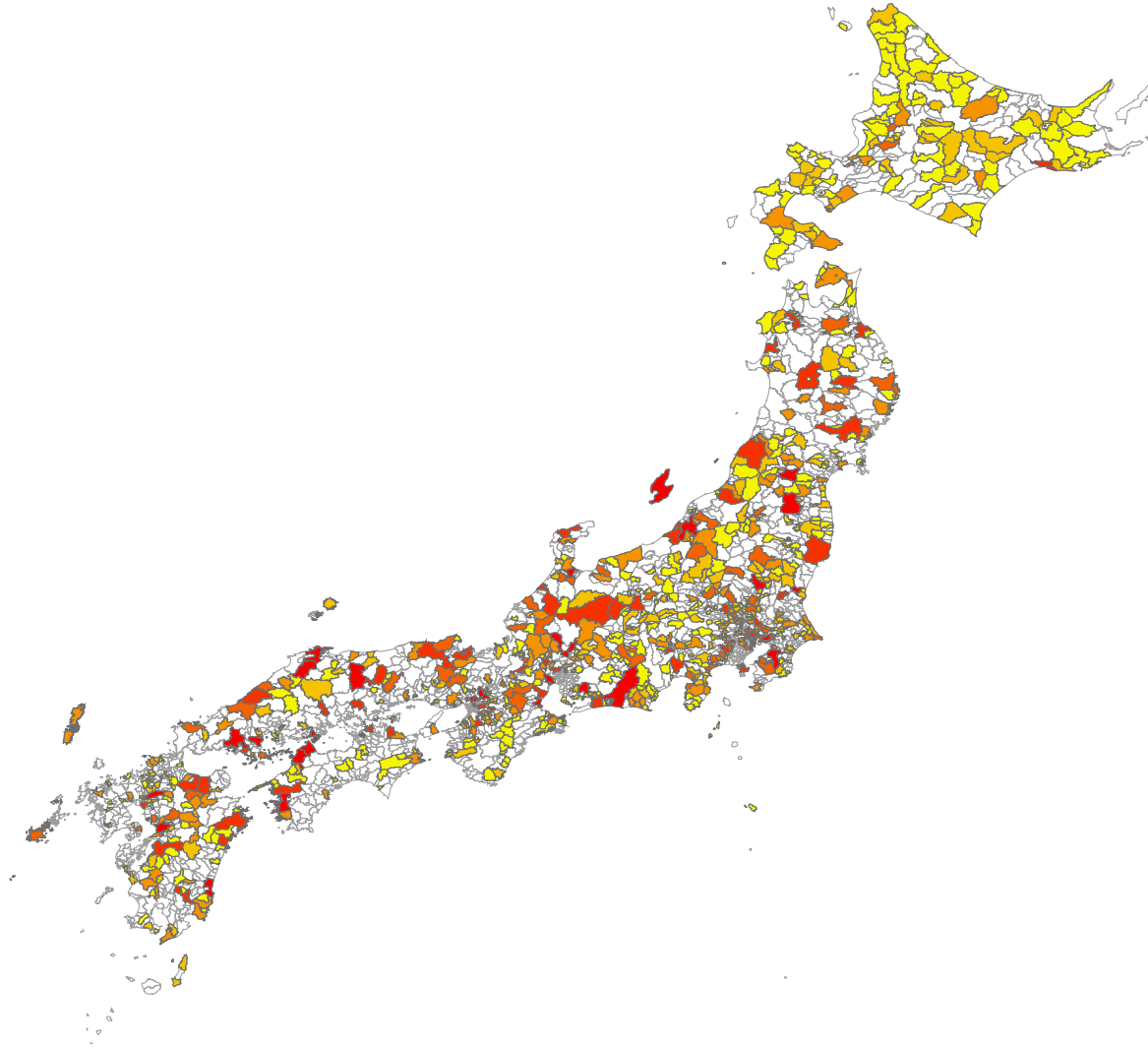
# First-Ever Nationwide Neighborhood Association (NHA) Survey

- The government has shied away from such surveys
- Enormous cost and practical difficulties have dissuaded researchers from attempting this
- Yet, clear benefits—for one example, the first chance to systematically study regional variation

# Methodology

- Date: August 2006 - January 2007
- Questionnaire
  - 43 questions and 138 subquestions
  - Questions about the NHA itself, as well as its relationship to the state and also to othe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 Methodology: Mail Survey
- Design Sample: 32,298 (Random Sampling)
- Sample Size: 18,404 (Return Rate: 56.2%)
- Local governments assisted us in distribution of questionnaires
  - 896 of 1,843 municipalities helped us

# Municipalities That Helped our Survey



# Providing Social Services

- **Maintain the living environment**
  - maintenance of local roads
  - cleaning up the community
- **Resolve Local Problems**
  - taking care of the elderly
  - fire and crime protection
- **Develop Social Bonds**
  - hold community festival and recreational events
  - ceremonial occasions
- **Manage Local Property**
  - management of the assembly hall
  - maintenance of the bulletin board

# Providing Social Services

Cleaning up	87.2%	Assembly hall management	63.7%
Maintenance of community roads	86.5%	Cooperation with local schools	63.0%
Holding the festival	73.8%	Fire protection	59.2%
Eldercare	69.8%	Natural disaster management	54.5%
Garbage collection	69.3%	Promotion of traffic safety	53.1%
Ceremonial occasions	67.8%	Youthcare	52.3%
Holding recreational events	64.2%	Crime protection	52.0%

# Research Question

- Providing Social Services is expected to make residents' life better.
- If so, what factors affect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 ⇒ other civil society elements?
    - : social capital, governmental support ,  
coalitions with other associations
  - ⇒ Is mechanism different by the regions?

# A Variety of Competing Explanations

Organizational features	Characteristics of the NHA, such as its size
Social capital	Nature of the human networks in local community
Urbanness	Features of the city/town/village in which the NHA exists
State	Relationship with the local government
Network	Relationships with other local groups

# What Factors Affect on Providing Social Services?

- **Social Capital**

- Social Capital promotes people to cooperate collective action. Then, an NHA can engage in many activities based on many participations.

- **Governmental Support**

- An NHA that is supported by government has many resources (information, money etc) and can engage in many activities.

# What Factors Affect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 Coalition with Other Associations
  - An NHA that has coalition with other associations has many resources (information, manpower, money etc) and can engage in many activities.
- NHA size
  - A large scale NHA has many manpower and money. Then, it can engage in many activities.

# Measurement

- Providing Social Services
  - PCA scale of activities that are done by 30% NHAs.
- Social Capital
  - closeness of relationships among residents (1-3).
  - PCA scale of participant rates of 7 main activities.
- Governmental Support
  - the number of activities that an NHA cooperates with local government
  - subsidy from local government (logarithm)

# Measurement

- Linkages with other local groups  
PCA scale of coalitions with other local associations.
- NHA size  
number of members (logarithm).
- In addition, we control for ...  
population of city (logarithm), increase of  
population in NHA area, % elderly household,  
urbanness (% area farmland)

# Hypotheses

- These variables will have positive correlation with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 Size of NHA (organizational features)
  - Reported closeness of relationships among local residents (social capital)
  - Participation rates in activities of NHAs (social capital)
  - Size of city (urbanness)
  - % of farmland (urbanness) [negative correlation]
  - Governmental support of NHA (state)
  - Linkages to other local groups (network)

# Do these variables differ by region?

-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factors stated above and regional variables.

	population of city	increase of population	elderly pop.	farmland
providing social services	.150 *	.175 *	-.065 *	-.055 *
relationship among residents	-.215 *	-.121 *	-.026 *	.275 *
participation rates	-.282 *	-.136 *	-.019 *	.333 *
coalitions with local government	-.045 *	.076 *	-.052 *	.103 *
subsidy from local government	-.081 *	-.002 *	.019 *	.026 *
coalition with other local associations	.124 *	.128 *	-.071 *	.044 *
NHA scale	.299 *	.390 *	-.131 *	-.239 *

\*:p<.01

#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Because of huge N (18,404), we will get significant results, even if the variable has only weak influence.
- Then, we will confirm effect of each variable by improving model fitting (increasing R square).

- Model

Model1: only regional variables

Model2: social capital + regional variables

Model3: governmental support + regional variables

Model4: coalition with other associations + regional variables

Model5: NHA Scale + regional variables

Model6: Full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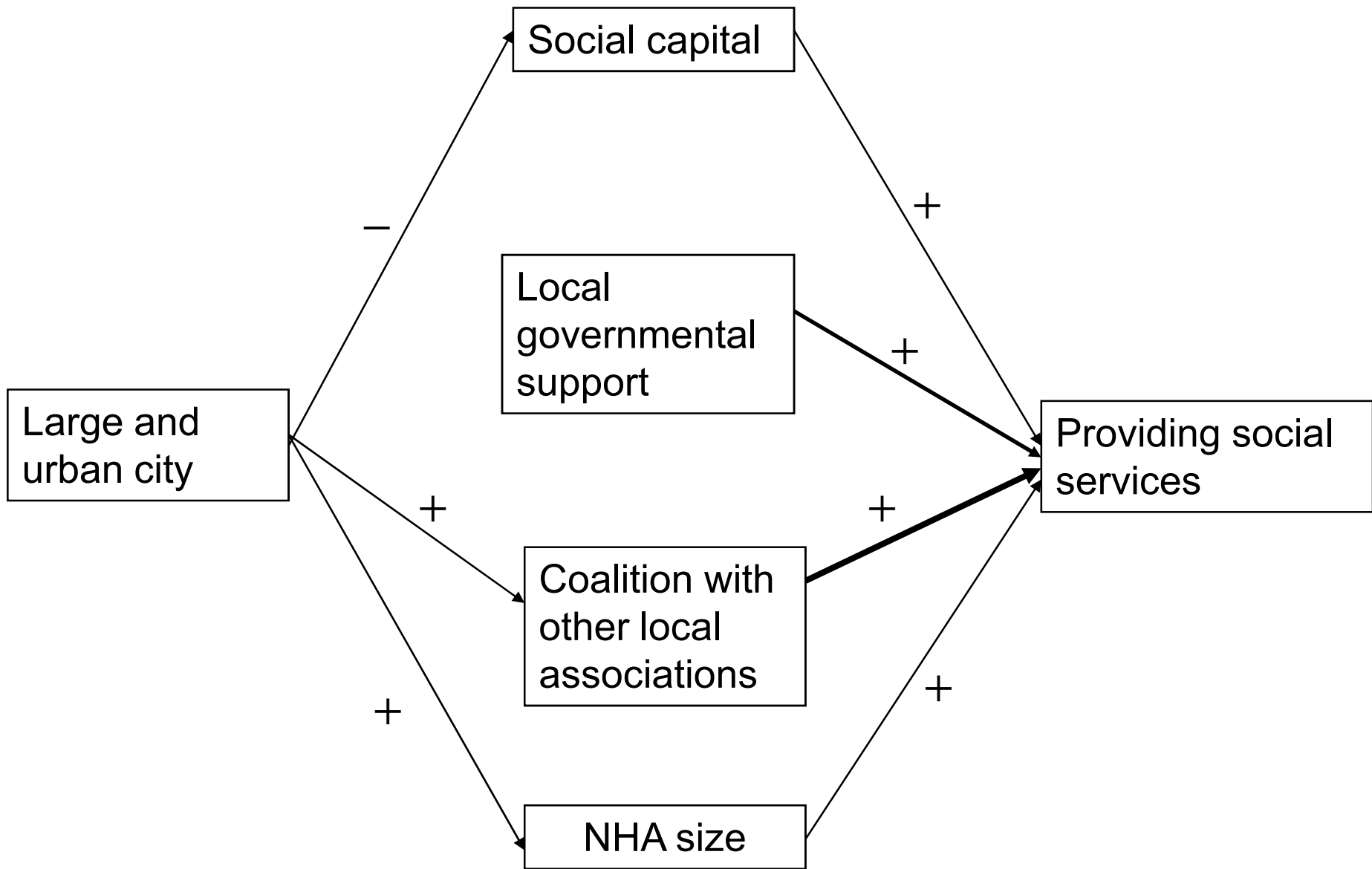
#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s	Model1	Model2	Model3	Model4	Model5	Model6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s	–	.114*	–	–	–	.059*
participant rates	–	.139*	–	–	–	.132*
coalitions with local government	–	–	.367*	–	–	.182*
subsidy from local government	–	–	.189*	–	–	.037*
coalition with other local associations	–	–	–	.561*	–	.363*
NHA size	–	–	–	–	.387*	.225*
population if city	.124*	.128*	.139*	.045*	.056*	.072*
increase of population	.142*	.159*	.070*	.088*	.016	.029*
rates of the elder	–.024	–.016	.005	–.003	–.010	.022
rates of farmland	–.007*	–.083*	–.043*	–.061*	.053*	–.078*
adjusted R square	.046	.073	.230	.348	.163	.354
$\Delta R^2$	–	.027	.184	.302	.117	.308

\*:p<.01

# Findings

- Our hypotheses about how variables will affect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were confirmed.
- Coalition with other associations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Local governmental support is also influential.
- Urban NHAs have more coalitions with other local associations and tend to be of larger size. Therefore, they provide more social services.



# Two ways of mechanism that are different by cities

- In small and rural city, an NHA engages in providing social services based on social capital.
- In large and urban city, an NHA is embedded in local civic governance structure.
  - Coalition with other local association is more. It is influential on providing social services.
- We can find these regional variations by using nation-wide survey.

# Civil Organizations with Government Intervention?

Robert Pekkanen (University of Washington)  
Jaeho Yeom (Korea University)

2008 International Conference in Commemoration of the 30<sup>th</sup>  
Anniversary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Grand Hotel, Tsingtao, China, July 4<sup>th</sup> – 5<sup>th</sup>, 2008

# Contents

1. Introduction
2. Characteristics of Korean Civil Organizations
  - (1) Social Characteristics
  - (2)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3. Change of Civil Organizations & Policy Process in Democratization
4. Discussion & Prospect

# Introduction

- Civil organizations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 The power of *netizen* (network citizen)
- Increasing power of civil organization in the policy process
- Institutional change of governance?
- New trend of citizen participation in democratization

# Social Characteristics of Korean Civil Organization

- Recent origins of civil organizations
- Massive political influence of civil organizations
- Interest in national issues rather than local issues

# Social Characteristics of Japanese Civil Organization

- Civil organizations without advocates
- Long history of civil organizations
- Interest group oriented
- Strength of economic groups
- Plethora of small local groups & paucity of large professionalized groups

# 1. Origins of Korean civil organiz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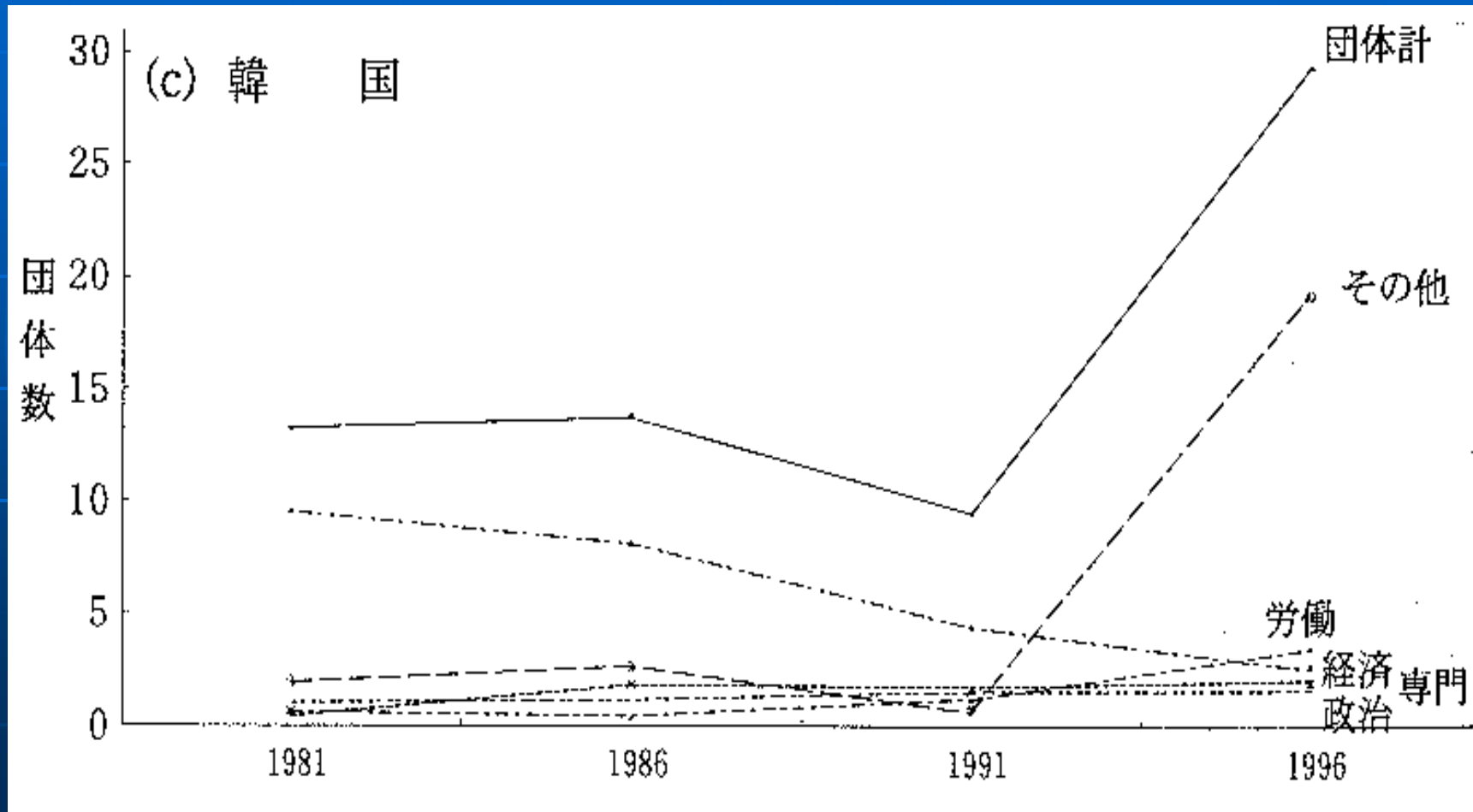
- From *Jaeya* (political outsiders) groups to civil organizations
- 40.35% of civil organizations established since 2000 (as of 2006 survey)
- Coincidence with Tsujinaka & Yeom's research in 2004
- Increase of life politics organizations including environment organizations
- Increase of on-line organizations

## Table 1. Development of Civil Organizations in Korea

Category/ Year	1997 (%)	2000 (%)	2003 (%)	2006 (%)
<b>Civil society</b>	588(29.4)	1007(29.6)	994(26.4)	1633(30.5)
<b>Local autonomy/ poverty</b>	95(4.7)	234(6.8)	216(5.8)	322(5.9)
<b>Social service</b>	451(22.5)	751(22.1)	1290(34.3)	1001(18.6)
<b>Environment</b>	122(6.1)	283(8.4)	405(10.8)	737(13.8)
<b>Culture</b>	447(22.3)	639(18.9)	429(11.3)	535(9.9)
<b>Education/ academics</b>	129(6.5)	232(6.9)	138(3.6)	351(6.6)
<b>Labor/ farmers</b>	169(8.5)	246(7.3)	297(7.8)	161(2.9)
<b>On-line organizations</b>				630(11.8)
<b>Total</b>	2,001(100)	3,392(100)	3,769(100)	5,37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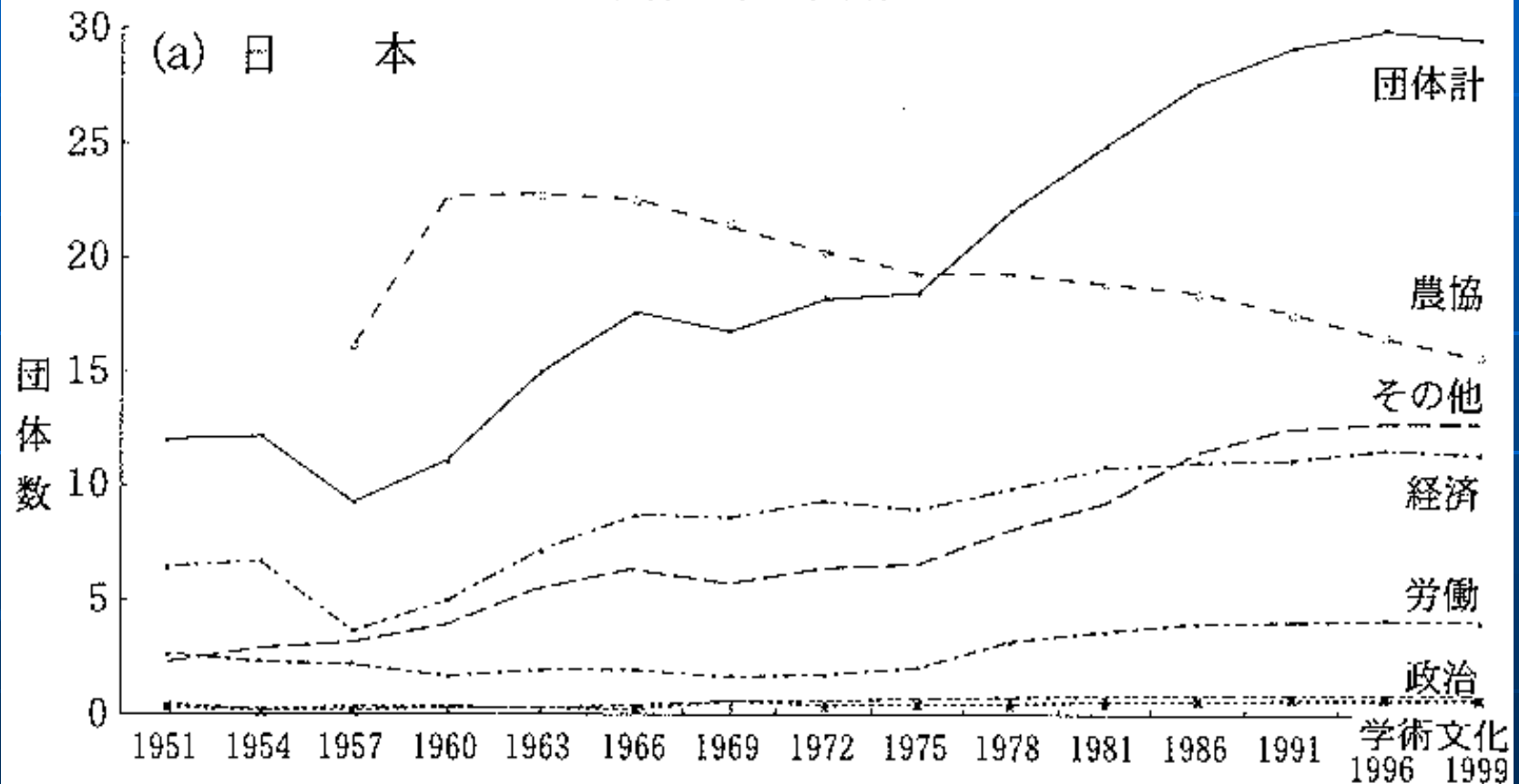
Source: *Hanguk Mingan Danche Chongram (NGO List of Korea)*  
(Simineuisinmun 1997, 2000, 2003, 2006)

# Development of Korean civil organizations



# Development of Japanese civil organizations

図 12-4 人口当り団体数の変化 (日米韓)



## 2. Political Influence of CSOs

### Korean

- Bureaucrats, politicians, & *chaebols* challenged by CSOs
- Ex. Nullification of Dong-gang Dam & Saemangeum projects by CSOs
- Negative campaign of Federation of General Election (FEG)
- Influence on economic policy & business
- Increase of news coverage of CSOs

## Japanese

- Low influence in policy making process
- Policy advocacy: 33% (K), 17% (J)
- Mass gathering: 6%
- Election campaign: 15%
  - Mobilize members for voting 11%
  - Provide staff support for election campaign 5%
- Evaluation of influence:
  - Strong: 16.5% (K), 14.6% (J)
  - Weak: 37.7% (K), 46.6% (J)

# 3. Interest in National Issues

## Korean

- Concentrat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66% (2000), 49.88% (2003), 54.7% (2006)
- Concentration of CSO's organizational governance
  - civil organizations without citizens
  - organizations of renowned elites
  - bureaucratized NGOs
  - NGOs without grass roots

## Japanese

- Interest in the issues close to their predominant activities
  - 97% of agricultural issues
  - 95% of labor issues
  - 91% of welfare issues
- Low interest in state policies
  - foreign policy, human rights, security, public safety

#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Korean Civil Organization

## Korean

- Limited membership
- Limited number of staffs
- Limited financial resources
- Immature organizational condition

## Table 2. Proportion of Membership in Civil Organizations

	1997	2000	2003
<b>Less than 100</b>	25.7%	24.9%	14.3%
<b>100~1,000</b>	42.6%	42.4%	54.1%
<b>1,000~10,000</b>	19.3%	20.8%	21.8%
<b>More than 10,000</b>	12.3%	12.0%	9.8%

Source: Sungsil University (2004),p.7.

### Table 3. Full-time Staffs in Civil Organizations

	1997	2000	2003
<b>1 - 5</b>	69.2%	69.0%	67.5%
<b>6 - 10</b>	13.7%	15.6%	14.0%
<b>11 - 50</b>	13.8%	12.6%	15.7%
<b>51 - 100</b>	2.0%	0.8%	2.2%
<b>More than 100</b>	1.2%	0.4%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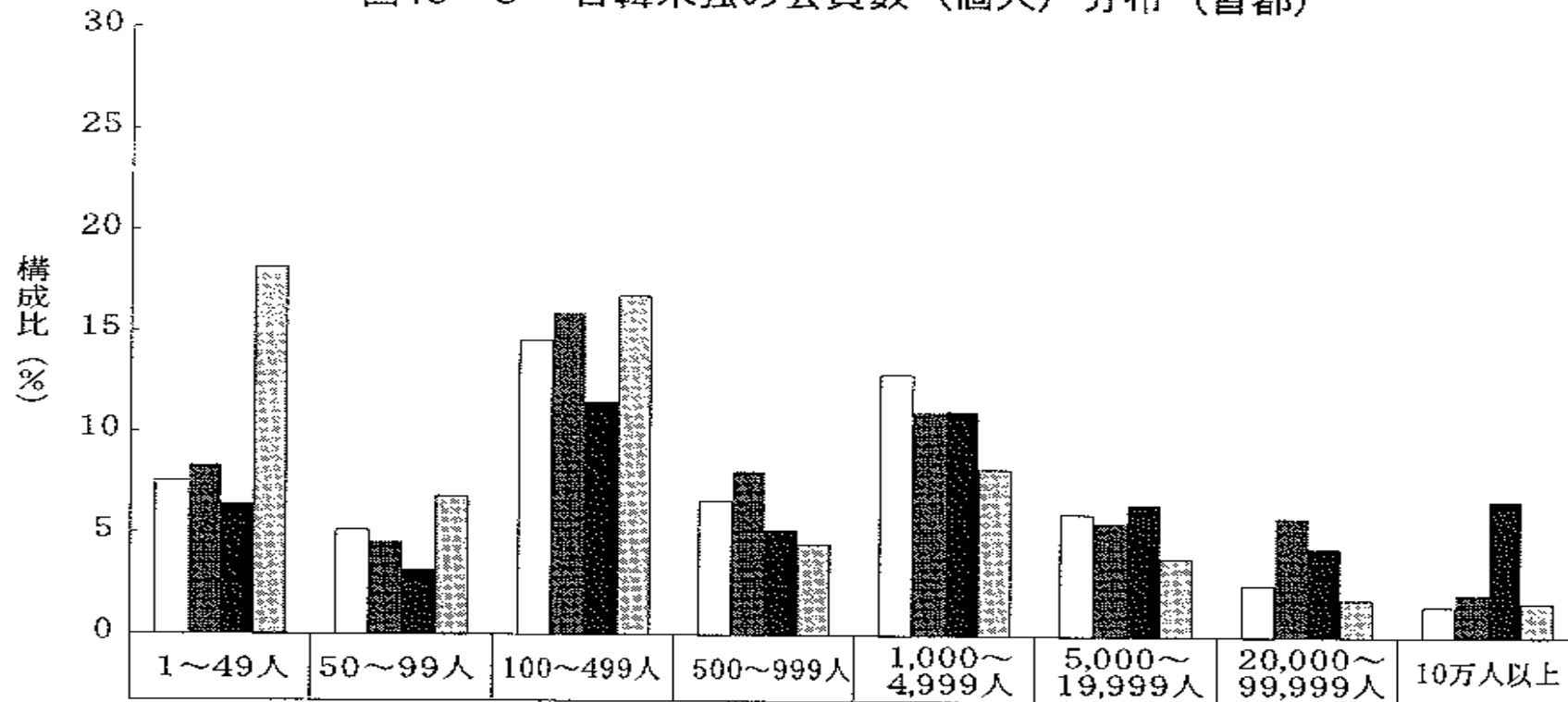
Source: Sungsil University (2004) , p.28.

Based on *Hanguk Mingan Danche Chongram (NGO List of Korea)*  
(Simineuisinmun 1997, 2000, 2003)

## Japanese

- Limited membership (but better than K)
- Limited number of staffs
- Limited financial resour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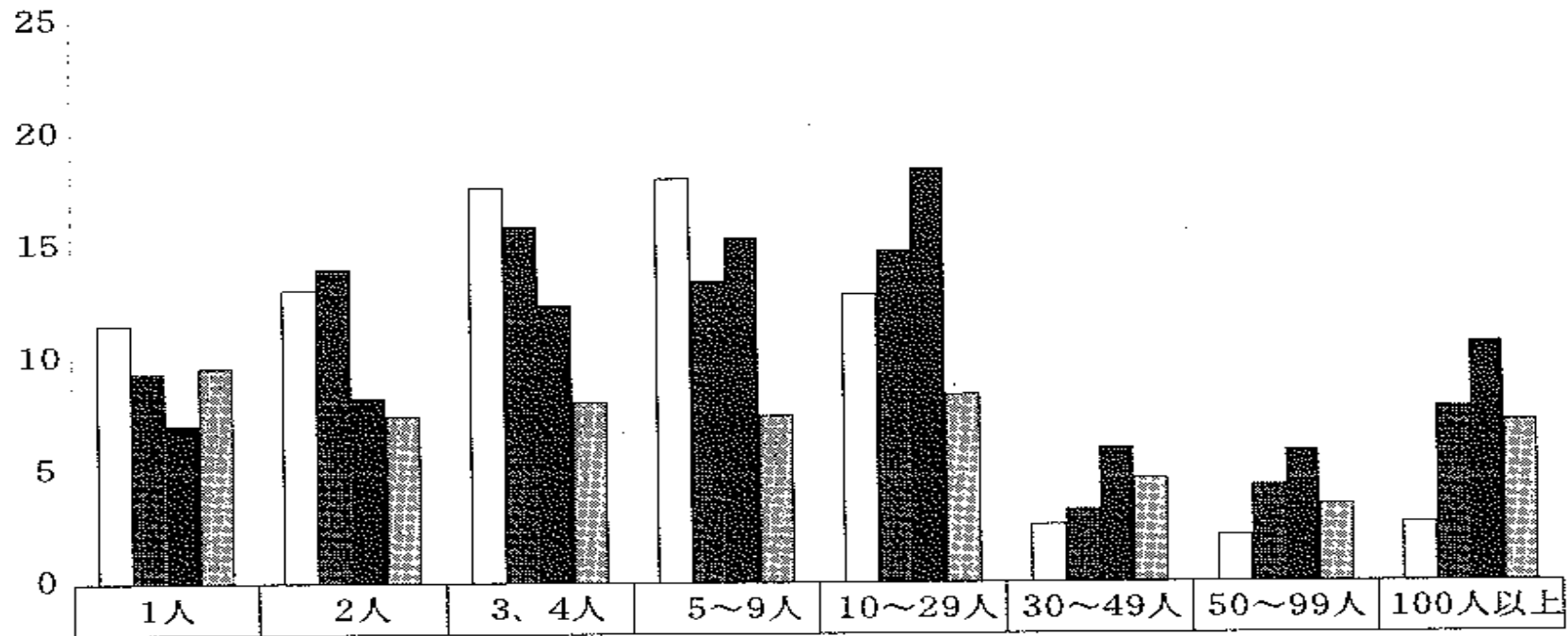
図13-3 日韓米独の会員数（個人）分布（首都）



(母数)：□日本 (1,438), ■韓国 (371), ■米国 (748), ▨ドイツ (643)

(注) 合計は、日韓米独それぞれ56.9%, 61.9%, 55.2%, 62.0%で、100%にならない。全有効回答への比率。残余は「0」と「無回答」の割合。ここで、0は無回答との区分けが容易ではないため、残余処理す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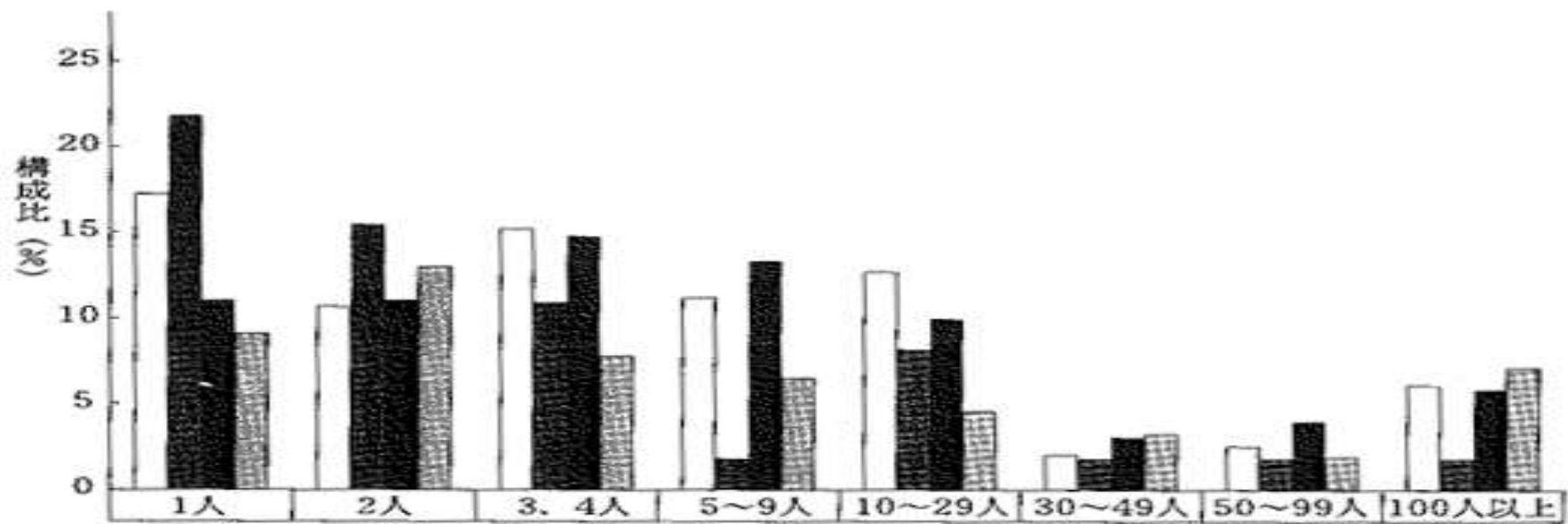
図13-6 日韓米独の職員数（常勤）分布（首都）



(母数): □日本 (1,438), ■韓国 (371), ■米国 (748), ▨ドイツ (643)

(注) 合計は、日韓米独それぞれ80.4%, 82.9%, 84.2%, 56.4%で、100%にならない。全有効回答への比率。残余は「0」と「無回答」の割合。ここで、0は無回答との区分けが容易ではないため、残余処理する。

図13-8 日韓米独の職員数（常勤）分布（地方）



(母数): □日本 (197), ■韓国 (110), ■米国 (752), □ドイツ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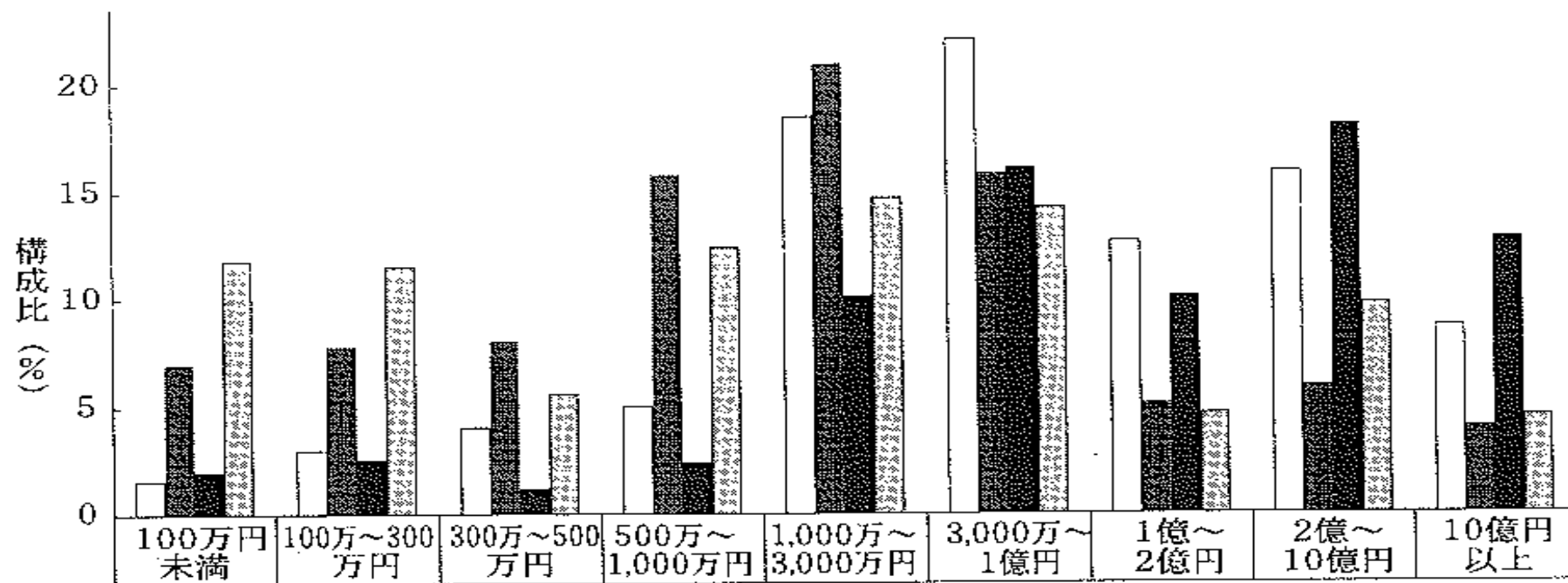
(注) 合計は、日韓米独それぞれ77.7%, 63.6%, 73.1%, 53.1%で、100%にならない。全有効回答への比率。残余は「0」と「無回答」の割合。ここで、0は無回答との区分けが容易ではないため、残余処理する。

# Limited Financial Resources

## Korean

- Average budget/year < \$0.5 mil
- Median budget/year = \$0.1 mil
- 8.72% consists of over \$1 mil
- 24% of budget from government;  
48% in advanced countries
- 73% of budget from membership fee;  
45% in advanced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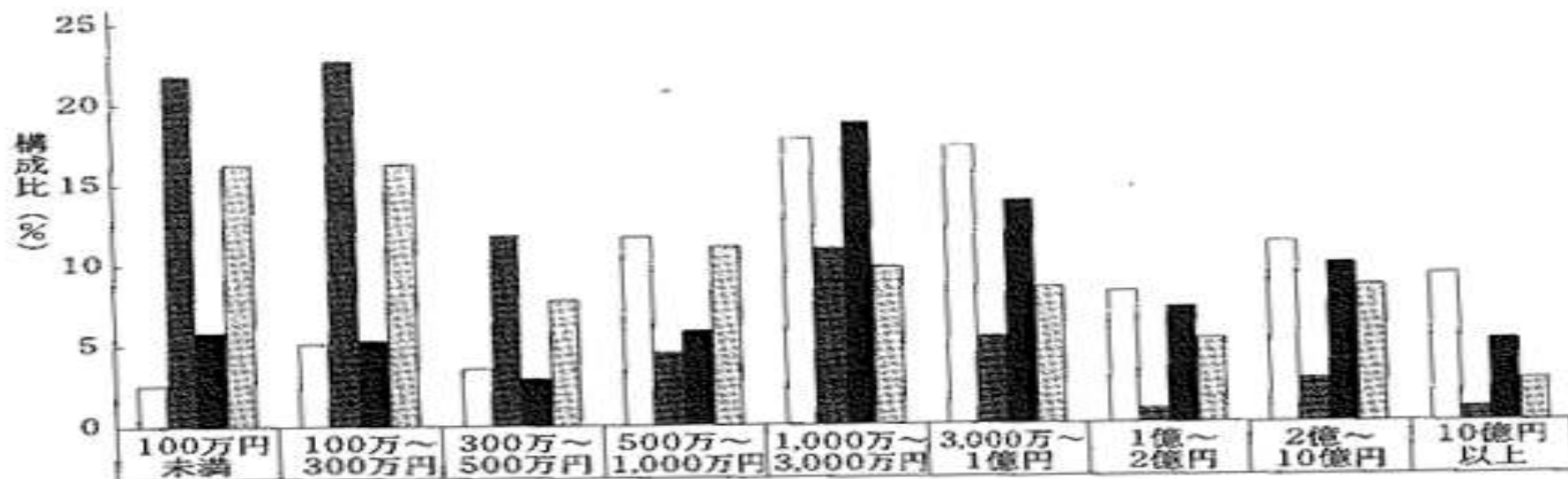
図13-5 日韓米独の予算分布（首都）



(母数)：□日本 (1,438)，■韓国 (371)，■米国 (748)，▨ドイツ (643)

(注) 合計は、日韓米独それぞれ91.7%、90.7%、75.7%、89.4%で、100%にならない。全有効回答への比率。残余は「無回答」の割合。

図13-7 日韓米独の予算分布（地方）



(母数): □日本 (197), ■韓国 (110), ■米国 (752), □ドイツ (154)

(注) 合計は、日韓米独それぞれ86.4%、81.7%、74.7%、85.5%で、100%にならない。全有効回答への比率。残余は「無回答」の割合。

# Immature Organizational Condition

## Korean

- Highly centralized organizational structure
- Policy making & operation process is dominated by elite leaders
- Less than six times annual meetings on the average
- High absence rate of representatives in regular meetings

# Change of Civil Organizations & Policy Process in Democratization

- The second stage of civil society
- Conspicuous influence of CSOs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 Ex. MOGAHA's policy advisory commissions
- Dispatch members to committee: 24.8%(K), 17.2% (J)
- Allocation methods of government subsidy
- Netizen's participation in the government policy making process

**Table 4. Members of Commissions in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Commissions	Member's background	Number of members	Percentage
Various commissions (34)	Government	234	54.5%
	Business, mass media, lawyers	47	11.0%
	Civil organizations	148	34.5%
	Sub-total	429	100.0%
Policy advisory commissions (10)	Government	15	12.6%
	Business, mass media, lawyers	11	9.2%
	Civil organizations	93	78.2%
	Sub-total	119	100.0%
	Total	548	

Source: Park (2005), p.90.

# Discussion & Prospect

- Legacy of centralized political system
- Legacy of anti-government movement
- Elite oriented & inclusive dealing with issues
- Politicized activity of CSOs
- Lack of voluntary participation
- Lack of influence in local policy making process

- Political apathy and the prospect of CSOs
- Weak influence of local CSOs
- Prospect of netizen civil organizations  
ex. Candle light rally
- Changing role of CSOs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ex. the highest trust rate  
ex. specialized issue in internet

**Table 5. Influence of Political Actors  
on General Policy in Local Government**

<b>Rank of influence</b>	<b>Korea</b>	<b>U.S.</b>
<b>1</b>	Mayor of governor (8.92)	Local representatives (8.12)
<b>2</b>	Local representatives (7.94)	Mayor of governor (7.71)
<b>3</b>	Metropolitan government (7.37)	Citizen/ civil organizations (7.14)
<b>4</b>	Central government (7.32)	Business (6.82)
<b>5</b>	Citizen/ civil organizations (5.76)	Metropolitan government (5.98)
<b>6</b>	Mass media (4.67)	Central government (5.16)
<b>7</b>	Political parties (4.65)	Mass media (5.20)
<b>8</b>	Business (3.10)	Political parties (3.73)

Source: Based on Yoo & So (2005), pp.54-55.

Note: The score in parenthesis is out of 10 point scale.

## Table 6. Voting Rate in Major Elections since 1987

	Presidential	General	Local
1987	89.2%		
1988		75.8%	
1992	82%	71%	
1995			68%
1996		64%	
1997	81%		
1998			52%
2000		57.2%	
2002	70.8%		48.8%
2007	63.0%		

Source: Central Commission of Election, various years.

*Thank you!*

##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시민사회의 구도

정미애(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I. 들어가며

일본의 보수우경화가 구체적인 양상을 띠며 진행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한국에서의 ‘일본 인식’이 지닌 특징 중의 하나로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을 총체적 단일 행위자로 보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언론 및 학계에서는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기(日の丸)·국가(君が代)의 법제화, 개헌논의, 역사교과서 문제 등 일련의 움직임들을 ‘보수우경화’나 ‘군국주의의 회귀’로 단정 짓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일본사회의 움직임을 우경화로 단정 짓는 것과 같은 일원적 시각은 그 속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상호작용의 측면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해야만 한다. 시민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 시민사회의 다원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는 ‘진보성’과 등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과 같은 보수주의 세력들이 사회의 전면에 등장하여 큰 목소리를 낼 정도로 시민사회는 진보뿐만 아니라 보수를 대변하기도 한다. 그만큼 시민사회도 다원화된 것이다. 다시 말해 ‘보수우경화’는 일본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고와 사상적 스펙트럼의 하나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일본의 보수우경화에 대해 시민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일본 시민사회의 다원성과 동학에 주목하여 한일관계의 미래비전을 모색하는 데 있어 작은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일본 시민사회의 대립구도

사상에 있어서 좌와 우는 기본적으로 상대적 개념이다. 신우익을 자처하는 세력도 극우의 입장에서 보면 좌측에 위치한다. 오늘날 일본에는 우익은 여전히 사회성을 획득하고 있는 용어이지만, 좌익이라는 말은 냉전의 종언과 더불어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냉전의 종언은 반공=우익, 친미=우익이라는 등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의 우익은 친미적 경향이 강했으나 신우익은 미국에 대한 비판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있다. 실제 새역모 내분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친미·반미의 대립이다. 일본 시민사회의 대립구도가 좌우대립이 아니라면 이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대립축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보수 대 혁신, 보수 대 진보, 내셔널리즘 대 세계주의, 군국주의 대 평화주의, 개헌파 대 호헌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대립구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이들의 사상 및 역사적 계보에 대한 접근보다는 일본의 보수우경화를 선도하고 있는 단체와 이를 저지하려는 단체 간의 대립구도와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 사회 내부의 동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일본회의<sup>8)</sup>

일본회의는 이시다 가즈토(石田和外) 전 최고재판소 장관의 호소로 1978년에 결성된 「원호(元號)법제화실현국민회의」가 원호법 성립 후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日本を守る国民會議)’로 바뀌었다가 1997년 5월 30일 신도·불교계의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본을 지키는 모임(日本を守る会)’을 통합하여 결성되었다.

현재 일본 최대의 보수계 단체. 정계, 재계, 사법, 교육, 종교 등의 보수계 단체 및 개인과 연계하여 우익·보수단체의 정상단체로서 우익의 national center로 기능하고 있다. 전국 47개 도도부현에 도도부현 본부가 있고, 그 아래 다시 지부를 두고 있을 정도로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고 있다.

일본회의는 “자랑스러운 나라 만들기(誇りある国づくりを)”라는 슬로건 하에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고 다음과 같은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헌법개정 추진, 국기 게양·국가 제창 운동, 황실행사의 봉축운동, ‘유사법제(有事法制)’ 정비, 자위대 PKO활동 지원, 애국심·공공심 고취를 바탕으로 한 신 교육기본법의 제정(교육기본법 개정으로 실현), 역사교과서 편찬사업,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추진, 야스쿠니신사를 대신할 ‘국립추도시설’ 건설 반대, 외국인 참정권 반대, “가족의 해체를 촉진하는” 부부별성(夫婦別姓) 법안 반대, “남성의 특성을 부정하는” 남녀공동참획기본법 반대 등.

일본회의는 보수계 단체 및 우익 성향 단체간의 연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연계단체로는 1997년 5월 29일 국회의원 248명이 참가하여 발족시킨 초당파 국회의원조직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日本会議議連. 이하 ‘간담회’ )’를 들 수 있다. 고이즈미, 아베, 후쿠다로 이어지는 일본 수상들이 모두 간담회 소속이고, 후쿠다 내각의 국무대신 18명 중 9명이 간담회 회원이다. 또한 관방부장관 1명, 내각총리대신 보좌관 1명, 부대신 22명 중 8명, 대신정무관 26명 11명이 간담회 회원이다.<sup>9)</sup> 이외에도 후쿠다 총재가 임명한 자민당 간부 중 간사장, 선대위원장, 정조회장, 참원의원회장, 참원간사장이 간담회의 간부를 맡고 있다. 자민당 이외에도 민주당 내의 보수계 의원 중 30명 정도가 가입하고 있어 국회 내에서도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표 1> 일본회의 간부

고문	宇野 精一(동경대학 명예교수) 北白川 道久(神宮大宮司)
----	-----------------------------------

8) 상세는 [www.nipponkaigi.org](http://www.nipponkaigi.org) 참조.

9) 후쿠다 내각의 보수강경인사 및 이들의 보수우익단체와의 관련에 대한 상세는 [www.ne.jp/asahi/kyokasho/net21/20071129.pdf](http://www.ne.jp/asahi/kyokasho/net21/20071129.pdf)

	久 邇 邦 昭(신사본청 統理) 白 井 永 二(鶴岡八幡宮 名譽宮司) 瀬 島 龍 三(NTT 고문) 服 部 貞 弘(신도정치연맹상임고문) 渡 邊 惠 進(天台座主)
회장	三 好 達(전 최고재판소 장관)
부회장	安 西 愛 子(성악가, 전 참의원의원) 石 井 公一郎(㈱브릿지스톤 사이클 전 사장) 小 田 村 四 郎(拓殖大学 전 총장) 小 堀 桂一郎(동경대학 명예교수) 矢 田 部 正 巳(신사본청 総長) 山 本 卓 眞(㈱富士通 명예회장)

자료: <http://www.nipponkaigi.org/0100-toha/0130-yakuin.html>

####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 간부

회장	상담역	회장대행	부회장	부간사장
平沼赳夫 (무소속)	古賀誠 (자민당 선대위원장)	中川昭一 (전 농수대신)	額賀福志郎 (재무대신)	安倍晋三(전 수상) 石破茂(방위대신) 小池百合子(전 방위대신) 中川義雄(내각부 부대신) 山崎正昭(자민·참원간사장)

자료: <http://ja.wikipedia.org/wiki/>

일본회의는 특히 교육분야에 있어서 교육관계자를 중심으로 ‘일본교육회의’를 설립하여 이른바 ‘자학사관’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일본교육회의는 “자랑스러운 일본의 역사, 전통, 문화를 전달하는 역사교육의 창조와 일본적 덕성을 회복하는 감성교육의 창조를 통해 나라를 사랑하고 공공을 위해 헌신하는 정신의 육성을 위해” 10만인 네트워크를 목표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관지로서 『日本の息吹』를 월간으로 내고 있으며, 明成社라는 출판사를 통해 고교 일본사교과서 『最新日本史』를 출판하고 있다.

## 2. 전일본애국자단체회의

전일본애국자단체회의는 1959년 4월 19일에 설립된 우익의 정상단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익단체들의 횡적 연대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국체호지, 반공협동전선을 2대강령으로 한다. 약칭은 전애회의(全愛會議). 창립 시에는 생산당, 국수회(国粹會), 순국청년대 등 80개 단체가 참가했으나, 1964년 제6회 대회까지 참가단체는 440단체로 증가했다. 의장단에는 佐郷屋嘉昭(일본동맹), 小崎金蔵(일본동맹), 高橋正義(히노마루청년대), 西山幸輝(소화유신연맹), 萩島峯五郎(애국청년연맹)이 선출되었다. 사무소는 도쿄 우에노(上野)에 두고 있다. 최고고문에는 三浦義一, 児玉誉士夫, 井上日召, 橋孝三郎, 고문으로는 天野辰夫, 笹川良一, 吉田益三, 寺田稻次郎, 大沢武三郎 등이 취임했다. 임협(任俠)단체라고

하는 이른바 행동조직은 참가하지 않았고, 일부가 관동회(關東會)에 결집했다. 정·재계와 결탁한 신일본협회의회, 児玉譽士夫계의 청년사상연구회(1960년 결성)가 있다.

### 3. 一水會<sup>10)</sup>

1972년에 창설된 민족과 정치단체로서 이른바 신우익으로 불리는 정치단체의 하나다. 기존의 우익단체와는 이론적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이론과 우익’ 이라고도 불린다. 발족 당시부터 1999년까지 대표를 맡아온 스즈키 구니오(鈴木邦男. 이전 전국학생자치체연락협의회 초대위원장 역임)가 매월 첫째 수요일에 가졌던 연구회를 모태로 한 데서 단체명을 ‘一水會’ 라고 하였으나, 일의대수(一衣帶水)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많은 우익 정치단체가 반공의 입장에서 친미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데 반해, 전후 일본을 미국의 괴뢰정권으로 규정하는 청년민족과의 영향을 받아 전후체제를 부정하고 대미자립에 의한 “일본의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반미를 강조한다.

기관지로서 『Reconquista』(스페인어로 ‘국토회복’의 의미)를 월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관련단체로서 “반미애국·자주독립! 자위대해체·국군창설!”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활동하는 ‘통일전선의용군’<sup>11)</sup>(초대의장은 현 일수회 회장인 기무라 미쓰히로(木村三浩))이 있다.

### 4. 9조의 모임(九条の会)<sup>12)</sup>

일본의 호헌파 지식인, 문화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 2004년 6월에 결성되었다. 헌법개정논의가 활발한 일본사회의 현상을 “태평양전쟁에서 비참한 경험을 했고, 또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 다대한 참화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대미종속으로 개헌하여 다시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부전(不戰)을 맹세한 일본국헌법 제9조를 바꾸지도 바꾸게 하지도 말자고 호소하며 전국적 ‘학습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창립 초기에는 주로 9인의 발기인<sup>13)</sup>이 강사로 활동했으나 일본 전국에서 강연요청이 쇄도하여 강사단(128명)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 2005년 7월 30일 아리아케 콜로시움에서 열린 ‘9조의 모임’강연회 모습. 약 9,500여명이 참여.

10) <http://www.issuikai.jp/>

11) <http://www.giyuugun.jp/>

12) 상세는 [www.9-jo.jp](http://www.9-jo.jp) 참조.

13) 井上ひさし(작가), 梅原猛(철학자), 大江健三郎(작가), 奥平康弘(동경대 명예교수, 헌법학자), 小田実(작가), 加藤周一(평론가), 澤地久枝(작가), 鶴見俊輔(철학자), 三木睦子(三木武夫 전 내각총리대신 부인)

자료: <http://www.9-jo.jp/ariake/index.html>

9인의 발기인이 중심이지만 ‘교육기본법 개악저지 전국연락회’ (후술) 4명의 발기인 중 한 명인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 동경대 교수)가 ‘9조의 모임’ 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찬동자 중 898명이 소속, 직업 등을 밝히고 실명으로 메시지를 올려놓아 9조의 모임에 참여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진보적 혹은 좌익적 성향의 인사뿐만 일반적으로 우파로 인식되는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모임의 취지에 부응한 ‘영화인·9조의 모임’, ‘9조의 모임·의사회’, ‘도서관·9조의 모임’, ‘9조 과학자의 모임’, ‘9조 미술의 모임’, ‘스포츠·9조의 모임’ 등이 각계각지에서 결성되어 있다.<sup>14)</sup>

## 5. 헌법행각회(憲法行脚の会)<sup>15)</sup>

헌법9조를 중심으로 헌법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헌법의 의의를 전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강연행각’ 을 벌이겠다는 의도에서 붙인 이름으로 2004년 6월 결정되었다. 발기인은 일본 진보정치의 대모이며 일본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중의원 의장을 지낸 도이 다카코(土井たか子)<sup>16)</sup>를 비롯하여 다음의 11인이다. 内橋克人, 落合恵子, 香山リカ, 姜尚中, 齋藤貴男, 佐高信, (故)城山三郎, 辛淑玉, 高橋哲哉, 高良鉄美, , 三木睦子, 森永卓郎.

조직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9조의 모임’ 과 같이 각지에 ‘○○ 헌법행각회’ 와 같은 지부(혹은 네트조직)를 만들지는 않고, 사회적으로 호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강연 중심의 캠페인적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 Ⅲ. 시민사회 대립의 사례<sup>17)</sup>

### 1. 역사교과서 문제: 새역모 vs 교과서네트<sup>21)</sup>

일본의 교과서제도는 민간의 교과서 발행자에 의한 교과서 저작·편집이 기본이다. 그러나 교과서 발행자는 학습지도요령 및 교과용 도서검정기준 등을 기준으로 교과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문부과학성은 교과서의 내용은 물론이고 가격과 분량 등의 범위까지도 제시한다. 발행자가 검정을 신청하면 문부과학성 내 교과서조사관의 조사에 부처지고 문부과학대신의 자문기관인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에 의해 체크된다. 문부과학대신은 심의회의 답신을 바탕으로 검정을 하게 된다. 검정이 끝난 도서 중에서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결정(=채택)하게 되는데, 채택권한은 공립학교의 경우는 채택구역의 소관 교육위원회에, 국립·사립학교의 경우는 교장에게 있다. 교과서 검정은 4년을 주기로 이루어진다.

14) 일본각지의 ‘9조의 모임’ 관련단체에 대한 상세는 <http://ribbon-project.jp/9.htm>

15) <http://homepage2.nifty.com/kenpou/>

16) 줄고 “도이 다카코: 평화헌법과 결혼한 일본 진보정치의 대모” 『세계가 주목하는 여성정치인의 리더십』. 인간사랑. 2007.

17) 이 절의 내용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필자의 연구보고서 「한일간 역사갈등의 극복을 위한 일본시민단체조사」(2007년)와 『일본공간』 3호(2008)에 실린 줄고의 일부를 간추린 것이다.

교과서 검정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역사교과서다. 1955년 우파는 역사교과서의 ‘침략’ 기술을 문제 삼아 역사교과서 공격을 시작하였다. 당시 문부성은 1956년 ‘교과서조사관 제도’를 만들어 검정제도를 강화하고 문제의 교과서들을 불합격시켜 일본의 가해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다. 이를 계기로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 교수에 의한 32년에 걸친 이른바 ‘이에나가 교과서재판’ 혹은 ‘교과서검정소송’이라고 불리는 역사적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나가 재판의 최대 쟁점은 교과서검정의 위헌여부였다. 1967년의 2차소송 1심판결(=스기모토杉本 판결)에서는 국민의 교육권론이 전개되어 교과서 기술내용의 옳고 그름에까지 미치는 교과서검정은 교육기본법에 위반되며,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이에나가 측이 전면승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7년 8월 29일 3차소송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가 검정제도 자체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교과서검정제도의 위헌여부를 둘러싼 기나긴 투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검정에 있어서 국가의 재량권 일탈을 일부 인정함으로써 교과서집필의 자율성이 일정 정도 보장되었다.

한편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의 영향으로 일본군의 난징대학살 등의 내용이 교과서에 기술되자 우파는 제2차 교과서 공격을 시작하였고, 여기에 동조한 문부성이 ‘침략’을 ‘진출’로 수정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1982년 한국 등 주변국가와 외교적 마찰을 빚었다.

1994년 이후 문부과학성은 ‘이웃 여러 나라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검정을 완화하고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과서 집필의 자율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고교, 1996년부터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대부분이 중군위안부에 대해 기술했다. 이것이 자유주의 사관을 표방하는 우파 내셔널리스트가 역사교과서에 대하여 공세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여, 우익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현재의 역사교과서를 자학사관(自虐史觀)으로 규정하고 자유주의사관을 표방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 새역모)을 결성했다. 이들은 2001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출판하고 이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광범한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기존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전방위 공격을 감행했다. 우파의 이러한 공격은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어 2002년 이후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는 중군위안부에 대한 기술이 거의 사라졌다.

한편 5월 18일자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2년부터 중학교 현장교육과 교과서 내용의 기준이 되는 신 학습지도요령 사회교과 해설서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竹島)’)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sup>18)</sup> 해설서는 10년마다 초·중·고교 각 교과별로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에 맞춰 내용이 보완되어 만들어진다. 교과서 검정의 기준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학습지도요령이지만 해설서도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는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북방4개 섬이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만 담고 있는데, 앞으로는 검정을 거치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될 것으로 예상된다.

18) 「読売新聞」 2008.5.18

## 2. 새역모 vs 교과서네트21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일본의 시민단체를 살펴보면, 우익진영의 중추조직으로서의 새역모와 혁신진영의 교과서네트21의 대립구도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교과서네트21은 새역모의 역사교과서 채택반대운동을 시발로 역사 문제는 물론이고 교육기본법, 평화헌법 수호 등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진보적 사회운동 단체의 네트워크 통합자로서 기능하고 있다.

### 1)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sup>19)</sup>

새역모는 1996년 12월 2일 발기, 1997년 1월 30일 창립되었다. 새역모는 발족 이래 매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주된 활동은 일본 각지를 돌며 대중을 대상으로 심포지엄이나 강연회를 개최하고, 주로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과 산케이신문(産経新聞) 등을 통한 언론 공세, 문부과학성에의 건의·설득과 이의 제기 혹은 제도권 진입을 위한 기도, 그리고 출판 사업을 통한 사상 공세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펼치고 있다.

문부과학성에의 건의·이의 제기는 1997년 1월 역사교과서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기술 삭제 요구를 시작으로 교과서 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 공정한 교과서 채택을 위한 서명 운동과 관계 기관에의 서명자 명단 제출 등 상황에 따라 전략적 시점과 거점을 확보하면서 행하고 있다.

출판 사업을 통한 사상 공세는 1996년 8월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역사를 발간한 이래 많은 단행본 출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국민의...시리즈는 1999년 10월 니시오 간지(西尾幹二)가 저술한국민의 역사 출판을 시작으로, 2005년 3월에 출판된 국민의 사상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역사·도덕·교육·예술·문명사·사상의 6권이 출판되었다. 새역모의 단행본들은 대단히 저렴하게 공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5권은 모두 소비세를 포함하여 1800엔이고, 가장 비싼 국민의 역사도 8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에 비해 가격은 2000엔에 불과하다. 이같은 저가공세와 언론공세에 힘입어 국민의 역사는 72만부가 팔렸다. 새역모는 또한 2000년 5월 새역모의 기관지 후미(史)를 발간하기 시작하여 2008년 5월 현재까지 통권 68호를 발간했다.

새역모는 1999년 2월에 가나카와현에 전국 최초로 지부가 설립된 후 47개의 전 도도부현에 지부가 설립되어 51개의 지부를 갖는 전국적 조직이 되었다(도쿄 2지부, 홋카이도 3지부, 특수 지부로서 새역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간사이불교간화회懇話회가 1지부). 새역모는 지부회원을 대상으로 교과서비교 학습회, 지부 주최의 역사·문화강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새역모의 역사교과서는 2001년 0.039%, 2005년에는 0.39%의 매우 낮은 채택률에 머물렀다. 이와 같은 낮은 채택률로 볼 때 새역모는 일본 사회 내에서 목소리는 크지만 영향

19) 새역모의 발기인은 坂本多加雄(가쿠슈인대학 교수), 西尾幹二(덴키쯔신대학 교수), 藤岡信勝(도쿄대학 교수), 高橋史朗(메이세이대학 교수), 阿川佐和子(수필가), 小林よしのり(만화가), 林真理子(작가), 深田祐介(작가), 山本夏彦(수필가) 등이다. 이상의 발기인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인사 203명이 새역모의 창립에 관여했다. 이들 중 대학교수가 42명이나 된다. 새역모에 대한 기술은 주로 새역모 홈페이지(www.tsukurukai.com)와 이계황,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역사교육전략, 일본사학회, 『일본역사연구』 17집, 2003에 의거하고 있다.

력은 적은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거둬드는 내분은 조직의 응집력을 약화시켜 이들의 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sup>20)</sup> 다만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이 갖고 있는 현재의 영향력보다 앞으로의 잠재성이다. 그 이유는 기술한 바와 같이 정치권 내부에 새역모와 이념적 지향성을 같이 하는 인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로부터의 연대’에 대항하여 이들의 영향력을 차단 혹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저항세력의 선두에 서 있는 단체 중 하나로서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21(子どもと教科書全国ネット21. 이하 ‘교과서네트21’ )’를 들 수 있다.

## 2)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21<sup>21)</sup>

교과서네트21은 이어나가 교과서재판의 정신을 이어받아 어린이와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민네트워크로서 1998년 6월 13일에 결성되었다. 교과서네트21은 ‘Think globally, Act locally’의 정신하에 어린이와 교과서, 교육의 문제를 지역에서부터 생각하고 행동하고 발신하는 이른바 ‘지역발신형’ 네트워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교과서네트21의 멤버는 62단체에 이르는데, 이들은 하나의 중앙과 61개 지부로 이루어져 같은 목표 아래 동일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네트21과 뜻을 같이하는 62개의 개별적 단체들이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린이와 교육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이어가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함께 행동한다.

교과서네트21은 2001년 4월 새역모의 역사교과서가 문부과학성의 검정에 합격하자 새역모 교과서의 내용을 일본인들이 안다면 틀림없이 “이런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어린이들에게 새역모의 역사교과서를 넘겨주지 않기 위한 불채택운동의 선두에 섰다.

교과서네트21은 새역모 교과서의 채택 저지를 위해 구체적인 활동방침을 제안하고 지역에서부터 “새역모 교과서 NO!”의 여론을 형성·확대하는 활동을 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 초국적 네트워크로서 2001년 6월 10일, 11일 양일간 ‘역사왜곡을 용서하지 않는다! 아시아연대긴급회의’가 교과서네트21을 비롯하여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일본네트워크(VAWW-NET Japan), 평화를 실현하는 기독교인 네트(기독교인평화네트)의 세 단체의 호소로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한국, 중국,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북한(일본 정부의 입국 거부로 문서 제출에 의한 참가)으로부터 40명, 일본 국내에서 아이누 민족, 오키나와, 재일외국인을 포함하여 약 250명이 참가했다. 11일 오후에는 ‘인간 사슬’을 만들어 문부과학성을 포위하고 밤에는 약 800여 명이 참가하여 긴급연대집회를 열었다. 이 연대회의에서는 일본의 역사왜곡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아시아 연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역사교육아시아네트워크’<sup>22)</sup>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 이에 일본의 조직으로서 상기의 3단체와 피스보트의 호소로 9월 13일 약 50명의 단체대표와 개인이 참여한 가운데 ‘역사교육아시아네트워크JAPAN’이 결성되었다.<sup>23)</sup>

20) 새역모의 내분과 갈등에 대해서는 依義文, 『‘つくる会’分裂と歴史偽造の深層』, 花伝社, 2008 참조.

21) [www.ne.jp/asahi/kyokasho/net21](http://www.ne.jp/asahi/kyokasho/net21)

22) 상세는 [www.jca.apc.org/asia-net](http://www.jca.apc.org/asia-net) 참조.

한편 2001년의 새역모 역사교과서 불채택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5년의 교과서 채택 당시에는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활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최대의 격전지 도쿄에서는 거의 모든 채택지구의 시민조직, 교직원조합이 참가하여 ‘새역모 교과서 채택을 저지하는 도쿄네트’가 만들어졌다. 또한 2001년 새역모 역사교과서 불채택운동의 선두에 섰던 도쿄도 스기나미구(杉並区)의 ‘새역모의 교과서채택에 반대하는 스기나미 부모회<sup>24)</sup>는 교과서 채택을 앞두고 최종 채택권한을 가진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2005년 7월 1일 새역모의 역사·공민교과서의 채택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 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이는 일본 시민단체가 교과서 채택과 관련하여 법원에 사법적 판단을 구한 최초의 사례이다.

일본 각지에서 전개된 새역모 역사교과서 불채택운동의 성공은 일본 시민운동의 향후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교과서운동이 교사와 학자들의 영역이라는 편견을 깨고, 일반 시민, 더욱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운동의 주체였다는 점이고, 둘째는 교직원노조, 노동조합, 시민단체가 하나의 이슈를 중심으로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운동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고, 결과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점이다. 셋째, 지역사회에서 출발한 시민의 자발적 불채택 운동이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일본을 넘어 국제적 연대로 확대됨으로써 글로벌 시민사회의 가능성을 확인시켰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민운동의 실천력과 저변확대는 보수적이고 지역적이며 운동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 시민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 2. 교육기본법 개정 문제

평화헌법과 더불어 전후개혁의 상징으로서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었던 교육기본법이 2006년 11월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야당의원이 결석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투표가 진행되어 가결, 12월 15일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성립되었다. 교육기본법의 개정은 21세기 일본 국가개혁의 방향성을 암시하는 ‘서장’이라고 할 수 있다.

### 1) 교육기본법 개악저지 전국연락회

교육기본법에 대한 개정논의의 시작은 1997년 자민당이 당 교육개혁추진회에서 교육기본법의 재검토를 포함한 제언을 함으로써 비롯되었다.<sup>25)</sup> 당시에는 교육의 근간에 관련된 문제로 판단하고 구체적인 개정논의는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9년 교육개혁실시본부를 설치하면서 개정논의를 본격화시켰다. 교육기본법의 개정논의가 본격화되자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교육기본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대립했다. 개정 반대파는 이는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개성의 존중, 평화주의, 민주주의 원리를 기초로 했던 교육기본

23) 공동대표로는 小河義伸(기독교인평화네트), 高嶋伸欣(高嶋교과서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俵義文(교과서네트 21), 野平晋作(피스보드), 松井やより(VAWW-NET Japan)가 선출되었고, 사무국은 교과서네트21에 두고 있다.

24) ‘새역모의 교과서채택에 반대하는 스기나미 부모회 「つくる会」の教科書採択に反対する杉並・親の会’에 관한 상세는 [www16.plala.or.jp/kyoukasyo](http://www16.plala.or.jp/kyoukasyo)

25) 일본교육개혁의 정책과정에 대해서는 최은봉, 「글로벌리제이션과 현대일본의 교육개혁」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16호, 2002, 88~97쪽 참조.

법을 ‘국가전략의 기본법’으로 바꾸려는 개정 시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호소했다.

교육기본법의 개악에 반대하는 4명의 교육자의 호소로 2004년 4월 24일 ‘교육기본법 개악저지 전국연락회(이하 ‘전국연락회’ )’가 발족했다.<sup>26)</sup> 전국연락회는 시민운동 네트워크로서 비폭력을 원칙으로 하여 발기인의 호소에 찬동하는 일본 전국의 시민단체, 노동조합, 법조단체, 학회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활동했다. 54개의 시민단체, 32개의 교직원 조합, 그리고 일본여성학회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으며, 새역모 역사교과서 채택저지운동의 구심점으로서 교육분야 시민단체 네트워크의 핵심단체인 교과서네트21이 전국연락회의 주요 단체 중 하나였음은 물론이다.

또한 ‘전국연락회’는 ‘9조의 모임’, ‘부락해방동맹전국연합회’와 같은 사회운동단체 등 다양한 시민운동과도 연계하여 활동을 전개했다. 전국연락회는 운동형태에 있어서도 전국집회, 데모, 국회의원에의 요청, 국회 앞 연좌시위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광범위한 연대활동과 다양한 운동형태를 통해 전국연락회는 교육기본법 개악 반대투쟁에 대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어 전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전국연락회는 창립 이전 2003년 12월 23일 도쿄 히비야(日比谷) 공회당에서 ‘교육기본법 개악반대! 전국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전국집회를 기획했던 4명의 발기인은 집회 직전 까지도 공회당이 다 차지 않을 것을 염려했으나, 예상을 뒤엎고 집회는 4000여명 이상이 참여하여 교육기본법에 대한 국민적 열기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12·23집회’는 조직·단체의 틀을 넘어 단지 교육기본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하나의 이슈를 중심으로 대규모 연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일본 시민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시민운동 내부에서도 이를 ‘12·23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2·23집회’의 성공은 전국연락회 창립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창립 이후에도 전국연락회는 6회에 걸쳐 대규모의 동시다발적 전국집회를 전개했다. 6회에 걸친 전국집회는 횡수를 거듭할수록 시민참여가 늘어 전국연락회의 집계에 의하면 2004년 11월 6일의 전국집회에는 1만 164명, 2005년 5월 7일의 전국집회에는 2만 7821명이 참여했다. 이는 60년 안보투쟁 이래 ‘시민운동’에 대한 시민참여가 저조한 오늘날 일본 시민사회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의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22일 개정 교육기본법이 공포·시행되자 전국연락회는 2007년 2월 새로운 출발을 어필하며 해산을 공표했다.

또한 교육기본법 개정 반대 시민단체의 하나로 일본의 대표적 교육학자이자 전 교육개혁국민회의 위원 중의 한 사람인 후지타 히데노리(藤田英典)를 중심으로 2003년 3월 20일 교육기본법 개정 반대성명을 냈던 ‘교육과 문화를 세계로 여는 모임(教育と文化を世界に開く会)’은 2008년 2월 20일 ‘교육개혁시민포럼’<sup>27)</sup>으로 명칭을 바꾸고,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제언으로 운동의 방향성을 수정하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IV. 맺음말

26) 발기인은 大内裕和(마쓰야마대학 교수), 小森陽一(도쿄대학 교수), 高橋哲哉(도쿄대학 교수), 三宅昌子(찌바대학 교원). ‘교육기본법 개악저지 전국연락회’의 활동내용 및 참가자·단체 등에 대한 상세는 [www.kyokiren.net](http://www.kyokiren.net) 참조.

27) 참가자는 藤田英典(국제기독교대학 교수), 尾木直樹(교육평론가, 호세이대학 교수), 轟多明人(와세다대학 교수), 佐藤学(도쿄대학 교수), 中川明(변호사,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수), 西原博史(와세다대학 교수), 坪井節子(변호사), 奥地圭子(도쿄슈레학원 이사장, 도쿄슈레 가쓰시카 중학교 교장), 善元幸夫(한일합동수업연구회 대표), 荒牧重人(야마나시가쿠인대학 교수). 상세는 [www.kyoikukaikaku.com](http://www.kyoikukaikaku.com) 참조.

본고에서는 보수우경화로 특징되는 현재의 일본사회에 실은 다양한 시민세력이 존재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21세기 일본사회의 방향성을 두고 치열한 대립구도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했다. 일본의 보수우경화에 대한 이슈가 일방적으로 보도되는 한국에서 볼 때 일본은 혹자가 말하는 “죽은 시민의 사회”로 보일지 모르지만, 새역모 역사교과서 불채택 운동, 교육기본법 개정 반대운동에서 보여준 시민사회의 응집력은 일본 사회의 보수우경화에 대한 강력한 제동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일본 시민사회에 기대를 갖게 한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일본회의를 비롯한 보수우익단체들이 정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과 입지를 넓혀가는 데 비해, 진보세력은 평화주의와 민주주의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신자유주의·국가주의라는 메가 트렌드에 맞서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더욱이 교육기본법의 개정은 비단 교육의 범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개정 등과 세트를 이루는 것으로 21세기 일본 국가개혁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진보세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 <참고문헌>

- 기미야 다다시. 2006. “한일관계의 역학과 전망: 냉전기의 다이내미즘과 탈 냉전기의 구조 변용” 김영작·이원덕 편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 한울아카데미.
- 김영작. 2006. “일본(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김영작·이원덕 편.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 한울아카데미.
- 양미강. 2004. “한국의 교과서운동 그 성과와 과제: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편. 『한중일 역사인식과 일본교과서』 역사비평사.
- 와다하루키·오누마 야스아키·시모무라 미츠코 공편. 이원웅 역. 2001. 『군대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시민운동』 오름.
- 이계황. 2003.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역사교육전략.” 일본사학회. 『일본역사연구』 17집.
- 이계황 외. 2003. 『기억의 전쟁-현대 일본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신철·장신. 2001. “2001년 한국의 교과서운동과 향후 전망.”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 7호.
- 이원덕. 2006. “한일 과거사 갈등의 구조와 해법 모색.” 김영작·이원덕 엮음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 한울아카데미.
- 정미애. 2005. “광복60년 한일관계의 미래비전 모색.” 『시민문화연구』 5호. 시민문화연구소.
- . 2006. “참여형태를 통해서 본 시민사회의 한일비교: 정치적 참여로서의 시민운동과 사회적 참여로서의 시민활동.” 『담론201』 제9권 2호. 한국사회역사학회.
- . 2007. “도이 다카코: 평화헌법과 결혼한 일본 진보정치 대모” 『세계가 주목하는 여성정치인의 리더십』. 인간사랑.
- . 2008. “교육개혁을 둘러싼 일본 시민사회의 갈등과 대립.”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편. 일본공간 3호.
- 정재정. 2006. “한일 역사대화의 구도-역사교과서와 역사인식을 중심으로.” 김영작·이원덕 엮음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 한울아카데미.
- 허동현. 2005.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후소샤판) 문제의 배경과 특징: 역사기억의 왜곡과 성찰”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129호.
- 홍승기. 2002. “단절의 역사, 최후의 역사-니시오 간지 외 저, 『새로운 역사교과서』에 보이는 민족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진단학회. 『진단학보』 94호.
- 家永教科書訴訟弁護団 編. 1998.家永教科書裁判:三二年にわたる弁護団活動の総括. 日本評論社.
- 井上ひさしほか. 2004. 憲法九条,いまこそ旬. 岩波書店.
- 猪野健治. 2007. 日本の右翼. ちくま文庫.
- 姜尙中·宮台真司. 2007. 挑発する知:愛国とナショナリズムを問う. ちくま文庫.
- 荻谷剛彦. 2001. 階層化日本と教育危機: 不平等再生産から意欲格差社会へ. 有信堂.

- 教科書検定訴訟を支援する東京都連絡会 編. 1998. 語り継ぐ家永教科書裁判. 平和文化.
- 久野収. 1960. 「市民主義の成立」. 『思想の科学』7月号.
- 子どもと教科書全国ネット21 編. 2003. 教育基本法‘改正’. 学習の友社.
- 杉山光信. 2001. 『戦後日本の‘市民社会’』. みすず書房.
- 高橋哲哉. 2002. 『‘歴史認識’論争』. 作品社.
- 宝島編集部 編. 2008. 日本の右翼と左翼. 宝島社.
- 俵義文. 2008. 「つくる会」分裂と歴史偽造の深層. 花伝社.
- 辻村みよ子. 2002. 『市民主権の可能性』. 有信堂高文社.
- 服部民夫・金文朝. 2005. 『韓国社会と日本社会の変容』. 慶応義塾大学出会.
- 二谷貞夫. 2004. 『21世紀の歴史認識と国際理解：韓国と中国・日本からの提言』. 明石書店.
- 矢澤修次郎編. 2003. 『社会運動』. 東京大学出版会.
- 和田進. 1997. 『戦後日本の平和意識』. 青木書店.

**【별첨】**

<표> 전후 일본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람

이름	재임기간	참배 횟수	비고
東久邇稔彦	45.8.17~45.10.9	1	45년 8월 18일 참배
幣原喜重郎	45.10.9~46.5.22	2	
吉田茂	48.10.15~54.12.10	5	
岸信介	57.2.25~60.7.19	2	
池田勇人	60.7.19~64.11.9	5	
佐藤榮作	64.11.9~72.7.7	11	역대수상 중 최다 참배
田中角榮	72.7.7~74.12.9	5	
三木武夫	74.12.9~76.12.24	3	1975년 8월 15일 참배. 종전기념일에 수상이 참배한 것은 처음. 그러나 “총리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참배했다”고 발언
福田赳夫	76.12.24~78.12.7	4	78년 8월 15일 참배
大平正芳	78.12.7~80.6.12	3	
鈴木善幸	80.7.17~82.11.27	9	재임 중 있었던 세 차례의 종전기념일에 모두 참배
中曾根康弘	82.11.27~87.11.6	10	종전기념일에는 세 차례 참배(83년, 84년, 85년). 85년 8월 15일에 수상으로서의 공식 참배임을 명시
橋本龍太郎	96.1.11~98.7.30	1	사적 참배임을 명시
小泉純一郎	01.4.26~07.9.13	6	공식참배임을 명시. 2001년에는 종전기념일 이틀 전인 8월 13일 참배, 2006년 8월 15일 참배.

자료: 동북아역사재단(<http://www.historyfoundation.or.kr/History/Issue/Yasukuni.asp>)의 표를 참조하여 필자가 수정, 가필.

## 【資料】 福田康夫内閣の超タカ派の大臣たち

2007年11月29日改訂 俵 義文（子どもと教科書全国ネット21）作成

大臣	氏名	所属の議員連盟など
総理	福田 康夫	日本、改憲、靖国
総務・格差是正	増田 寛也	民間、元岩手県知事
法務	鳩山 邦夫	促進（顧問）、改憲（副会長）、靖国
外務	高村 正彦	神道、靖国、拉致
財務	額賀福志郎	歴史、日本（副会長）、神道、改憲、靖国
文部科学	渡海紀三朗	靖国
厚生労働	舛添 要一	改憲
農林水産	若林 正俊	歴史、日本、神道、改憲、靖国
経済産業	甘利 明	日本、神道、改憲、靖国
国土交通	冬柴 鐵三	公明党
環境	鴨下 一郎	日本
防衛	石破 茂	日本（副幹事長）、神道、改憲、靖国、拉致
国家公安・防災	泉 信也	日本（幹事）、促進（副会長）、改憲（事務局次長）、靖国、拉致、中国（顧問）
沖縄北方・科技	岸田 文雄	歴史、日本、教科書、神道
金融・行革	渡辺 喜美	日本、教科書（事務局次長）、神道、改憲、靖国
経済財政	大田 弘子	民間
少子化・男女共同参画	上川 陽子	改憲
官房長官・拉致	町村 信孝	神道（副会長）、促進（顧問）、改憲（幹事長代理）、靖国、中国（顧問）
首相補佐官		
教育再生担当	山谷えり子	日本（幹事）、神道（副幹事長）、靖国、拉致
拉致担当	中山 恭子	元拉致担当内閣官房参与、今回の参議院選挙で初当選
官房		
官房副長官	大野 松茂	日本、教科書、神道、改憲、靖国
官房副長官	岩城 光英	神道、靖国
副大臣		
内閣府	木村 勉	改憲
内閣府	山本 明彦	日本、神道、改憲、靖国
内閣府	中川 義雄	日本（副幹事長）、神道、教基法（理事）、改憲、靖国、拉致、中国、正しい、W・P

総務	佐藤 勉	教科書、神道、改憲、靖国
法務	河井 克行	神道、靖国
外務	木村 仁	日本、神道、靖国
財務	森山 裕	神道、正しい
厚生労働	西川 京子	日本（幹事）、教科書、教基法（理事）、靖国、中国（会計監査）
厚生労働	岸 宏一	神道、靖国
農林水産	今村 雅弘	日本、教科書、神道、改憲、靖国、正しい
農林水産	岩永 浩美	日本、神道、改憲、靖国
経済産業	新藤 義孝	教科書、靖国
経済産業	中野 正志	日本、神道、教基法（理事）、改憲、靖国
国土交通	平井 卓也	神道、靖国
国土交通	松島みどり	神道、改憲
環境	桜井 郁三	日本、教科書、神道、改憲、靖国
防衛	江渡 聡徳	日本、教科書、神道、靖国
大臣政務官		
内閣府	加藤 勝信	日本、神道、靖国
内閣府	戸井田 徹	教科書、靖国、中国（会計監査）、正しい、W・P
内閣府	西村 明宏	日本、改憲、神道、靖国
総務	秋葉 賢也	靖国
総務	岡本 芳郎	日本、改憲、靖国
総務	二之湯 智	靖国、正しい
法務	古川 禎久	日本、神道、正しい、W・P
外務	宇野 治	日本、神道、改憲、靖国
外務	中山 泰秀	日本、教科書、神道、靖国
外務	小池 正勝	日本、靖国
財務	小泉 昭男	神道
財務	宮下 一郎	靖国
文部科学	原田 令嗣	日本、改憲、靖国
文部科学	保坂 武	日本、改憲、神道、靖国
農林水産	谷川 弥一	改憲、神道、靖国
経済産業	荻原 健司	靖国
国土交通	金子善次郎	靖国、拉致
国土交通	山本 順三	日本、靖国
防衛	寺田 稔	靖国
防衛	秋元 司	日本、靖国

自民党役員		
幹事長	伊吹 文明	日本、神道（幹事長）、改憲、靖国、
幹事長代理	細田 博之	歴史、神道、靖国
政調会長	谷垣 禎一	歴史、日本、神道、靖国
総務会長	二階 俊博	改憲、靖国
選対委員長	古賀 誠	歴史、日本（相談役）、靖国
国対委員長	大島 理森	日本、神道、靖国
参・議員会長	尾辻 秀久	歴史、日本（日本会議の代表委員）、神道（副幹事長）、改憲（役員）、靖国
参・幹事長	山崎 正昭	歴史、日本（副幹事長）、教科書、神道、靖国

\*歴史＝自民党歴史・検討委員会

日本＝日本会議国会議員懇談会

教科書＝日本の前途と歴史教科書を考える議員の会

神道＝神道政治連盟国会議員懇談会

教基法＝教育基本法改正促進委員会（自民・民主による超党派議連）

改憲＝憲法調査推進議員連盟（超党派の改憲議連）

靖国＝みんなで靖国神社に参拝する国会議員の会・この数年間の靖国参拝議員（代理参拝を含む）

拉致＝北朝鮮に拉致された日本人を早期に救出するために行動する議員連盟（「拉致議連」）

中国＝中国の抗日記念館から不当な写真の撤去を求める国会議員の会

正しい＝正しい日本を創る会

W・P＝「ワシントン・ポスト」紙に出した米下院の「慰安婦」決議に反対する全面広告賛同した議員

※これらの議連など解説は俵義文著『あぶない教科書科書NO!』（花伝社）又は『安倍晋三の本性』（金曜日）参照

아베 내각의 뒤를 이어 2007년 9월 26일 출범한 후쿠다 내각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하지 않을 것이며 아시아중시 외교노선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후쿠다 총리는 2002년까지 매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고, 일본의 개헌·익찬(翼賛)의 우익조직인 일본회의와 연계하는 일본회의국회의원간화회(=日本会議議連) 및 헌법조사회추진의원연맹(=改憲議連), 「みんなで靖国神社に参拝する国会議員の会」(=靖国議連)에 소속해 있다. 또한 국무대신 18명 중 9명이 日本会議議連에 소속해 있고, 神道政治連盟과 연계하는 신도정치연맹국회의원간화회(=神道議連) 소속이 8명, 靖国議連 소속이 11명, 改憲議連 소속이 11명으로 보수강경 내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일본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 국제학술회의

### “일본의 보수화와 동아시아 국제관계”

“중국관점에서 본 일본의 보수화와 중일관계”

Jin Xide(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의 동북아 평화론 :

자유주의자와 현실주의자들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영준(국방대)

## 日本の保守化と中日関係

—中国の視点から

中国社会科学院日本研究所 教授・副所長 金 熙徳

1990年代以来、日中関係は再調整・再定義の新しい転換期に入った。その背景には、国際環境と日中双方の様々な要因がある。特に、日本の国内政治における変化、いわゆる保守化の傾向が、日中関係に大きな影を落とした。本稿は、日本の保守化と日中関係との相互作用について考察を行い、現在と将来の日中関係の変動趨勢について分析してみたい。

### 一 戦後日本の政治保守化の流れ

第二次大戦後、日本は、連合国の旗を振る米国の単独占領の下で、吉田茂を代表とする戦前の新英米派官僚・政治家が政治の主流を占めた。吉田は、延べ5回も組閣する長期政権の担当者として、保守本流と呼ばれる政治・外交路線を形成した。その主な内容は、憲法九条に基づく平和発展路線、日米関係を基軸とする外交体制、対米依存を要とする安保政策、低姿勢による国際行動様式、経済発展を中心とする国家戦略、などであった。

「保守本流」路線は、自民党を中心とする与党保守勢力及びその政権の政策において、主流的地位を占め続けてきた。言わば、「良い敗者になる」姿勢を貫く穏健な保守路線である。それは、対米依存・小国主義・経済中心主義・平和発展路線に特徴付けられ、急進的な変革を嫌う、漸進的な手法に裏付けられている。

この路線は、内と外からの二方面からの挑戦を受け続けた。保守勢力の内部からは、「独立自主武装」や「日米対等」などを唱える修正派が存在し続けた。鳩山一郎と岸信介がその代表者であった。社会党を中心とする野党革新勢力は、「非武装中立」を要する政策体系をもって反対を唱え続けた。

1982年首相になった中曽根健弘は、初めて「政治大国」を目指すという国家戦略目標を掲げ、戦後日本における「新保守主義」の旗手となった。それに続き、1993年に小沢一郎は、「日本改造計画」で「普通国家論」を提起し、中曽根の公然たる「大国主義」に巧妙な理論的修正を加えた。今日までに、日本政治における主流的な思想・政策体系は、この「普通国家論」に他ならない。

実践において、日本の政治保守化を促した要因は、幾つかあった。

80年代末までは、経済力の増強によるネオ・ナショナリズムの高揚、東西冷戦における日本の安保面の貢献を求める米国からの「外圧」、日中関係の改善などによる自信の増強、などが挙げられる。中曽根の場合、「経済力に相応しい政治大国になりたい」という論理の下で、「戦後政治の清算」を主張したが、その本質は、歴史問題と安保問題における「敗戦体制」の見直しに手をつけることであった。そうした本質は、今までの「新保守主義」の流れにずっと受け継がれている。

90年代以来、東西冷戦の終結に伴い、日本では、再び「大国外交論」が台頭した。国内政治では、「55年体制」が崩壊し、社会党の没落が起こり、与党と野党の政策の「総保守化」「総自民党化」が起こった。自民党内では、「保守本流」路線からの離脱の動きが顕著になってきた。その表れとして、戦後体制の見なし論や改憲論の台頭、歴史問題における閣僚による「失言」の連発、「周辺事態」の誇張による日米同盟の再強化、海外派兵の法制作りと実践、周辺国との領土・海域問題における強硬姿勢などが見られた。日本経済の長期低迷と中国経済の高度成長に伴い、日本では、中国への対抗意識と焦りの中で、保守化に拍車がかかった。2000年4月、28年におよぶ田中派の優位に休止符が打たれる事態が起こった。岸・福田派の流れを汲む森派の会長、森喜朗の首相就任である。翌年4月の自民党総裁選では、やはり森派の小泉純一郎が、田中派の重鎮、元主将の橋本龍太郎を破り、福田派の主流派としての地位を固めた。今まで、「森・町村派」は、すでに四人の首相を続出させている。辿ってみれば、吉田の保守本流の後退であり、鳩山・岸の民族派路線—中曽根の大国路線—小沢の普通国家論といったラインの高潮に他ならない。

森派政治の時代に入って以来、日本政治の保守化は、一つの絶頂を見せた。2001年4月から2007年9月までの小泉・安倍両政権期が、それである。

2001年4月に登板した小泉首相は、「聖域なき改革」と「靖国参拝」を政権公約として掲げ、外交では「対米追随」と「対ア強硬」を組み合わせた政策をとった。親米による対アジア諸国優位を獲得し、第二次大戦の歴史的結論を屈帰そうとした。この路線は、その余りの急進性より、その長期政権の末期には、中曽根を含めた国内保守勢力から、米国を含めた国際社会から、一斉の批判を受けることになった。

2006年9月に就任した安倍首相は、当初、小泉路線を修正するかに見えた。しかし、就任半年になってからは、慰安婦問題の否認、靖国神者の御供物贈呈、価値観外交の展開などで、民族派・新保守派・タカ派の本性を余すことなく見せるようになった。安倍政権は、自民党政治や小泉改革の負の遺産に足を引っ張られ、丁度1年で終わった。

安部に続いて登場した首相、福田首相は、福田派の創始者、元首相の福田赳夫の長男である。同じ森・町村派に担がれながら、福田首相は、国内的には、保守本流と新保守派、ハト派とタカ派の両方に受け入れられ、国際的には、米国とアジア隣国の両方に親しさを与える、近年稀に見る日本の政治家である。

福田による穏健・漸進主義の再現は、彼が政治保守化の流れを変えたというよりは、むしろ、小泉・安倍の急進的保守化の破綻が、穏健首相を必要とする社会・世論状況を作ったという見るべきであろう。日本政治の振り子は、右から中道政治に戻ってきたのである。

日本の保守化にとって、「福田現象」は、その一時的な停滞なのか、それとも永久な後退なのか。これは、今の時点では、まだ未知数の多い謎である。

## 二、冷戦後中日関係の変動の軌跡

長い歴史のスパンでみると、今までの中日関係は、(1)2000年の交流期、(2)150年の近・現代代期、(3)60数年の戦後期、(4)国交正常化以来36年の友好期、(5)冷戦後16

年の再定義期といった5つの同心円の時期を経験した。

今の中日関係の直接な原点は、1972年『中日共同声明』の署名による国交正常化である。それにより、近代以来対抗と戦争の「歴史」および戦後20年余り続いた冷戦型の「不正常的な状態」に一旦に終止符を打たれた。その中に合意された諸基本原則は、「72年体制」とも呼ばれる、両国関係の再出発点となる基本的な枠組みである。それは、日中両政府が相互間で解決すべき台湾、歴史、安保、領土などの諸問題の処理原則をめぐる合意体系および枠組みである。国交回復以来の最初の20年間、日中関係は政治関係が持続的に発展し、安全分野で安定を保ち、経済貿易が急速に拡大し、文化交流が益々深まるという「蜜月期」であった。

しかし、冷戦後の16年間、両国関係には、二回にわたって、経済面の相互依存と政治面の摩擦頻発という「政冷経熱」の局面が現れた。

「72年体制」の一つの主旨は、日本が対中侵略戦争について深く反省し、中国が対日友好の大局を重んじて戦争賠償を放棄し、両国が「歴史を鑑として、未来に向かう」精神で両国関係の健全な発展を促進することである。1980年代以来、日中間では歴史問題をめぐって何度も政治摩擦が生じている。その基本的なパターンは、日本政府と政界に対中侵略歴史を否定するような言動が現れ、中国側が反応を示すという繰り返しである。こうしたことは日中関係にマイナス影響を与え続けている。

1980年代以来、日本における侵略歴史否定への動きは、日中関係に対して「慢性的」な破壊の役割を果たした。

第一、日本の首相や閣僚による靖国神社参拝。

第二、日本の閣僚や政治家の侵略歴史否定の発言。

第三、日本政府による侵略歴史歪曲の中小学校歴史教科書の検定合格。

これらの現象はなぜ起こり、どうして後を絶たないのか。その要因を総括的にみると、第一に、戦後米国占領当局が、反ソ・反共戦略の必要から、日本の戦争犯罪に対する清算過程を中途半端でやめたことによって、戦争責任問題を曖昧のままにしたこと。第二に、日本では、侵略戦争の担い手だった人達が政界の要職に戻ったこと。第三に、日本では、ドイツのような侵略歴史に対する法的判断と国家意思が欠如しており、侵略歴史を否定しても、効果的な法的・行政的制約措置が設けられていない。第四に、そのために、一部の政治家は、「言論の自由」、「歴史観・価値観の自由」を掲げて、アジアの諸被害国の感情を無視して、国内政治の考慮から、そのような侵略歴史否定の言動に出るのである。

「72年体制」のもう一つの基本合意は台湾問題に関するものであった。即ち、「中華人民共和国政府は、台湾が中華人民共和国の領土の不可分の一部であることを重ねて表明する」という立場に対して、日本側は「十分に理解し、尊重し、ポツダム宣言第八項に基づく立場を堅持する」と表明したことである。こうした立場に基づき、日本は台湾と公式な関係を持たないことを約束したのである。

日中国交回復後、日本は台湾との公式な関係を断ち、民間関係を維持し発展させてきた。しかしながら、この民間関係には政府背景があり、実質上の公式関係の色合いが濃い。日中国交回復以来、日本の親台勢力は「台湾独立」勢力と相呼応しながら、「72年体制」における日本政府の立場に揺さぶりをかけ、日中関係の基本的枠組みを打ち壊そうと図ってきた。1990年代以来、日本の台湾に対する注目度が日増しに高まり、台湾との関係の格上げを進め、米国に追隨

して台湾問題に干渉する姿勢を強めてきた。1996年以来、日本は「日米同盟と国内法の関連文書に「周辺事態」という概念を付加し、米国に協力して台湾を「防衛」する構えをとるようになった。このような動きは「日中関係の健全な発展を阻害する最大な要因の一つとなった。

日中関係にとって、1989年は「国際環境に大きな変化が生じた一年であった。中国の「天安門事件」と米ソ冷戦終結を契機として、米国の対中政策には「中国と連携してソ連を抑止する」という戦略の根拠が消失してしまった。1992—93年、日中両国の情勢に大きな変化が起きた。中国は「改革・開放と経済成長の新たな高まりを見せ始めた。日本では、「55年体制」の終焉とバブル経済の崩壊という衝撃が走った。この時期、日本は「米国から距離を置き、「脱米入亜」の傾向と「日・米・欧主導体制」の構築への願望に駆り立てられ、その対中関係への態度は「より積極的・友好的なものとなった。日本は「中国の近代化建設事業に対し、引き続き理解と支持を表明し、対中制裁解除についても、積極的に中国と米国の橋渡しの役割を果たした。

しかし、1993年以来、中日関係は「政治摩擦による動揺期に入り、再調整・再定義の時期に入った。その要因として、次のようなものをあげることができる。

#### (イ) 国際情勢の変化

第一に「米国の対中政策と西側価値観のマイナス影響の膨張。ソ連の崩壊後、米国は世界唯一の超大国となり、中国は唯一の社会主義体制の大国となった。米国の対中政策におけるイデオロギーの要因が再び蘇った。但し、「冷戦後の数年間、米国は「中国の国力を見下ろし、自らのグローバルな優位に挑戦できるまではまだ程遠い」と見ていた。しかし、1993年以降になると、「日米両国は「中国を潜在的な「脅威」と見なし始め、再び安全同盟関係の強化に乗り出した。このことが「日中関係の多大なマイナス要因となったのである。

第二に「多極化趨勢の進展により、日本は「再び対米依存の道を選択した。冷戦の終結後、「米ソ二大陣営と中・米・ソ間の戦略的トライアングルは無くなり、これに取って代わり東アジア地域に出現したのは「マルチな勢力が並立し、相対的に均衡した局面であった。こうした局面は「日本の国際地位と役割を相対的に相殺することとなった。新たな形勢のもと、「日本の政治大国への指向は失速し、「対米依存の傾向が益々強まり、「日・米・中三国関係は「再びバランスを欠いた格好となった。一方、「多極化の趨勢と地域の多国的な経済・政治・安全協力関係の発展は「日米同盟へのマイナス影響を抑制する役割を果たしている。

#### (ロ) 日本の対中政策の変化

1990年代に入って以来、「中国の外交方針は「これといった変化はなかった。その基本的な内容とは「経済建設を中心に「平和で安定した国際環境の醸成、「独立自主平和外交の実行、「新たな国際秩序形成の推進というものである。中国の対日政策の核心は、「『中日共同声明』と『中日平和友好条約』を基礎とし、「対日友好関係を維持しつつ、「より一層の発展を期すというものである。

冷戦の終結後、「日本の対中政策は見直しが行われ、「そのなかのイデオロギーの色合いが再び濃くなった。他国の体制を見て「敵」と「友」を分けようとする、「1970年代以前の考え方に逆戻りし、「いわゆる「普遍的価値」や「国際秩序」を尺度として持ち出し、「中国に対して、「とやかく注文をつけるようになった。日本の対中姿勢は「それまでの低姿勢から「高飛車な態度へと変化した。政界の一部の勢力は「対中関係を「普通関係」に変えるべしと言い張り、「「ノーと言える成熟関係」にするべきだ」という主張が幅を利かせた。彼らの「ノー」という挑戦的な姿勢の

矛先は、他ならぬ『日中共同声明』で定められた「歴史問題」と「台湾問題」に関する基本原則に向けられたのである。日本は、漠然とした根拠に乏しい「中国脅威論」を盾に、「周辺事態」という虚構の概念を以って日米軍事強化に乗り出し、ソ連からの「北部脅威」に対応する防衛体制から中国からの「西部脅威」に対応するという防衛体制に転換してきている。

(ハ) 対中政策転換における国内基盤

① 政界の変化.

「五五年体制」崩壊後の日本政界は、いわば「総保守化」の様相を呈し、「贖罪意識」からの脱却、対中「友好関係」を「普通関係」に改めよと主張する勢力が台頭した。西側政治体制という手本と日米関係を基軸とした対外政策の実施が、各政治勢力の「最大公約数」の主張となっていった。

② 世論の変化.

新聞、雑誌、テレビ等のメディアを中心とした日本社会の世論にも変化が見え始めた。対中友好勢力の日本における影響力が低下し、日中友好を唱える世論も勢いを失い、「今は中国のことを評価することさえ憚られる」と、尻込みする日本人さえ現れた。日本のメディアの中国報道姿勢は、日本国民が健全な中国認識を形成する上で明らかに不利な方向に誘導するものであった。この時期、親米的な戦後世代が次第に日本の各界の要職を担うようになったが、彼らは東洋文化の教養に欠け、中国の歴史と現実を余り知っておらず、日本の中国侵略や1972年後の日中友好関係にいたっては、より浅はかな知識しか持ち合わせていない。

新たな政治的局面のもと、日本の世論は、全体として日中友好に不利な方向へ傾いて行き、日中間の諸懸案事項について強硬な姿勢を望む声が高まった。こうしたマイナス世論と政界の反中勢力は、力を合わせ、日本政府の対中政策に陰りが出るよう、圧力をかけ始めた。

しかし一方で、日本の財界は、こうした政治・世論の状況とは反対に、却って益々中国との経済関係を重視するようになっていたのである。両国の共利共生という構造の中で、日本財界は、必ずや日中関係が健全に、そして安定した発展がつづけられるよう、積極的に働きかけることになろう。ある識者は、日本の財界も、米国の利益集団のように、行動を起こし、対中関係改善のため、政府に明確な要求をつきつけるよう呼びかけた。

一九九四年以降、日中関係には、次第に次のような新たな特徴の兆しが見え始めた。

第一に、日中総合国力が均衡に向かい始めた。中国は、急速に経済力をつけ、日本は、国際政治における発言力を高めている。両国は、それぞれ比較的弱かった分野で力を付け始め、総合国力において史上未曾有の「両強並立」均衡状態へ向かいつつある。

第二に、日中相互交流についての基礎的認識の変化である。両国相互の不信感はつり、相互の敵対心も増大し、相手側の未来戦略に対する猜疑心も深まった。

第三に、日中関係の基本原則が、新たな状況に直面していることである。『日中共同声明』と『日中平和友好条約』の歴史問題、台湾問題、平和友好に関する一連の基本原則が、なお効力をもっているとはいえ、ときに日本国内の一部勢力による感情的な言動が見られる。

第四に、日中相互の影響関係に変化が生じていることである。日中間の相互協商、「小異を残して大同につく」交流の原則、方法、濃淡等、日中交流の需要の変化に追いついていない実情が明らかになってきた。

第五に、日中の政治、安全保障関係の減退である。現在、日中の政治と安全保障関係の分野

は、七〇年代初めに見られたような「発展のエネルギーと手立てを探し出せていない。

第六に「日中相互の影響関係の内容と範囲が次第に拡大したことである。日中関係の地域性とグローバル化の不断の進展により「日中双方の関係が融合した「多角的な側面が日増しに増大した。

第七に「日中関係の諸領域間の不均衡。日中関係の各方面に不均衡な発展の形勢が現れた。政治関係は安定しているとはいえ「安全保障面は「速やかな改善が待たれる。一方で「経済関係の発展は迅速であるが「文化的な相互理解の矛盾は「日に日に突出してきている。

1994年以降「日中間の様々な「敏感な問題」をめぐる摩擦は「増加してきた。それは「歴史問題「台湾問題「日米安保問題「釣魚島（尖閣諸島）と海域境界線の問題「経済問題の政治化」などといった5つの面にわたる。

このような状況の下で「中日関係は「1995-96年と2001-2006年に「二度の「政冷経熱」期を経験し「1997-2000年と2006-2008年の「回復」期を創出した。その間「1998年11月に「平和と発展のための友好協力パートナーシップ」「2006年10月に「共通利益に基づく戦略互惠関係」の構築に関する二度の合意に達している。

### 三 「中日関係の現状と将来

2001-2006年の間「中日間の政治・安保関係および国民感情・世論は「小泉政権の「72年体制」への真正面からの挑戦を受け「「国交正常化以来の最悪の状況」に陥った。その端的な表れが「相互間の首脳訪問が5年も中断したことである。

2006年10月8-9日「安倍晋三首相が「「破冰之旅」（氷を砕く旅）と呼ばれた訪中を行った。靖国参拝問題という最大の障害を処理した上での訪問であった。それにより「両国関係は「雪解けの時期に入った。2007年4月の温家宝総理の日本に対する「融氷之旅」（氷を溶解する旅）「同年12月の福田首相の中国に対する「迎春之旅」（春を迎える旅）の成果を踏まえ「2008年5月に胡錦濤主席の日本に対する「暖春之春」（暖かい春の旅）が行われた。2006年10月以来の雪解け期の成果の集大成となる訪問であった。

この訪問の最大の成果は「新しい『中日共同声明』を発表したことである。これは1972年の『日中共同声明』「1978年の『日中平和友好条約』「1998年の『日中共同宣言』に続く「中日間の第四の政治文書と位置づけられることになっている。

胡主席の訪問による中日関係の最大の前進は「互いに相手を脅威と見なすことをやめ「相手の発展趨勢の正当性を認め「共同の平和発展を歌い上げたことである。

胡主席の訪問により「中日関係は「歴史問題を中心テーマとした段階から「現実問題と将来の問題を中心とした段階へと転換した。相互間の相違にエネルギーを消耗した段階から「共通利益の拡大に注目する段階へと転換した。

これまでの中日間の雪解け過程は「まだ政府・政治主導型の「上からの」和解過程であった。国家利益のレベルにおける紛争の種は未だに厳存し「相互間の国民感情と世論の相手を見る目は「未だに厳しい。日本側のマスメディアは「胡主席の訪日の直前まで「「日本の国連安保理常任理事国入り」「海域境界線の問題」「北朝鮮の拉致問題」といった「古い三難問」と「毒餃

子問題」「チベット問題」「オリンピック問題」といった「新しい三難問」で、中国に大幅な外交的譲歩を迫るという戦術に打って出た。それに対して、中国の国民感情と世論は、日本の自衛隊機の四川震災支援を阻止し、中日間の海域の共同開発に反対を唱えた。いうまでもなく、国民感情レベルの和解なしには、中日間の真なる和解は実現しないだろう。

日中両国は、地理上の永遠の隣人であり、今や共にアジア太平洋地域の重要な大国である。長期的に安定した相互関係を保つことは、両国の共通利益にかなう。この点は、日中間の最も重要な「大同」である。「日中和して則ち兩利し、戦えば則ち兩傷す」とは、まさに百年以来の近現代史によってすでに裏付けられた真理である。

しかし、日中関係は、次のような要因から制約を受けざるをえない。

米国は、唯一の超大国として、東アジアにおいて強力なプレゼンスを維持している。今まで、米国の中日分離政策は、中日共通利益の実現度を大きく低下させてきた。ASEANや韓国の台頭などに見られる東アジア地域の政治・経済分野の多元化趨勢は、中日関係の重要度を相殺する作用を持つ。また、アジア太平洋地域における多国間経済・安保協力の進展に伴い、日中共通利益を、二国間のものから開放的なものへと転換させている。更に、日中両国の社会体制・価値観の相違も、両国共同利益の実現をある程度阻む要因となる。

「中国脅威論」と「日本脅威論」から脱出できるかどうかは、中日関係の行方に決め手となる。中国は、日本の政治大国化・軍事強国化をいかに見るか。日本は、中国の台頭をいかに受け止めるか。これは、中日関係が直面しているトップレベルの課題である。日中両国は、戦略対話と安保対話を進め、相互警戒を和らげ、相互信頼を深め、共通利益と合致するような政治的雰囲気を作り出す必要がある。日中両国は、疑心暗鬼から触発される「ゼロサム・ゲーム」に過大な物的・外交的資源を投入することを避け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

日中経済関係は、相互補完性が強く、競争性が低い。相互経済関係を大いに発展させていくことは、両国の共同利益と合致する。実際、日中間の経済的な相互依存度は益々高まっている。それと同時に、日中経済関係における諸問題点についても、摩擦を未然に防ぐ対策を打っていく必要があるだろう。

今後の日中関係において、文化伝統上の類似性は、引き続き相互関係を促進するプラス要因となろう。しかし、日中両国民レベルにおける文化上の相互理解は、大変不十分な状態にある。この点は、両国間の人的交流が余り行われていない時期は、さほど問題視されなかった。ところが、相互交流が日々盛んになる今日、そのマイナス面の影響が徐々に目立つようになった。そして、両国間の政治摩擦およびマスメディアの偏った報道は、相互理解を損ね、新たな誤解ないし対立感情を再生産している。

2001年11月21日、小泉首相の諮問機関「対外関係タスクフォース」は、『21世紀日本外交の基本戦略』という報告書を提出した。その報告は、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現在日本は)アヘン戦争以降150年の間出現することのなかった<強力な中国>に如何に向かい合うかという新しい問題」にぶつかり、「その中国と如何に向き合っていくかは、21世紀初頭の日本の対外関係において最も重要なテーマである。」これは、日本の主流エリート達が見た21世紀初頭の日中関係の基本的なイメージであると言ってよからう。

近頃の日本の対中反応をみると、中国の台頭を不可避な趨勢とみ現実的な見方が目立つ。その前提から、日米同盟プラス日中協商という、米中間である種のバランスを図っていくべきだと

いう提案は、日本のトップレベルのブレンの中から生まれている。例えば、五百旗頭真防衛大学校長は、「日米同盟と日中協商」の両立を進め、日米中首脳会談の開催を提唱している。2007年12月18日日本PHP総合研究所が発表したレポート「日本の対中総合戦略」にも、類似した提案が含まれている。福田首相の主要ブレンの一人である「五百旗頭構想」は、福田首相の「日米同盟とアジア外交の共鳴」と脈が繋がっている。これらは、1990年代半ば頃の状況とは、隔世の感がする。一方、筆者自身の予測とも合致している。

これからの日本の対中政策は、安倍晋三型の「取り込み」と「価値観外交」を交えた「両面作戦」(hedging)に戻るのか、それとも福田康夫型の「日米同盟とアジア外交の共鳴」を堅持するのか。

中国の方にも、同じ変化が見られてきた。中日関係に対して、より冷静で、自信に基づいた日本観と対日政策提言が増えている。その中には、国力の増強と民生の向上に伴うエリート層の自信感と知識の蓄積、および新しい段階にある中国の発展に対する機会と挑戦に対する熟考などが、政策思考に反映される面が見られる。ここ数年、中国の国際問題専門家の中で、最も顕著な変化は、米国の東アジアにおけるプレゼンスを、ただ否定的にみるのではなく、建設的な役割もあるという二面から評価する動きがあることである。中米両国の国際問題における協力の進展から生まれた信頼感が、その中に含まれているとあってよいだろう。そうした中米関係の枠組みから、日本の問題も総合的に見ると、いうより広い視野が開いている。

これらのものを総合してみると、日中関係は、冷戦後の16年を経て、新しい安定期に入りつつあり、新たな枠組みの形成期に入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わせる。

日本の政治は、「一寸先は闇」と言われる。福田政権は何時まで生き残るか。次の日本の首相は、中国に強硬な新保守派ではなかろうか。これらの懸念は、当然中国の専門家の中で共有されている。しかしながら、中国の発展は、もはや後戻りのない歴史的な流れであり、19世紀以来の日本の対中優等意識は崩れ始めており、日米中関係は良循環の可能性を見せ始めており、中韓日を中堅勢力とする東アジア統合化の潮流は確実に前へと進んでいる。そうしたなかで、日本の新保守派による日中関係への妨害作戦は、ますます難しくなっていくとみてよいのではなかろうか。

中国は、日本の政治保守化に冷静に対応するよう知識・心理・国力の面から準備してきた。今や、以前よりずっと合理的に日本に対処していくという自信と政策をもっているといえるだろう。

21世紀における日中関係の行方は、今後10余りの時期の両国関係の発展趨勢によってほぼ決められるだろう。また、この時期の日中関係、両国が「両強並立」から生まれる競合心をうまく乗り越え、安定した戦略関係に転換することができるかどうかによって左右されよう。

日中関係の行方は、言うまでもなく、北東アジア乃至は東アジアの国際秩序に多大な影響を及ぼす。この要因を含めて、中長期的な将来における東アジア秩序は、どのようなシナリオが予想できるだろうか。筆者は、「一」から「四」までの構造を提起したことがある。「一」とは、米国覇権を中心した安定的秩序が維持されるシナリオである。「二」とは、中米協力が旨く前進するシナリオである。「三」とは、中韓日提携による東アジア共同体作りの前進を意味する。「四」とは、中米日ロプラスその他のプレイヤーによる多極または無極時代の到来である。その中で、「三」のシナリオを実現させるために、中韓日三国は努力していくべきであろう。

## 일본의 동북아 평화론

박영준 (국방대학교)

### I. 문제의 제기

요한 갈통에 의한 선구적 정의 이후 국제정치학에서 평화란 소극적 평화, 즉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거나, 적극적 평화, 즉 단지 전쟁의 부재 뿐만 아니라 빈곤이나 무질서, 차별 등의 구조적 폭력이 부재한 상태를 가리키는 두가지 차원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sup>28)</sup>

이러한 평화상태를 어떻게 실현하느냐의 방법론을 둘러싸고 국제정치학은 다양한 논쟁을 벌여왔다. 국제정치의 단위로서 국가를 중시하고, 국가의 생존을 우선적 목표로 간주하는 현실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국가간의 대등한 국력의 보유, 즉 세력균형의 상태가 평화를 보장하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미어샤이며 같은 공격적 현실주의자들은 강대국은 본질적으로 세력팽창의 경향을 띠고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국제관계의 불안정성은 세계 제국의 등장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는 제국평화론을 주창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이나 시민단체와 같은 비국가적 요소들의 등장과 비군사적 수단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자유주의자들은 국제평화란 국가 내부 수준에서 이룩된 민주화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달성될 수 있다는 민주평화론을 주장하거나, 대국간의 평화공존 혹은 공동안보와 협력안보의 개념에 의한 국가들간의 다자간 협의체 구축 등에 의해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29)</sup>

평화상태에 대한 정의 및 평화 구축에의 방법론은 이같이 다양하지만, 개별 국가마다 처한 입장에 따라 평화상태에 대한 갈망이나 추구하고자 하는 평화의 유형, 혹은 평화를 성취하기 위한 정책론이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sup>30)</sup> 일본의 경우는 20세기 전반부의 시기까지 그 스스로가 일련의 전쟁을 도발하면서 국제평화를 교란한 장본인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1945년 이후에는 군국주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국내외적 제약의 요청 속에서 국가정책으로서 전쟁수단의 포기와 군대의 비보유를 규정한 소위 평화헌법을 제정하는 등 독특한 국가체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전쟁 도발의 원죄(原罪)를 갖고 있는 일본 식자들로서는 지역 및 국제질서 속에서 어떠한 평화상태를 어떠한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전후 일본

28)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29) 안전보장 이슈가 리얼리즘, 리버럴리즘, 글로벌리즘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한 일본내 논의에 대해서는 神谷萬丈 「安全保障の概念」, 防衛大學校安全保障學研究會 『安全保障學入門』 (亞紀書房, 2003) 참조.

30) 일본 평화연구자들 가운데 평화적 수단에 의해 평화를 성취하려는 평화학의 연구와 군사적 수단에 의해 안전보장을 추구하려는 안전보장연구를 구별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岡本三夫, 『平和学は訴える』 (法律文化社, 2005), p.12 참조.

의 국가적 지향점과 관련하여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냉전기와 탈냉전기에 일본에서 전개된 평화논쟁의 흐름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 지식인들이 전후 어떠한 평화정책론을 각 시기별로 제시하였는가, 그리고 그러한 평화론은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한가 등을 검토하기로 하겠다. 특히 본 연구는 일본 식자들을 자유주의 계열과 현실주의 계열로 구분하고 각 유파의 식자들이 어떠한 평화구상과 동북아 정책론을 제기해 왔는가를 비교하기로 한다. 이러한 연구가 일본이 지역 및 국제질서에서 어떠한 국가상을 모색해 왔는가 하는 점을 살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II. 일본인들의 지역 아이덴티티

평화에 대한 인식은 지역개념을 전제로 한다. 즉 자신의 국가가 어느 지역에 속해 있으며, 그 지역질서는 어떠한 특성과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평화구상이 배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국가가 어떤 지역에 속해있다고 생각해온 것일까. 흥미로운 것은 일본인들의 지역아이덴티티가 국제질서 속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위상에 따라 시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명치유신 이후 근대화를 추구하던 무렵의 일본인들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탈아론(脫亞論)에서 나타나듯이 자신들이 아시아를 벗어나 구미 국가들의 대열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근대화에 지체된 반개(半開) 상태의 조선이나 중국과 자신들을 동일시하여선 세계사의 흐름에 뒤떨어질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 워싱턴 및 런던 군축회의 체제에서 이탈하고 국제연맹에서 탈퇴한 이후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동양을 대표하여 서구 세계에 대항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소위 대동아공영권은 이러한 아이덴티티의 소산에 다름아니다.

1945년 이후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하면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패전국의 위치에 전락하였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서구 전승국들과 강화를 이루었으나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 전승국의 대열에 가담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더 이상 동양을 대표하는 위상도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하는 지역적 위상을 새롭게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56년 『문명의 생태사관』을 저술한 梅棹忠夫는 유라시아 중심부와 유라시아 주변부라는 구분을 제시하면서, 소련이나 중국 등 전체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해온 전통을 가진 유라시아 중심부와 달리, 일본은 봉건제의 경험을 가지면서 산업화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도달한 유라시아 주변부와 오히려 문명적 친화성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유라시아 주변부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이러한 이론에는 동아시아의 세계에 포함되기 보다는 서구 세계의 일원으로 자신을 동일시하고 싶어하는 전후 일본인의 자의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1950년대 말부터 활발한 논단활동을 벌인 현실주의 정치학자인 고사카 마사다카(高坂正堯)도 1964년에 쓰여진 글에서 일본은 동양도 아니고 서양도 아니며, 자기를 동일화할 대상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일본은 동양의 끝인 극동(極東)의 위상을 갖기 보다는 오히려 서양의 끝인 극서(極西)의 지역적 위상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sup>31)</sup> 이같이 1960년대 전반기의 시기까지 일본 식자들은 자신들

의 지역적 위상을 굳이 동아시아의 범주에 한정하지 않고, 유라시아 주변부로 파악하거나 극서(極西)로 파악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1960년대 전반기까지만 해도 일본은 자신들의 식민지 대상이었던 한반도나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정치 및 경제수준도 상이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지역적 정체성을 굳이 가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sup>32)</sup>

그러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정치경제관계가 활발해지고, 그 위에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1972년 중국과도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일본의 식자들은 자신들을 동아시아의 지역적 정체성 범주 속에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太田博은 일본은 북동아시아에 위치하는 해양국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고 인정하였다.<sup>33)</sup> 다카하라, 후지와라, 이종원 등 신세대 연구자들은 일본은 북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로 구성된 동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으며, 이들 지역과 공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하였다.<sup>34)</sup>

한편 일본내 식자들 가운데에는 일본을 서구세계와 아시아라는 이중적 아이덴티티를 가진 국가라는 인식도 강하다. 기타오카 신이치는 일본은 아시아의 일원이지만 아시아의 변경에 있으며,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가교적 위치, 이중적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sup>35)</sup>

그런데 일본이 이중적 아이덴티티가 있든, 아니면 동아시아의 일원으로 파악하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가 일본의 평화와 안보에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은 일본의 식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36)</sup> 기타오카는 일본이 이중적 아이덴티티를 활용하여 아시아의 안정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카하라 등도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제도적 근거가 빈약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본이 지역내 평화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나카 아키히코(田中明彦)도 동아시아 역내에는 일본과 같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신중세권에 위치할 정도로 발달된 국가, 한국이나 대만과 같이 신중세권에 근접한 국가, 북한이나 중국과 같이 아직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미발달한 국가들이 혼재되어 있으나, 그러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다양한 지역안정의 정책을 구사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37)</sup> 이하에서는 절을 바꾸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 일본의 식자들이 발신해온 구상과 정책의 내용들을 검토하기로 하겠다.

31) 高坂正堯 「海洋國家日本の構想」(中央公論,1964.9) 『海洋國家日本の構想』(中央公論社,1965), p.135.

32) 이러한 인식은 현대 일본 식자들에게도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坂本多加雄은 일본이 유라시아 중심부와 주변부의 대립 구조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坂本多加雄 「國家學のすすめ」(ちくま書房, 2001), pp.236-245.

33) 太田博, 「海洋國家日本の構想:世界秩序と地域秩序」伊藤憲一編 『海洋國家日本の構想:世界秩序と地域秩序』(日本国際フォーラム,2001),p.164. 그는 일본이 해양국가이기 때문에 세계의 이익에도 연결되는 개방된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일본의 평화와 번영에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34) 高原明生, 藤原歸一, 李鐘元 「東アジアの平和構想」金子勝・藤原歸一・山口二郎 編 『東アジアで生きよう』(岩波書店,2003),p.81.

35) 北岡伸一 『普通の國へ』(中央公論新社, 2000),pp.99-100.

36) 神谷萬丈은 일본내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는 보수적 지식인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지만, 동북아시아에 국한한 공동체 논의는 찾기 힘들다고 하였다. Matake Kamiya, 2008. 그러나 일본 식자들 간에 동북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평화 논의가 부재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37) 田中明彦 『新しい中世』(日本經濟新聞社,1996), 제10장 참조.

### Ⅲ. 자유주의자들의 평화구상과 동북아

#### 1. 평화구상

자유주의란 통상 국제관계를 바라봄에 있어 만국 대 만국의 투쟁상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역이나 인적 교류의 증대, 혹은 국제기구의 역할 등에 힘입어 국가간 협력관계가 전개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을 말한다. 자유주의자들은 국가 단위보다는 다국적 기업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국제기구 등의 역할을 중시하고, 국제정치의 수단으로서 군사력 보다는 다자간 협의 등의 방식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가진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유주의적 시각으로 국제질서를 인식해온 일본의 식자들은 전후 연면히 이어지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사카모토 요시카즈(坂本義和),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 이가라시 다케시(五十嵐武士), 후지와라 기이치(藤原歸一) 등의 논설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계열 식자들이 일반론적인 평화 개념에 대해,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평화정책론에 대해 무엇을 발언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950년대 미소 대립의 냉전구조 하에서 평화론을 모색해온 사카모토 요시카즈는 냉전구조의 어느 일방에 편입되는 것이 일본의 평화를 위해 무익한 것임을 주장한다.<sup>38)</sup> 이러한 선택은 미소의 전면 대결시 바로 전쟁에 말려드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사카모토는 1960년대 이후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그리고 1970년대 초반 미국과 중국에 의해서 연출된 대국간 평화공존, 즉 데탕트 체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는 평화의 구조가 “소격(疏隔)에 의한 평화”와 “연대(連帶)에 의한 평화”의 두 유형이 있음을 전제하고, 대국간 평화공존이 결과하는 것은 결국 정태적 평화, 즉 소격(疏隔)에 의한 평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sup>39)</sup> 대국간(大國間) 평화공존은 대국 우위의 국제질서를 고정화하는 것에 불과하며, 부국과 빈국, 대국과 소국간의 긴밀한 협력, 즉 연대에 의한 평화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국가가 과연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정치단위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국가는 결국 사회내 다수파를 대변하는 기체이며, 국제평화를 위해서는 소수파를 대변하는 행위자와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즉 민간 레벨에서의 정보와 인간 교류, 소위 국제(國際)가 아닌 민제(民際)의 관계 확대가 평화의 확산을 위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국제사회에서 무력분쟁이나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의 정치적 민주화, 공정한 경제발전, 자원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sup>40)</sup>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그의 생각은 칸트에 의해 주창된 민주평화론의 논리구조와 유사하다. 전후 독일과 일본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민주화된 정권은 전체주의 정권과 달리 분쟁이 폭발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공정한 경제발전 및 자원과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부국과 빈국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이나 NGO 등 새롭게 등장하는

38) 坂本義和 「中立日本の防衛構想」(世界1959.8) 『核時代の國際政治』(岩波書店、1967),pp.6-11.

39) 坂本義和 「轉換する平和像」(朝日新聞1972.1.1) 坂本義和 『平和：その現実と認識』(毎日新聞社,1976),p.45.

40) 坂本義和, 『相對化の時代』(岩波新書,1997),p.188.

행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냉전체제가 와해된 이후 평화담론을 개진하고 있는 일본 자유주의자들은, 그 이전 세대와 달리,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평화질서를 창출하는데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를 새롭게 전개하기 시작했다. 후나바시 요이치는 탈냉전과 시기를 같이하여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일본 자체의 글로벌 영향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인권보장, 환경보전, 평화창조, 평화 유지 등을 목적으로 국제사회의 신질서를 창출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sup>41)</sup> 이가라시 다케시도 전후 평화국가로서의 길을 일관되게 걸어온 일본이 탈냉전기의 국제질서 속에서는 적극적으로 평화를 창출한다는 목적을 갖고 유엔과 지역적 집단안전보장체제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42)</sup>

단 새로운 세대의 자유주의자들은, 이전 세대의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일본이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이 군사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 후나바시는 일본의 군사력은 전수방위에 머무르면서 외부에의 투사력을 가져서는 안되며, 유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가트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기술력이 중심이 된 시빌리언 파워에 기반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가라시도 유엔과 지역적 집단안전보장체제에 협력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하드웨어가 아닌 정세분석, 시설 정비, 의료 등 소프트웨어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자위대가 아닌 별도의 버란티어 조직을 만들어 유엔과 지역 안전보장체제에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법학자인 미즈시마 아사호(水島朝穂)도 일본이 21세기형 소국주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프간 전쟁에서의 급유, 이라크에 대한 자위대 파견 등의 군사적 관여를 일절 중지하고 상설의 국제지원조직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sup>43)</sup>

이같이 자유주의자들은 국제질서의 민주화, 국제질서내 불평등의 해소가 국제평화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일본으로서는 대국간의 대립 구조에 관여하지 않거나, 국력의 상승에 따라 적극적으로 평화질서를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국제질서에 관여하는 수단으로서 군사력의 사용은 극력 회피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경제력과 기술력에 입각한 국제사회 관여를 주장하고 있다.

## 2. 동북아 질서 구상

소격(疏隔)에 의한 평화보다 연대(連帶)에 의한 평화의 가치를 중시하는 일본 자유주의자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의 평화없이 일본의 안전은 있을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의 논의를 종합하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일본 자신의 책임 이행, 동북아 지역에 속한 국가들과의 양자 관계 개선, 그리고 동아시아 레벨에서의 새로운 질서 창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사카모토는 동아시아 평화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일본 자신이 이 지역 내에 불신을 초래해

41) 船橋洋一 「グローバル・シビルリアン・パワー:冷戦後の世界ビジョン」 『日本の對外構想:冷戦後のビジョンを書く』 (岩波新書, 1993), p.164.

42) 五十嵐武士 「平和國家という視點」 『日米關係と東アジア:歴史的な文脈と未來の構想』 (東京大學出版會, 1999), p.256.

43) 水島朝穂 "21世紀型の小國主義をめざせ:國際協力" 《朝日新聞》 2007.12.17.

선 안된다는 일본 책임론을 전개한다. 전후 일본은 침략전쟁을 절대 일으키지 않고, 핵전쟁을 절대 일으키지 않고, 군국주의를 절대 부정한다는 평화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내체제의 민주화와 대외관계에 있어 평화주의를 견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평화정책에 대한 불신이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사카모토는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 스스로가 이행해야 할 책무의 하나는 전수방위를 견지하고 비공격적 방위 원칙을 분명히 하는 등 군사적 역할을 늘리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44)</sup> 그리고 또 다른 책무의 하나는 전전(戰前)에 자행된 역사책임을 직시하고, 전쟁에 관여한 국가로서 사죄와 개인 보상을 명확히 행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사카모토는 한국, 중국 등 역내 국가와의 양자 관계 개선도 과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있다. 사카모토는 중일 국교정상화 이전 시기부터 중국은 하나라는 원칙을 일본이 수용하고, 대만이 본토와 일체라는 생각 하에 북경 정부를 승인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sup>45)</sup> 또한 한국에 대해서는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와 문화교류 추진, 불가침 협정 체결, 군비삭감, 일본의 대북 무역 확대 등이 남북한간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하면서,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sup>46)</sup>

사카모토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지역안전보장 조직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역내 국가간 평등한 질서를 만들기 위해 국가간 뿐만 아니라 시민레벨에서의 대등한 협력과 공생관계를 강화하여 국경을 넘어선 민주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sup>47)</sup> 사카모토에 의하면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역사적으로 보아 전통적 중화질서→구미 열강의 제국주의 질서→일본 제국주의 질서→팍스 아메리카나 질서를 겪어오면서 상호간에 수직적, 위계적인 질서만 경험해 왔다. 따라서 지역내 평화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각국 시민들간 민주적이고 평등한 공생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사카모토는 민주평화론의 관점에 입각하여 동아시아 개별 국가들의 민주화 확산이 지역 평화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사카모토에 의해 제시된 동북아 평화질서의 프레임웍은 후대의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계승되고 있다. 탈냉전기의 자유주의자들도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을 위한 조건으로서 일본의 책무 이행을 제기하고 있다. 후나바시도 일본 스스로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하면서 군사대국화를 방지하고, 나아가 자위대의 규모와 방위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군축을 주도해야 한다고 하였다.<sup>48)</sup> 이가라시도 평화국가로서 일본이 오히려 군축을 행하여 상대방의 군사적 위협을 줄이고 신뢰를 양성하는 것이 일본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sup>49)</sup> 이가라시는 일본이 과거 역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가

44) 1950년대에 쓰여진 글에서 그는 평화의 정책론으로서 일본내 미군기지 철폐, 미일동맹 이탈, 중립의 선언 등 까지 주장하였다. 즉 중립 국가들의 군대로 구성된 유엔 경찰군이 일본에 주둔하여 일본의 방위를 담당하고 자위대는 대폭 축소하여 유엔 경찰군의 보조부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坂本義和「中立日本の防衛構想」(世界1959.8)『核時代の國際政治』(岩波書店、1967),pp.21-25.

45) 坂本義和「日本外交への提言」(世界1965.4)『核時代の國際政治』(岩波書店、1967),pp.272-273.

46) 다만 사카모토는 북한을 배제한채 한국과 단독 국교정상화하는 것은 한국을 일본의 군사적 위성국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坂本義和「日本外交の思想的轉換」(世界1966.1)『核時代の國際政治』(岩波書店、1967),p.300.

47) 坂本義和,『相對化の時代』(岩波新書,1997),pp.211-212.

48) 船橋洋一「グローバルシブリアンパワー:冷戦後の世界ビジョン」『日本の對外構想:冷戦後のビジョンを書く』(岩波新書、1993), pp.195-196.

49) 五十嵐武士「平和國家という視點」『日米關係と東アジア:歴史的な文脈と未來の構想』(東京大學出版會,1999), p.263.

기금을 조성하여 보상조치를 행하는 것이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는 길이 된다고 하여, 역사문제에 대한 사카모토의 견해도 이어받고 있다. 50)

역내 국가들과 일본간의 양자 관계 개선 필요성도 후배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계승되고 있다. 다카하라 등은 한반도 평화구상을 위한 북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지역내 다국간 틀을 중층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일중관계를 대등한 파트너 기반 위에서 발전시킬 필요성도 환기시켰다. 51)

동아시아 지역레벨에서의 안보협의체 결성 구상도 후대 자유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후나바시는 미일중력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안전보장 커뮤니티 형성이 일본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였다. 오타 히로시(太田博)도 동아시아 전체가 어느 일국의 배타적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고 열려진 다원적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52) 강상중은 동아시아 평화 구축을 방해하는 것은 내셔널리즘의 요괴라고 지적하면서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구축을 통해 내셔널리즘을 확대시키지 않는 국내, 대외 구조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다극적 안전보장 틀을 구축할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경제면, 사회문화면, 정보면의 공동체 구축을 지향하는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구상을 제기하고 있다. 53) 高原明生 등은 동아시아 내에 지역안전보장구상을 발전시켜 미일동맹을 이에 재편성하고 나아가 가상적국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같이 자유주의자들은 동아시아 평화질서 구축을 위해 일본 스스로가 전수방위 및 군축을 통해 신뢰구축의 모범을 보여야 하고, 한국, 중국, 북한 등 역내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해야 하며, 동아시아 질서의 안전과 평등을 위한 다자간, 시민레벨간 협력과 교류의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IV. 현실주의자들의 국가이익개념과 동북아 질서구상

##### 1. 국가이익 개념

국제정치학에서 현실주의란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질서를 만인 대 만인의 투쟁상태라고 간주하는 사고의 경향을 말한다. 전쟁상태를 방불케 하는 국제질서의 현실 속에서 현실주의자들은 국가의 생존, 즉 주권의 확보를 가장 중요한 국가의 목표, 국가의 이익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차원에서는 군사력의 확보를, 국가간 차원에서는 여타 국가들과의 동맹 체결이나 세력균형의 유지 등을 국가안보를 위한 유효한 방책으로 제시한다.

50) 이가라시는 영토문제도 일국에 귀속할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공동개발하여 아시아 국가들과의 공동이익으로 전화하는 방안도 적극 제기하고 있다. 五十嵐武士「平和國家という視點」『日米關係と東アジア:歴史的な文脈と未來の構想』(東京大學出版會,1999), p.267.

51) 高原明生, 藤原歸一, 李鐘元「東アジアの平和構想」金子勝·藤原歸一·山口二郎 編『東アジアで生きよう』(岩波書店,2003),p.72.

52) 太田博, 「海洋國家日本の構想:世界秩序と地域秩序」伊藤憲一編『海洋國家日本の構想:世界秩序と地域秩序』(日本國際フォーラム,2001),p.165.

53) 姜尚中『東北アジア共同の家をめざして』(平凡社,2001)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직후 일본의 식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현실주의적 사고는 극히 드물었다. 대부분의 일본 식자들은 일본을 전쟁으로 몰고간 군사주의에 반기를 들며,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은 자유주의, 혹은 평화주의의 정책론에 강하게 경도되었던 것이다. 1960년대 초반 스스로 현실주의자임을 자처하며 국제정치에 관한 적극적 평론을 저술하기 시작한 고사카 마사다카(高坂正堯)도 “일본에 현실주의 사고가 존재하지 않고 현실주의에 기반하는 논의가 매우 적다” 고 진단할 정도였다. 54)

그러나 냉전기를 경험하면서, 특히 전쟁에 대한 피해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운 전후세대 연구자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일본의 식자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지배적 담론이었던 평화주의를 비판하면서 현실주의적 잣대로 국제사회를 분석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고사카 마사다카(高坂正堯)는 미일안보조약의 폐기와 일본의 중립화를 주장한 사카모토 요시카즈의 주장이 극동에서 성립되고 있는 세력균형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에 전개된 주한미군의 고립과 약체화를 가져와 오히려 일본의 안전보장에 위협을 안겨줄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55)

사카모토 다카오(坂本多加雄)도 전후 평화주의가 세계는 평화롭다고 전제하면서, 오히려 평화의 교란자는 일본이었다는 인식에 바탕하여 국제질서론과 외교정책론을 전개했다고 비판한다. 그가 보기에 국제질서는 “항상 無事한 場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든 有事가 있을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에 바탕하여 일본의 안전보장 제도와 외교정책론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6)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는 사카모토 요시카즈(坂本義和) 등이 지속적으로 개진한 평화주의란 실은 일본의 내셔널리즘이 절대적 평화주의의 모습을 띠고 나타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절대적 평화주의는 미일동맹 폐기와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미 내셔널리즘에 빠질 위험성을 갖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경향과도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한 비군사주의, 평화주의는 오히려 일본을 세계에서 고립시킬 것이며, 독자성 강화의 주장은 오히려 군사대국화를 진전시킬 위험성도 갖는다고 지적한다. 57)

기타오카는 그러한 오류를 갖는 평화주의의 함정에 함몰되기 보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변화를 직시하면서 일본의 국익을 재정의하고, 국익에 따른 외교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단 기타오카는 일본의 배타적인 국익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며, 여타 국가들과 공유된 개방적 이익이 일본의 국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58) 구체적으로 그는 ① 안전의 유지, ② 자유무역의 유지 강화, ③ 자유와 민주주의 진전, ④ 학술문화 및 교육의 국제교류 촉진 등이 일본의 국익이 된다고 제시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기타오카가 이러한 일본의 국익 요소들을 제시하면서, 현존의 국제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일본의 국익 달성에 가장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점이다. 즉 안전의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과 체결하고 있는 안전보장체제의 유지가 불가결하며, 자유무

54) 高坂正堯 「現實主義者の平和論」(中央公論,1963.1) 『海洋國家日本の構想』(中央公論社,1965),p.16.

55) 高坂正堯 「現實主義者の平和論」(中央公論,1963.1) 『海洋國家日本の構想』(中央公論社,1965),pp.2-4.

56) 坂本多加雄 「国家学のすすめ」(ちくま書房,2001),pp. 132-134.

57) 北岡伸一 『日米關係のリアリズム』(中公叢書,1991), p.56.

58) 北岡伸一, 『日本の自立:對米協調とアジア外交』(中央公論新社,2004), p.194.

역의 유지 강화를 위해서는 자원이 부족한 일본으로서 향유하고 있는 현존의 자유무역체제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기타오카와 같은 현실주의자들은 자위대의 헌법상 군대 인정, 자위대의 적정수준 강화, 그리고 미일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 등을 주장한다.<sup>59)</sup> 현행 평화헌법 제9조 2항은 군대 비보유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오카는 이 조항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위대를 무시한 비현실적 조항으로서 삭제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는 부분적 개헌론을 주장한다. 또한 자위대가 유사시 일본의 안전 확보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교전규칙이나 유사법제 등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본다. 21세기 접어들어 일본 정부가 유사법제 등을 제정하게 된 것은 이러한 현실주의자들의 정책제언에 영향받은 바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타오카 등은 전후 일본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 즉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지만 행사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일본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미일동맹이 유사시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주의자들 가운데에는 자위대의 위상 강화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식자들도 적지 않다. 다나카 아키히코의 경우에는 자위대의 역할 강화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수방위의 범위 안에 국한되어야 하며, 전수방위를 넘어서는 일본 독자의 군비강화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있기도 하다.<sup>60)</sup>

## 2. 동북아 질서 구상

냉전기 일본의 현실주의자들은 일본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지역이 중국, 한반도, 소련과 마주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지역에 존재하는 현재적, 혹은 잠재적 위협요인을 완화하고 배제하는 것이 현실주의자들의 주요한 정책목표가 되었다. 1960년대 초반 고사카 마사타카는 극동 지역의 긴장완화를 위한 몇가지 방책으로서, ①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②한반도 병력 삭감 및 일종의 불가침 협정 체결, ③일본의 비핵무장 선언, ④당사자간에 불가침 조약 체결하는 로카르노 방식 고려, 즉 일본, 미국, 소련, 중국 등 주요 동북아시아 국가들간 집단불가침조약 체결 및 평화보장체제 구축, ⑤한반도 및 극동에서의 미군 병력 철수 등을 들고 있다.<sup>61)</sup> 그에 따르면 이 지역 내에서 잠재적 불안요소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중국과 일본간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고, 한반도에 대해서는 남북 상호간 불가침 협정 체결 및 미군 병력 철수를 추진하고, 역내 차원에서 집단불가침 조약 체결 및 평화보장체제 구축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함에 의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상태가 확보될 수 있고, 이것이 일본의 안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고사카의 뒤를 잇는 전후세대 현실주의자들도 동북아 지역의 평화질서 정착이 일본의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견지에서 일본 국내 차원에서부터 동

59) 北岡伸一 「國家の辯證:21世紀日本の國家と政治」 『アステイオン』 55 (2001)

60) 田中明彦 『新しい中世』 (日本經濟新聞社, 1996), p.256.

61) 高坂正堯 「現實主義者の平和論」 (中央公論, 1963.1) 『海洋國家日本の構想』 (中央公論社, 1965), pp.17-19.

시아 차원에 걸쳐 적극적인 평화질서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이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신뢰형성을 위해 역사문제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요청한 바 있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현실주의자들도 동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기타오카는 아시아 국가들이 가진 대일 불신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이 자행한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에 대해 명확한 반성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up>62)</sup> 기타오카는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도 타국 교과서와 비교한 상호비판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sup>63)</sup> 이같이 본다면 자유주의자나 현실주의자나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사 문제에 대한 명확한 사죄 표명과 여타 국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역사교육의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고사카와 마찬가지로 전후 현실주의자들도 일본의 안보와 국가이익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세력은 동북아의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기타오카는 일본 주변에서 위기의 최대 원천은 한반도와 중국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북한은 세계사 가운데에서도 이상한 국가이며, 중국은 국제협조와 상호의존의 관념이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아 불안요소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북한이 계속하여 벼랑끝 외교를 전개하고, 중국이 힘의 외교를 버리지 못하는 한 동아시아 질서는 안정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sup>64)</sup>

이러한 위협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그는 북한을 미사일수출통제레짐(MTCR)에 가입시켜 미사일 관련 기술이나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하게 하고, 미사일 개발 자체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의 군비확장과 정치적 불안정화 위험성에 대비하여 중국의 팽창에 대해서는 일본으로서도 세력균형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억제하고 중국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 보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할해야 한다고 보았다.<sup>65)</sup> 단 북한을 움직이고 중국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일본은 갖고 있지 못하고, 미국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미일안전보장체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한국과의 협력도 불가결하다고 보았다.<sup>66)</sup> 그는 미일안전보장체제와 동아시아 안보협력기구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유지와 안전에 있어 일종의 공공재라고 보았다.

현실주의라기 보다는 국가주의에 가까운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카모토 다카오(坂本多加雄)는 일본이 유라시아 중심부 국가들인 중국이나 소련 보다는 유라시아 주변부인 동남아시아나 서구 국가들과 문화적, 역사적 친화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전체주의의 경향을 갖는 유라시아 중심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만주사변이나 중일전쟁 시에 그러

62) 北岡伸一『日米關係のリアリズム』(中公叢書,1991),p.177. 그는 2001년에 쓰여진 글에서도 “아시아 국가들과의 악화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솔직히 책임을 인정하고 위엄을 갖고 사죄”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北岡伸一「國家の辯證:21世紀日本の國家と政治」『アステイオン』55 (2001).

63) 이러한 입장을 지닌 그가 일중 정상간에 합의되어 조직된 일중 역사공동연구 모임의 일본측 좌장을 맡은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64) 北岡伸一『普のへ』中央論新社,2000),pp.303-304.

65) 北岡伸一「國家の辯證:21世紀日本の國家と政治」『アステイオン』55 (2001).

66) 기타오카는 1990년대 초반에 쓰여진 글에서는 한국을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미성숙 등의 이유로 인해 저평가하고 있으나, 90년대 후반 이후에 쓰여진 글에서는 일본과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로 간주하는 변화를 보여준다. 이에 대해서는 박영준, 「탈냉전기 일본의 대국구상: 보통국가론과 평화국가론의 국가구상 비교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제23호(현대일본학회, 2006년 여름)을 참조.

했던 것처럼 군사원정은 피해야 할 것이며, 깊은 정치적 관계를 갖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본으로서 당면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국내 차원에서 기본적인 방위력을 확립함과 동시에 유라시아 주변부인 동남아나 대만, 그리고 미국과의 연대 관계 강화라고 하고 있다.<sup>67)</sup>

다나카 아키히코는 탈냉전기의 국제질서가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신중세권, 빈곤과 전체체제를 벗어나지 못한 혼돈권, 그리고 국가간 경쟁과 세력균형의 논리가 남아있는 근대권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일본은 신중세권의 범주에 속하나, 한국과 대만은 신중세권과 근대권의 경계, 중국과 북한은 근대권에 속한 국가로 분류된다. <sup>68)</sup> 그에게 일본의 동북아시아 질서구상이란 신중세권에 속한 국가가 근대권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다름아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근대권에 속한 동남아 국가들 및 중국, 북한에 대해 이 지역에 남아있는 영토분쟁, 분단과 분열, 군비경쟁의 양상 등이 지역평화를 위협하는 것을 저지하면서, 이 지역이 평화롭게 신중세권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한 전환과정에서 일본은 국민들의 자유와 안전을 근대권의 혼란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력균형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북한이 군사행동을 도발하지 않도록 한반도에서 군사태세를 강구하는 것을 측면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중국이 이 지역 내의 패권국이 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일안전보장체제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하였다. <sup>69)</sup> 나아가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아시아 지역포럼 같은 다각적 안전보장 대화의 창설과 가동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현실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과 비교하면, 중국과 북한을 잠재적 위협으로 제기하면서 이에 대비하는 국내, 국제 차원의 대책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런데 현실주의자들도, 자유주의자들이 제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북아 지역 내에서 일본과 여타 국가들간의 양자 대화, 그리고 다자간 차원의 안보대화 확대 등을 통한 지역내 평화와 안정질서 유지에 상당히 적극적인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주의자들은 이같은 동북아 지역의 관계 개선과 평화질서 구축은 결국 일본의 국가이익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하여, 국익우선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 V. 맺음말

일본 식자들 사이에서 자유주의(평화주의)와 현실주의의 간극은, 역사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미일동맹, 그리고 일본의 외교정책에 이르기까지 상호 좁혀질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평화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평화구상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것임에 반해 현실주의의 외교정책론이나 국제질서 구상은 군사력 수단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양자의 담론 간에

67) 坂本多加雄 2001, 246-47.

68) 다만 다나카 아키히코는 필자와의 토론 과정에서 21세기 이후 한국이 신중세권의 영역에 진입하였다고 견해를 수정한 바 있다. 2006년 5월12일 서울대 일본학연구소 개소 기념 심포지움에서.

69) 다나카 아키히코가 이러한 입장에 기반하여 일본 정부가 승인한 2004년 방위계획대강 기초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을 부각시키려 하였다.<sup>70)</sup> 이상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일본의 평화구상과 동북아 정책론에 관한 자유주의와 현실주의의 담론 사이에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자유주의는 국제질서의 주요 행위자로서 국가만이 아닌 시민 개인이나 NGO 등의 비국가 행위자를 중시한다. 이에 반해 현실주의자들은 외교정책의 주체를 국가로서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하는 차이점을 보여준다.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이익의 개념을 그다지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현실주의자들은 국가이익의 정의에서부터 외교정책론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있어 특정 국가를 강한 위협의 대상으로 거론하기 보다는 일본의 전후 책임 반성과 일본 군사정책의 제약을 오히려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주의자들은 일본 외부의 세계에서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위협요인을 발견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들은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경계를 가르는 경우 통상 거론되는 것으로서, 일본 국제정치학 내에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축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실제적인 동북아 정책론과 평화구상으로 들어갈 경우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간에 정책의 간극이 좁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주의의 담론들이 아시아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일본의 역사문제에 대한 반성과 사죄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현실주의자들 가운데에서도 유사한 주장이 발견된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두가지 담론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자위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해 전수방위의 준수를 요청하는 점은 양 담론이 일치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확보를 위해 다자간 안보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점도 일치한다. 미일동맹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질서 유지를 위해 기능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양 담론은 점차 수렴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요컨대 동북아 평화질서 구상에 대해 양 담론은 초기에는 명확한 경계선을 갖고 있었으나, 점차 외교정책론이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실주의 담론의 대표적 대변자인 기타오카 신이치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현실주의 정책론도 실은 이상주의적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실현수단으로 소프트파워에 의존할 수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sup>71)</sup> 이같은 현실주의와 평화주의의 수렴화 경향이 현재 일본의 동북아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는 향후 검토해야 할 과제의 하나이다.

70) 岡本三夫, 『平和学は訴える』 (法律文化社, 2005) 참조.

71) 2003년 11월14일, 동경대 법학부에서 기타오카 교수와 가진 인터뷰에서.

## <참고문헌>

- 五百旗頭眞「國際環境と日本の選擇」有賀貞・宇野重昭・木戸藤・山本吉宣・渡邊昭夫編『講座國際政治4:日本の外交』(東京大學出版會 `1989).
- 五百旗頭眞,「日米中 `連携の時代」朝日新聞 07.1.6
- 五十嵐武士「平和國家と日本型外交」『日米關係と東アジア:歴史的な文脈と未來の構想』(東京大學出版會,1999)
- 五十嵐武士「平和國家という視點」『日米關係と東アジア:歴史的な文脈と未來の構想』(東京大學出版會,1999)
- 五十嵐武士「日米安保體制の再定義と東アジア」『日米關係と東アジア:歴史的な文脈と未來の構想』(東京大學出版會,1999)
- 岡本三夫,『平和學は訴える』(法律文化社 `2005)
- 太田博,「海洋國家日本の構想:世界秩序と地域秩序」伊藤憲一編『海洋國家日本の構想:世界秩序と地域秩序』(日本國際フォーラム,2001)
- 神谷萬丈「安全保障の概念」,防衛大學校安全保障學研究會『安全保障學入門』(亞紀書房,2003)
- 菅英輝「冷戰と日米安保體制:安保改定交渉から沖繩返還交渉まで」『比較社會文化』第九號(九州大學 `2003)
- 姜尚中『東北アジア共同の家をめざして』(平凡社 `2001)
- 北岡伸一『日米關係のリアリズム』(中公叢書,1991)
- 北岡伸一「孤立の日本:日米安保の擴大と深化」『外交フォーラム』1996年4월
- 北岡伸一「安保論議の閉塞狀況を打開せよ」『This is 讀賣』1996年11월
- 北岡伸一「與黨と野黨の政治力學:新制度の總括と政黨政治の行方」『中央公論』1997年1월
- 北岡伸一「安保連合の幻想」『This is 讀賣』1997年8월
- 北岡伸一「まえがき」『普通の國へ』(中央公論新社 `2000)
- 北岡伸一「國家の辯證:21世紀日本の國家と政治」『アステイオン』55 (2001)
- 北岡伸一,『日本の自立:對米協調とアジア外交』(中央公論新社, 2004)
- 高坂正堯「現實主義者の平和論」(中央公論,1963.1) 『海洋國家日本の構想』(中央公論社,1965)
- 高坂正堯「海洋國家日本の構想」(中央公論,1964.9) 『海洋國家日本の構想』(中央公論社,1965)
- 坂本多加雄 「國家學のすすめ」(ちくま書房 `2001)
- 坂本義和「中立日本の防衛構想」(世界1959.8)『核時代の國際政治』(岩波書店 `1967)
- 坂本義和「日本外交への提言」(世界1965.4)『核時代の國際政治』(岩波書店 `1967)
- 坂本義和「日本外交の思想的轉換」(世界1966.1)『核時代の國際政治』(岩波書店 `1967)
- 坂本義和「轉換する平和像」坂本義和『平和:その現實と認識』(毎日新聞社,1976)
- 坂本義和,『相對化の時代』(岩波新書,1997)
- 高原明生,藤原歸一,李鐘元「東アジアの平和構想」金子勝・藤原歸一・山口二郎 編『東ア

ジアで生きよう』(岩波書店,2003)

水島朝穂 " 21世紀型の小国主義をめざせ:国際協力 " (朝日07.12.17)

船橋洋一 『冷戦後:同時代の現場で考える』(岩波新書 `1991)

船橋洋一 『日本の前途:冷戦後のビジョンを書く』(岩波新書 `1993)

船橋洋一 『同盟漂流』(岩波書店,1997)

船橋洋一 『同盟を考える:國々の生き方』(岩波新書, 1998)

田中明彦 『新しい中世:21世紀の世界システム』(日本経済新聞社, 1996)

渡辺昭夫 `『アジア・太平洋の国際関係と日本』(東京大學出版會 `1992)

현대일본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 국제학술회의



現代日本學會